

세계질서 재편과 동북아 해양안보 영향

Reshaping the World Order and its Implications
for Maritime Security in Northeast Asia

박영길 · 민영훈 · 정현욱 · 김주형 · 김지혜 · 김소연 · 김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저자	박영길, 민영훈, 정현욱, 김주형, 김지혜, 김소연, 김민			
내부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민영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정현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김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김지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김소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김 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연구원

연구기간	2022. 5. 1. ~ 2023. 2. 28.
------	----------------------------

보고서 집필내역				
연구책임자	박영길 제1장, 제2장 제4절, 제3장 제1절, 제4장			
내부연구진	민영훈	제3장 제3절 일부		
	정현욱	제2장 제2절, 제3장 제2절 일부		
	김주형	제2장 제3절, 제3장 제2절 일부		
	김지혜	제2장 제1절, 제3장 제4절		
	김소연	제3장 제2절 일부, 제3절 일부		
	김 민	제3장 제3절 일부		

발간사

오늘날 세계질서는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동북아 해양질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22년 2월 발발한 후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세계질서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신냉전'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진영 간 대립으로 심화되면서도, '구냉전'과는 달리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타 진영과도 타협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맞서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결속을 강화하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특히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세력 범위를 동남아와 태평양 너머로 확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세계질서 재편이 동북아 해양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한 기초적 연구이다. 다만 여기서 '해양안보'의 개념은 전통적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해양영토와 경제문제까지 포함하는 확장적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 동안 미·중 갈등과 경쟁,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와 같은 미국과 중국의 대외 전략 및 정책,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해양전략들, 대만해협 위기와 같은 지역 문제, 동중국해 해양영토 문제와 같은 특정 이슈 등에 관해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 보고서는 미·중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과 그 특징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후, 이러한 질서가 동북아의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세계질서 재편 가운데 한국은 최대한의 국익확보를 위해 어떤 입장과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해양력 확장에 맞서 어떻게 우리의 해양권익을 확보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보고서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찾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새로운 관점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년 4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 종 덕

목차

정책제안 _i

요약 _iii

Executive Summary _ix

01	서론 _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검토	8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02	미·중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 _11	
	제1절 패권의 개념과 패권국가의 전이	11
	1. 패권의 개념과 패권국의 특징	11
	2. 패권국가 전이 과정의 특징	15
	제2절 중국의 해양국가 전환과 신흥 패권국으로의 부상	19
	1. 중국의 군사력 신장과 해양력 팽창	19
	2. 시진핑 정부의 해양력 강화 정책	27
	3. 중국의 패권국가로서의 특징	40
	제3절 미국의 대중 억제정책	44
	1.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정책	44
	2.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	46
	3. 미국의 대중 정책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이해관계	53

제4절 미·중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의 특징	54
1. 탈세계화·신냉전 시기 진입	54
2. 전통적 의미의 패권적 지위 약화와 파트너 역할 증대	56
3. 동아시아 역내 무력충돌 가능성 증가	58

03 세계질서 재편의 동북아 해양안보에 대한 영향_59

제1절 동북아 해양의 공간적 범위와 해양안보 대상 영역	59
1. 동북아 해양의 공간적 범위	59
2. 해양안보의 대상 영역	60
제2절 동북아 해양의 군사안보에 대한 영향	61
1. 미·중·일·한의 군사력 현황과 강화 계획	61
2. 중국의 해양력 확장과 동북아 해양안보	81
제3절 동북아 해양영토 갈등과 분쟁에 대한 영향	83
1. 도서 영유권 갈등과 분쟁	83
2. 해양관할권 갈등과 분쟁	100
제4절 동북아 해상교통로 안보에 미치는 영향	109
1. 패권과 해상교통로 안보	109
2. 동아시아 주요 해상교통로와 안보 위협	111
3. 패권 경쟁이 해상교통로 안보에 미치는 영향	114
3. 소결	118

04 결론_12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21
제2절 동북아 해양안보에 대한 전망과 과제	122

표 목차

〈표 2-1〉 패권적 힘의 구성요소와 특징	13
〈표 2-2〉 지난 500년간 신흥 세력과 지배 세력	18
〈표 2-3〉 2021년 중국 및 주변국 공식 국방비 예산 비교	20
〈표 2-4〉 류화칭의 중국 해군 3단계 발전 전략	24
〈표 2-5〉 중국의 주요 해군사	26
〈표 2-6〉 중국 함정 증강 추이	31
〈표 2-7〉 중·러의 해상 연합 군사훈련 현황(2012-2022)	35
〈표 3-1〉 미 해군력 현 규모 및 장기 건조 계획	64
〈표 3-2〉 중국과 미국의 해군 전투함 보유 현황 및 전망	66
〈표 3-3〉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사일 전력 현황	66
〈표 3-4〉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전력 강화 계획	67
〈표 3-5〉 중국 해경 선박 보유 현황(2005-2020)	68
〈표 3-6〉 중국의 해상민병대 규모 추정	69
〈표 3-7〉 일본 해상자위대 보유 전력 현황	70
〈표 3-8〉 일본 항공자위대 보유 전력 현황	70
〈표 3-9〉 일본 방위비 추이	71
〈표 3-10〉 방위력 정비에 따른 사업비 내역	75
〈표 3-11〉 대한민국 해군 보유 전력 현황	77
〈표 3-12〉 대한민국 공군 군사력 현황	78
〈표 3-13〉 대한민국 국방비 증가 추이	78
〈표 3-14〉 「'23~'27 국방중기계획」 재원	79
〈표 3-15〉 중국 해경선의 조어도 주변 접속수역 진입 현황	85
〈표 3-16〉 해군 관할해역에 진입한 중국 군함의 출현 횟수	101
〈표 3-17〉 이어도 주변 수역에 나타난 중국 관공선의 출현 횟수	102
〈표 3-18〉 동아시아 주요 항로와 위협 요인	113
〈표 3-19〉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 중국이 조차한 항만	115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전개 과정	7
〈그림 2-1〉 중국의 국방비 예산 증가 추이	21
〈그림 2-2〉 중국의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	24
〈그림 2-3〉 아프리카 지부티와 캄보디아 레암 기지 위치	33
〈그림 2-4〉 중국 해경 배수량 1,000톤 이상 대형함정 수	37
〈그림 2-5〉 미·중 연도별 해군함정 수 변화 추이	50
〈그림 2-6〉 세계 상품과 서비스 수출	55
〈그림 3-1〉 일본과 주변국 및 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71
〈그림 3-2〉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80
〈그림 3-3〉 조어도 위치	84
〈그림 3-4〉 쿠릴열도와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93
〈그림 3-5〉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 지역(북방영토 문제 지역)	96
〈그림 3-6〉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설치된 선란 01호	105
〈그림 3-7〉 중국 해양관측부표 발견 현황(2022.8.24. 기준)	106
〈그림 3-8〉 2022년 세계 주요 항만	111
〈그림 3-9〉 동아시아 선박교통 집중도	112
〈그림 3-10〉 태국 크라 운하 개념	116

정책제안

■ 분석 내용 및 방법

1. 본 연구는 패권국가의 관점에서 미·중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과 그것이 동북아 해양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미·중 중심으로 재편된 세계질서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패권 또는 패권국의 개념과 패권국의 전이,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새롭게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중국의 해양국가로의 전환과 적극적·팽창적인 정책을 검토하였다.
2. 연구 수행을 위해 미국, 중국 등 국가들의 관련 정책, 법령 및 전략보고서 등의 일차자료와, 이러한 자료와 현실을 기초로 미·중 관계를 분석한 논문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자문해서 연구의 방향을 잡고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였다. 특히 전통적 해양안보 관련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및 서면 자문을 통해 군사안보적 차원의 미·중 경쟁과 그것이 동북아 해양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는 역사적 관점의 통시적 연구를 일부 활용하였다.
3.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중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에 대한 의미와 특징을 분석·정리한다는 점에서 개별 사안 중심의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그동안의 연구와 미국과 중국의 최근 정책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성도 확보한다. 또한, 그러한 세계질서 재편이

동북아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도모하였다.

■ 정책제안(전망)

1. 동북아 해양의 군사안보에 관한 전망

탈세계화에 맞추어 미·중 간의 진영 다툼이 심해지는 가운데 소다자 체제가 당분간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2022년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쿼드, 인도-태평양 전략, AUKUS의 내실을 추구하면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결속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2. 동북아 해양영토 갈등과 분쟁에 대한 영향 전망

동중국해와 서해에서는 특히 중국으로 인해 주변국들과 갈등과 분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갈등과 경쟁이 직접적으로 해양영토 갈등과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항의한 바가 있고, 남중국해 상공에서 미국 초계기에 대한 중국 전투기의 초근접 비행과 미 군함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중국의 방해와 항의 등의 갈등 양상이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3. 동북아 해상교통로에 대한 영향 전망

동북아 해상교통로에 대한 영향이다. 해상교통로는 동북아 국가들의 에너지 자원과 상품의 주된 수송로이므로,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무력분쟁 등으로 인해 해상봉쇄가 이루어질 경우 국가경제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제3장 제4절에서 살펴본 점-선-면 확보 경쟁 중에서 해상교통로는 ‘선’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선을 확보하기 위해선 점(거점 항구들)과 면(남중국해, 동중국해, 태평양 등)에 대한 지배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경쟁과 마찰이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요 약

세계질서 재편과 동북아 해양안보 영향

박영길 · 민영훈 · 정현욱 · 김주형 · 김지혜 · 김소연 · 김민

1. 연구의 목적

-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질서가 동북아 해양안보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검토
- 미·중으로 대표되는 경쟁과 갈등의 상황이 동북아에서의 전통적 의미의 해양안보, 해운경제 그리고 해양관할권 문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의 방법

- 미국, 중국 등 국가들의 관련 정책, 법령 및 전략보고서 등의 일차자료와 이러한 자료와 현실을 기초로 미·중 관계를 분석한 논문에 대한 검토
-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자문해서 연구의 방향을 잡고 부족한 내용을 보충. 특히 전통적 해양안보 관련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및 서면 자문을

통해 군사안보적 차원의 미·중 경쟁과 그것이 동북아 해양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비교, 한국과 일본의 방위력 비교 등 비교법적 연구 수행
- 단계별로 보면 1단계로 선행연구 검토, 2단계로 세계질서 재편의 내용과 특징 검토, 3단계로 동북아 해양안보에 대한 영향을 검토

2) 연구의 특징

- 미·중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에 대한 의미와 특징을 분석·정리한다는 점에서 개별 사안 중심의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짐
- 그러한 세계질서 재편이 동북아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여기서 말하는 해양안보는 광의적 의미로 전통적 군사안보와 더불어 해양경제안보, 해양영토 안보를 포함함
- 미·중 간의 갈등과 경쟁이 동북아 해양영토 및 해양 거버넌스, 그리고 해상교통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1) 미·중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의 특징

가. 중국의 해양국가 전환과 신흥 패권국으로의 부상

- 2000년대 이후 중국은 급성장한 경제 발전을 토대로 군사력, 특히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해양국가로 전환

- 중국의 해양력 발전은 특히 시진핑 정부에서 두드러짐
- 중국의 패권주의적 특징은 권위주의 체제, 경제의 무기화, 힘에 기반한 팽창적인 해양정책을 들 수 있음

나. 미국의 대중 억제정책

- 미국의 대중 억제정책은 트럼프 정부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현 바이든 정부에서도 기조는 유지되고 있음
-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인도-태평양 전략, AUKUS, 쿼드 등을 통해 구현되는데,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다. 미·중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의 특징

- 탈세계화와 탈세계화의 주요 현상으로 나타나는 신냉전 시기 진입
- 전통적 의미의 패권적 지위 약화와 동맹·파트너의 역할 증대
- 동아시아 역내 무력충돌 가능성 증가

(2) 세계질서 재편의 동북아 해양안보에 대한 영향

가. 동북아 군사안보에 대한 영향

- 중국,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의 군사력 강화 경쟁 가속
- 중국의 해양력 확장과 동북아 해양안보 불안 가중

나. 동북아 해양영토 갈등과 분쟁에 대한 영향

- 도서 영유권 갈등과 분쟁에 대한 영향
- 중·일 간 조어도 분쟁을 둘러싼 긴장 점증하고 있음

- 특히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경 세력의 확대와 대만해협의 군사 긴장 고조는 조어도 제도 분쟁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표〉 중국 해경선의 조어도 주변 접속수역 진입 현황

단위: 연, 척, 일

구분	2021	2020	2019	2018	2017
진입척수	1,222	1,161	1,097	607	696
진입일수	332	333	282	158	171

자료: 한국국방연구원(2022b), p. 5 참고하여 저자 편집

■ 해양관할권 갈등 요인들 증가

- 갈등이 고조되었던 남중국해의 분쟁 상황이 동중국해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한국의 관할해역 내 중국의 해상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다. 동북아 해상교통로 안보에 미치는 영향

- 2010년대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해양력을 팽창하려고 하는 중국과 아태 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 간 충돌하면서 동아시아의 해상교통로 안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은 주요 해상교통로를 따라 주요 거점항만에 투자하여 주요 거점항만 중심으로 해상 통제권과 영향력을 확보하는 차항출해(借港出海: 외국 항구를 빌려 바다로 진출) 전략을 추진

2)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화 활동

(1) 정책 대안 제시 내용

- 해양 자강력 확보를 통해 한반도 주변에서의 갈등과 분쟁 상황, 한국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전략 추구 필요성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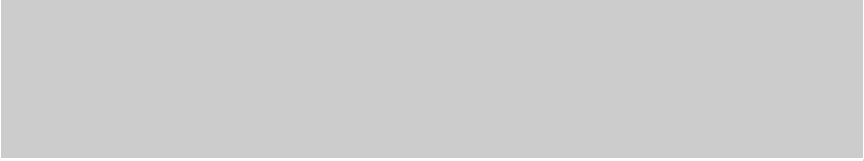
- 한국은 중국의 팽창주의적 해양정책에 대해 국제법을 기반으로 단호히 대응하는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해양경계획정과 새로운 잠정약정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방안 제시
- 동중국해에서의 갈등과 경쟁 심화는 해상교통로뿐만 아니라 해양 군사 안보와 해양관할권 확보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안보와 해양 영토 이슈를 포함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대책 수립 필요성 제시

(2) 정책화 활동

- 해양법 및 해양안보 전문가 세미나 실시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중국의 해양국가로의 전환 및 해양력 팽창과 관련한 정책 자료로 활용
-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문제와 해양영토 갈등 문제에 관한 통합적 연구 및 정책 추진



EXECUTIVE SUMMARY

Reshaping the World Order and its Implications for Maritime Security in Northeast Asia

Young Kil Park · Young Hun Min · Hyunwook Cheng · Ju-hyung Kim
· Jee-Hye Kim · So-Yeon Kim · Min Kim

1. Purpose

- To examine what kind of implications a currently reshaping world order centering on the US and China has on maritime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how it impacts the region
- To investigate the impact that competition and conflict largely represented by the US and China have on the traditional sense of maritime security, maritime economy and maritime jurisdiction issues in Northeast Asia

2. Methodology and Features

1) Methodology

- This study reviewed the primary data on relevant policies, laws and strategic reports on China and the US, while studying journals on analyzing the US and China relationship reflecting the primary data and the reality.
- The direction of the research was established and supplemented through consultations with a variety of experts.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d the US and China competition at the military and security level through consultations with traditional maritime security related experts and written consultations, and examined the implications to the maritime security in Northeast Asia.
- A comparative legal study was carried out on the military power between the US and China as well as the defense power between ROK and Japan.
- Preceding studies were reviewed as the first step of the study, followed by the review of specific contents and features of the world order reorganization and the third step was to examine the impact on maritime security in Northeast Asia.

2) Features

- This study differentiates itself from existing studies as it analyses and summarizes the implic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US and China-centered world order restructuring instead of focusing on individual cases.
- This study primarily concentrates on the impact of reshaping the world order on maritime security in Northeast Asia. The maritime security in this study represents broad implications, encompassing maritime economic security and maritime territorial security as well as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impact of conflict and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on maritime territory, ocean governance and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in Northeast Asia.

3. Result

1) Summary

(1)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US and China-centered World Order Reshuffle

- A. China's transition to a maritime power and rise as an emerging hegemonic state

-
- Since the 2000s, China has transformed into a maritime power by strengthening its military power, particularly its naval forces, backed up by its rapid economic development
 - The development of China's military power is a distinctive feature especially under Xi Jinping administration.
 - China's hegemonic characteristics include authoritarian regime, weaponization of economy, and expansive maritime policy based on strength.

B. The US deterrence policy against China

- The US deterrence policies against China have been in full swing since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such stance has continued under the current Biden administration.
- These US policies are implemented through the Indo-Pacific Strategy, AUKUS, QUAD, and others, which emphasize collabor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C. Characteristics of the US and China-centered world order reshuffle

- Deglobalization and entering the era of New Cold War, which represents deglobalization as key phenomena
- Declining the traditional sense of hegemony and growing role of allies and partners
- Rising possibility of armed conflict within East Asia

(2) Implications of World Order Reshuffle on Maritime Security in Northeast Asia

A. Impact on military security in Northeast Asia

- Regional states such as China and Japan are accelerating competition to strengthen their military power.
- China's military power has expanded while rising insecurity surrounding maritime security in Northeast Asia has aggravated.

B. Implications of maritime territorial conflicts and disputes in Northeast Asia

- Impact on conflicts and disputes over island sovereignty rights
 - Sino-Japanese tensions are growing surrounding disputes over the Senkaku/Diaoyu Islands
 - In particular, China's growing presence of maritime policy in East China Sea and escalating military tensions in the Taiwan Strait are adding uncertainty to the dispute over the Senkaku/Diaoyu Islands.
- Increasing factors for maritime jurisdictional conflicts
 - Heightened conflicts in the South China Sea may escalate in the East China Sea with China's maritime activities increasing particularly in waters under South Korea's jurisdiction.

C. Impact on the security of northeast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 Since the 2010s, the conflict between China, which seeks to expand its maritime power in North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intends to maintain its hegemony in the Asia-Pacific region, has affected the security of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in East Asia.

- Since the 2010s, the conflict between China, which seeks to expand its maritime power in North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intends to maintain its hegemony in the Asia-Pacific region, has affected the security of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in East Asia.
- China is pursuing a strategy to secure maritime control and influence by investing in major hub ports along major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borrowing maritime ports to advance into the ocean).

2) Policy suggestions and policy-making activities

(1) Policy suggestions

-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implement a strategy of securing maritime self-reliance to provide a minimum safeguard against conflicts and disput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attacks on South Korea.
- This study proposes policy measures so that South Korea are able to firmly respond to China's expansionist maritime policies based on international law, while proposing measures to stabilize them through maritime delimitation and new provisional agreements in the long term.

(2) Policy-making activities

- To hold expert seminars on maritime law and maritime security.

3) Expected benefits including policy contribution

- This study can be used as policy data related to China's transition to a maritime state and expansion of maritime power.
-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integrated research and policy implementation on maritime security issues and maritime territorial conflicts in East Asia.

01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 세계질서는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그에 도전하는 중국 간 경쟁은 갈수록 첨예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군사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물론 단극 또는 양극으로 단순화하여 패권적 지위를 논의하는 것이 오늘날 변화된 세계질서에는 맞지 않다는 인식도 존재한다.¹⁾ 그 이유로 오늘날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국가 간의 의존성이 높고, 선진국 간 국력의 수평적 분산도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어느 한두 국가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든다. 하지만 이러한 패권 혹은 패권적 지위의 개념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이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와 한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은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 전략에 동참을 요청받고 있으나, 매우 높은 대중 무역의존도와 북한 문제를 고려할 때 호주, 일본 등 미국의 다른 우방과 같은 수준의 대중 입장을 취하기는 어렵다. 2021년 한국의 대외무역의존

1) 전재성(2023), p. 6.

도가 70%를 넘는 가운데, 대중 수출 비중이 25.3%를 차지하고 있다.²⁾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북한에 대한 효과적 제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일본의 경우 2021년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로 전체 1위이지만,³⁾ 일본의 대외무역의존도가 30%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또한 2022년 8월 초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이 수일 동안 대만 주변 해역을 봉쇄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에서 보듯이, 대만을 비롯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위기는 수출입 물량의 99% 이상을 해상교통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2023년 1월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워게임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결론은 중국은 전쟁으로 인해 해군력이 파괴되고 대만을 정복하는 데 실패하지만, 미국과 대만 또한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었다.⁴⁾

이러한 미·중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과 이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은 동북아 해양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첫째는 전통적인 동북아 해양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조어도 주권 수호와 함께 동중국해 해양안보를 강화하고 미국의 대중국 억제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화를 서두르고 있다.⁵⁾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 추진 등 한국의 해군력 강화 추진도 위와 같은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변화의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대만 위기 등으로 점화되는 미·중 간의 갈등과 분쟁은 해양경제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느 한

2) K-stat 무역통계(검색일: 2022.1.12.). 무역의존도는 명목 GDP에 대한 수출입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한국의 대외무역의존도는 2011년 86.1%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낮아져서 2020년 59.8%에 이르렀으나, 2021년 다시 70%대로 높아졌다.

3) Trading Economics(검색일: 2023.1.12.)

4) Mark F. Cancian, Matthew Cancian and Eric Heginbotham(2023),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CSIS.

5) 일본은 2022년 12월 16일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여 자위권 등 필요시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의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하고, 2022년 현재 GDP의 0.97%인 방위비를 2027년까지 2%로 늘리기로 하였다. 연합뉴스(2022.12.16.)(검색일: 2022.1.12.)

지역 내지 구간의 해상교통로 통제는 일차적으로 한국, 일본 및 중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이차적으로 공급망 사슬에 따라 세계 각국에 파급효과를 낳는다. 셋째,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해상 법집행은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동북아 해양질서에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미·중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해양질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것이 동북아 해양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한 해양안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질서가 동북아 해양안보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중으로 대표되는 경쟁과 갈등의 상황이 동북아에서의 전통적 의미의 해양안보, 해운경제 그리고 해양관할권 문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미·중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 동북아 해양안보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그에 따른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망은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패권국가의 관점에서 미·중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과 그것이 동북아 해양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미·중 중심으로 재편된 세계질서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는 패권 또는 패권국의 개념과 패권국의 전이,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본다. 이어서 새롭게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중국의 해양국가로의 전환과 적극적·팽창적인 정책을 검토한다. 이어서 기존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대중국 억제정책을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 흐름에는 중국이 패권국으로서 등장했는지에 대한 검증과정을 생략하였다. 왜냐하면 이미 경제력과 국방력 등 여러 지표가 중국을 신흥 패권국의 반열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미 백악관은 2022년 10월 발표한 미국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중국을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그리고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묘사하였다.⁶⁾ 새로운 패권적 지위를 꿈꾸는 중국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두 국가 사이의 경쟁과 갈등을 파생시키는데, 그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미·중의 세계질서 재편이 동북아 해양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통적인 해양안보, 해상교통로와 해운경제, 그리고 해양관할권 등 세 분야로 나누어 검토한다. ‘해양안보’는 경제안보와 해양영토 안보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의 의미로 사용된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국제 관계와 국제해양법을 주 대상으로 하며, 국제경제학적 관점의 접근은 지양하였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사시 해상교통로 봉쇄에 따른 경제적 여파를 검토하였지만, 이를 위해 고도의 경제학적 지식이 동원되지는 않았다. 국제해양법적 연구로는 동중국해에서의 해양관할권 행사 문제 등이 검토대상이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질서 재편의 동북아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며, 그다음 단계로 어떻게 대응 방안, 전략 및 정책을 세울 것인지는 다루지 않으며,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

6) The White House(2022), p. 8.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방법들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다양한 일차자료와 이차자료는 본 연구의 기반이 된다. 미국, 중국 등 국가들의 관련 정책, 법령 및 전략보고서 등의 일차자료와 이러한 자료와 현실을 기초로 미·중 관계를 분석한 논문 등에 대한 검토는 본 보고서 전반에 걸쳐 연구의 기초가 된다. 예컨대 미국의 대중 전략의 변천과 내용 파악을 위해 백악관이 내놓은 국가안보전략과 미 국방부의 국가안보전략,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의 언행을 살펴보았다. 통합역제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대중 전략은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CSIS를 비롯한 연구소들의 보고서와 전문가들의 논문과 같이 이차문헌들을 다양하게 섭렵하였다. 특히 CSIS는 2023년 1월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위계 임을 24차례 실행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둘째, 본 연구는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자문해서 연구의 방향을 잡고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였다. 특히 전통적 해양안보 관련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및 서면 자문을 통해 군사안보적 차원의 미·중 경쟁과 그것이 동북아 해양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국제세미나를 통해서 대만 문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관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측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파악하였다.⁷⁾

셋째, 본 연구는 역사적 관점의 통시적 연구를 일부 활용하였다. 제2차에서 패권국의 지위가 형성되는 양상과 그 전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역사적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또한 오바마 정부, 트럼프 정부 및 바이든 정부에 걸쳐 미국의 대중 정책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집권 정부 사이의 동

7) 2012년 12월 8일, KMI-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 공동 국제콘퍼런스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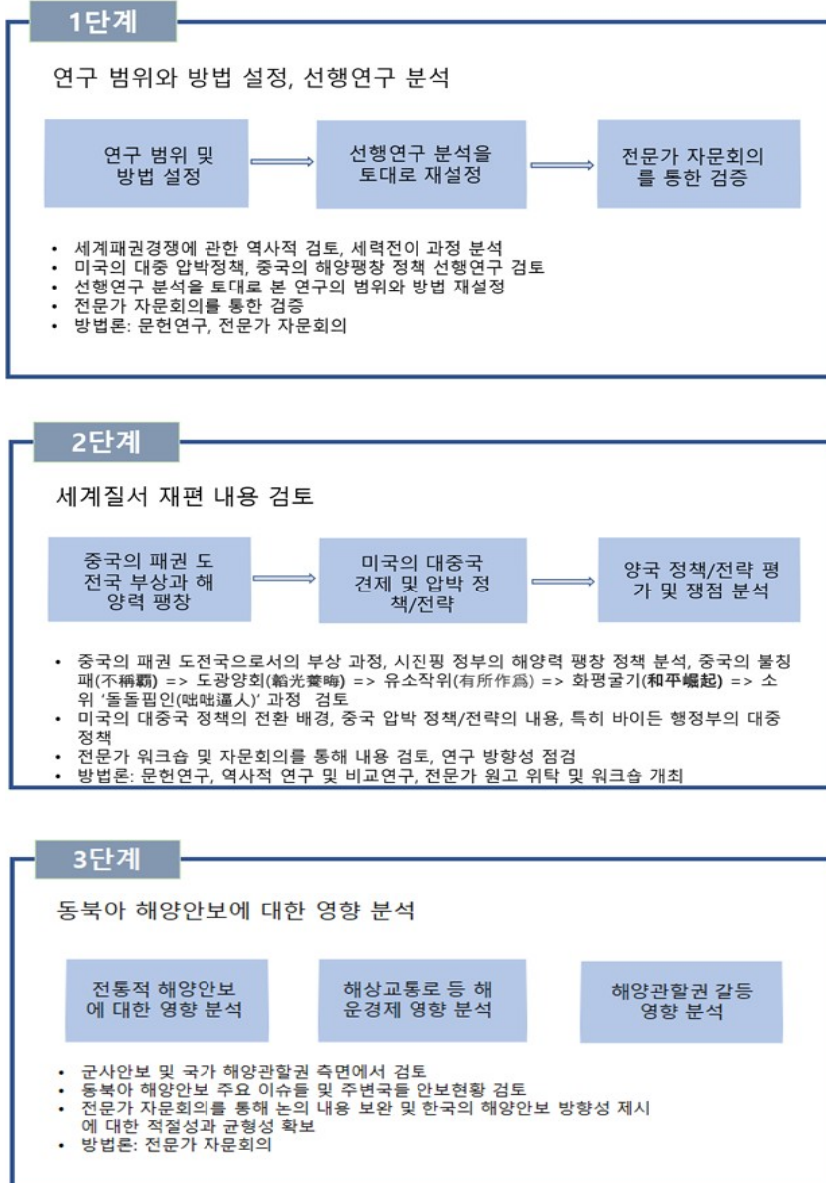
일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비교법적 연구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비교, 한국과 일본의 방위력 비교 등이다.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는 융합연구를 추진하였다. 국제법, 국제정치학 및 군사 해양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일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집필함으로써 연구가 기계적 분업이 아닌 내용상 융합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중 간에 적용되는 세계질서 재편의 특징과 동북아 해양안보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들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러한 분석만으로도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단계별로 보면 1단계로 선행연구 검토, 2단계로 세계질서 재편의 내용과 특징 검토, 3단계로 동북아 해양안보에 대한 영향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전개 과정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본 보고서의 주제인 미·중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과 양국 간의 갈등과 경쟁은 지역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이 주제에 대해 국내외에서 많은 논문이 생산, 축적되고 있다. 특히 한국이 미·중 갈등의 직접 영향권 아래에 있는 점을 반영하듯이, 국내 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하다. 아래에서는 국내 학자들의 최근의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국외 연구는 보고서 본문의 인용과 참고문헌으로 대신하기로 한다.

보고서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분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는 미·중 간의 갈등과 경쟁에 관한 연구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론적·역사적 고찰을 통해 패권국 또는 세력 변이가 일어나는 과정을 검토하고 이른바 G2의 시대가 되었음을 논하는 글들이 있다(하봉규(2011), 김지용(2019), 이상환(2022), 신경환(2022)). 패권국으로서 부상하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 정책과 전략을 논하면서 해양굴기,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 내용을 분석하는 글들도 있다(이정남(2017, 2018), 유희복(2017), 곽수경(2018), 홍건식(2018), 정광호·백주현(2021), 윤혜령(2022)). 무엇보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 국제정치·경제,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논문이 많이 있다. 이들 논문은 주로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국이 어떠한 억제정책을 펼치는지를 논한다(이서항(2016), 구민교(2017), 이홍정·임정환(2022), 김용신(2022), 배학영(2022), 이성우·민소영(2022)).

둘째는 중국의 해양정책과 해양력 강화에 관한 연구이다. 이 분야 연구는 중국의 해양력 강화, 특히 해군력 강화와 해양에서의 법집행 강화 정책을 논하고 그것이 한국에 대해 가지는 합의 및 한국의 대응 방향을 논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이승렬·배진식(2011), 하태영·김용환(2015), 이정남(2017, 2018), 박수경(2018), 김태호(2019), 홍건식(2018), 반길주(2021), 이진성(2021), 정광호·백주현(2021)).

셋째는 세계질서 재편에 따른 동북아 해양 문제를 다룬 연구이다. 이 분야 연구에는 북한 위협, 미·중 갈등 고조와 국제정세 불안 등과 연계한 해양안보 강화전략과 동중국해와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해양관할권 경쟁에 대한 국제법적, 국제정치학적 연구가 주를 이룬다. 본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세계질서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논하는 연구(김하영(2017), 백병선(2017), 김태성·이상현(2018), 김태호(2019), 김진호(2020), 정안호(2020), 반길주(2021), 김현수·왕가가(2022), 한종환(2022), 주재우(2022))와 동중국해 등 지역해에서의 쟁점들 또는 해양력 강화방안을 논하는 연구(박창건(2019), 박창건·윤석정(2022), 길병옥(2020, 2021), 노연상(2021))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일본과 러시아의 해양력 강화 및 해양전략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박영준(2022), 유병준·정재호(2022), 주은식(2022)). 박영준의 글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 항모 도입 결정의 배경과 내용을 논하고, 유병준의 글은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가 전력지침을 어떻게 개정해 왔는지를 밝힌다. 주은식의 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국가전략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검토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중국의 부상과 해양력 팽창이 동북아 해양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국 및 일본의 해양전략에 관한 학위논문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고위건(구웨이젠)(2018)은 시진핑 정부의 주요 해양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최구식(2021)은 해양력의 개념, 중국과 일본의 주요 해양분쟁 및 해군력을 깊이 있게 비교·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와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보다 구체적인 개별 주제들에 대해 아주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계속해서 많은 연구결과가 생산되고 있다. 특히 미·중 간의 갈등과 경쟁, 미국의 대중 억제정책 및 전략, 중국의 해양력 팽창, 미·중의 군사력 비교, 일본의 해군전략 등에 관한 연구는 더 이상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어려울 만큼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세계질서 재편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와 평가, 특징에 대한 분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며, 특히 이러한 세계질서 재편이 동북아 해양 거버넌스와 해상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보고서는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중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에 대한 의미와 특징을 분석·정리한다는 점에서 개별 사안 중심의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그동안의 연구와 미국과 중국의 최근 정책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성도 확보한다. 둘째, 그러한 세계질서 재편이 동북아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도모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해양안보는 광의적 의미로 전통적 군사안보와 더불어 해양경제안보, 해양영토 안보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 연구가 미·중 갈등이 동아시아의 전통적 의미의 해양안보에 대한 함의, 중·일의 군사력 비교, 그에 대한 한국의 함의를 주로 논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러한 논의를 포함해서 미·중 간의 갈등과 경쟁이 동북아 해양영토 및 해양 거버넌스, 그리고 해상교통로를 포함한 해양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직까지 후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02

미·중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

제1절 패권의 개념과 패권국가의 전이 —————

1. 패권의 개념과 패권국의 특징

1) 패권의 개념

국제 관계에서 패권 또는 헤게모니(hegemony)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행사하는 힘을 의미한다.⁸⁾ 패권 경쟁에 대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패권국’이란 용어 이외에도 ‘강대국’, ‘슈퍼파워’, ‘헤게모니 국가’, ‘지배국’ 등의 표현들이 등장한다. 패권국, 지배국, 헤게모니 국가 등은 서로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는데, 그렇다면 모든 강대국은 패권국인가? 강대국과 패권국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국가가 패권국인지에 대해서는 그 패권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 학자마다 의견이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패권국이란 최소한 세 가지 조건, 즉 경제력⁹⁾, 문화력¹⁰⁾, 정치력

8) 김대륜(2021), p. 5.

9) 국제질서에서 물질적으로 차지하는 능력이다.

10) 기존 국제정치·경제질서를 정당화하거나 대안적 질서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념, 소프트 파워, 글로벌스탠더드 등이 있다.

(군사력 포함)¹¹⁾이 동시에 구비된 국가를 의미한다.¹²⁾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가 자동으로 세계 패권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학자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부국이 될지라도 패권국이 되는 데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고 주장¹³⁾하는 등 경제강국과 패권국을 구분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영국의 경제규모를 이미 1870년도에 추월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야 진정한 세계 패권국으로 여겨지게 되었다.¹⁴⁾ 여기서 추가적으로 중요하게 언급되는 요소는 패권국이 되려는 정신적인 동기이며, 이는 주로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¹⁵⁾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정치적·군사적으로도 권력이 커지면서 패권국으로 등장¹⁶⁾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 지배력은 패권국가의 사전요건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경제대국을 살펴보면 기원후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대체로 중국과 인도가 세계 경제에서 가장 경제력이 컸으며, 인도와 중국 두 나라는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총생산의 거의 50%를 차지했다. 이 추세가 무너진 것은 근래 100여 년에 불과하며,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 유럽 국가들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근대에 들어서 국제질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패권국 사례로는 팍스 브리타니카의 영국,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의 미국이 언급된다. 또한, 주목할 점은 패권국은 모두 해양 제국들이었다는 점이다.¹⁷⁾

11) 실질적으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12) 임혜란·이영섭(2020), p. 40.

13) 위의 책, p. 39.

14) 위의 책, p. 41.

15) Koehane et al(1984), pp. 34-45, 재인용: 이춘근(2016), p. 63.

16) 위의 책, p. 39.

17) 위의 책, p. 64.

2) 패권국의 특징

패권적 힘을 구성하는 요소와 특징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상이하며,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은 <표 2-1>과 같다.

<표 2-1> 패권적 힘의 구성요소와 특징

학자	패권적 힘의 구성요소	특징
코헨	원자재, 자본, 시장, 공공재, 군사력	• 경제 중심의 패권, 군사력은 필수 • 패권국은 비대칭적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야 유리함
길핀	자유무역주의, 시장경제, 세계금융, 군사력	• 경제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해상통제력 필요
라고스	경제력, 사회발전, 군사력, 국방비, 국방과학기술	• 경제 및 국력, 영예(prestige)
오간스키	영토 인구, 경제적 부, 자원, 군사력, 정부의 효율성	• 객관적인 힘의 크기와 그 힘을 도구화한 영향력 중요 • 힘의 격차 중요
코탐	자본, 산업기반, 인구, 자원, 기술, 시장, 군사력	• 힘의 영향력과 국가의 이미지 • 이미지의 형성, 유리한 협상 위치 선점
나이	인구, 영토 천연자원, 경제적 부, 군사력	• 경성권력(hard power) 및 연성권력(soft power) 강조

자료: 차도희(2012), p. 29.

일부 학자는 패권국을 세계 패권국과 지역 패권국으로도 구별하며, 사실상 진정한 패권국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국제정치학계의 현실주의자 미어샤이머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패권국이란 국제체제 내의 유일한 강대국인데, 어느 나라가 다른 강대국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나라의 패권국이라고 부를 수 없으며, 19세기 중엽 영국은 어떤 의미 있는 측면에서도 유럽대륙의 4대 강대국 - 오스트리아, 프랑스, 프로시아, 러시아 - 을 모두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패권국이 아니었으며, 19세기의 유럽은 다극체제였지 일극체제는 아니었다고 지적한다.¹⁸⁾ 또한, 미어샤이

머는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세계 패권국(global hegemons)과 지역을 지배하는 지역 패권국(regional hegemons)을 구분하면서, 세계의 바다를 가로질러서 상대방 강대국의 영토에 자신의 군사력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세계 패권국의 존재는 불가능하며 강대국이 현실적으로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지역 패권국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⁹⁾ 다시 말해, 남북아메리카 대륙의 어떤 나라도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 대륙의 유일한 강대국으로 인식되어 적어도 지난 100여 년간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 패권국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미어샤이머에 따르면, 미국조차도 세계 패권국이 아닌 지역 패권국이며, 근대에 진정한 지역 패권국의 지위에 오른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²⁰⁾

추가적으로 국제질서와 패권에 관한 학문에서 패권국의 존재가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그리고 패권국이 몇 개여야 국제질서가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적인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됐지만, 합의된 의견이 없다. 패권안정이론을 옹호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패권국은 국제 거버넌스, 경제적·군사적 지원 및 제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제 협력을 도모하고 국제정치·경제질서를 안정화하며 개별국들이 그 질서를 위반하지 못하도록 한다.²¹⁾ 다시 말해,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패권국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얘기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팩스 브리태니카 및 팩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국제정치·경제질서가 안정된 반면 패권 전환이 이뤄지는 전간기(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는 사상 유례없는 혼란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경험이 언급된다.²²⁾ 특히, 킨들버거는 경제대공황이 심화한 원인은 국제경제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기능할

18) Mearsheimer(2017), p. 87.

19) 위의 자료, p. 87-88.

20) 위의 자료, p. 88.

21) 임혜란·이영섭, 앞의 책, p. 35.

22) 위의 책, p. 35.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조율해 줄 수 있는 패권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²³⁾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특정 패권국의 등장이 국제질서에 오히려 해악이 된 경우도 있어 패권국이 존재해야 국제질서가 유지된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를 제기하기도 한다.²⁴⁾ 또한, 일각에서는 하나의 패권국이 존재하기보다 냉전 시대와 같이 두 개의 패권국이 존재하는 양극체제가 국제질서에 가장 안정적이라고 주장한다.²⁵⁾ 양극체제보다 다극체제가 더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이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힘이 실리지 않는다.

2. 패권국가 전이 과정의 특징

국제정치 역사상 어느 한 나라가 영원히 패권을 유지한 적은 없다²⁶⁾. 패권국의 흥망의 원인과 패권 전이 과정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뤄져 왔다. 특히 패권국이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이론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힘의 전이 이론과 패권 전쟁 이론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1) 힘의 전이 이론

1958년 오간스키 교수가 주장한 ‘힘의 전이 이론’에 따르면, 1등 국가의 국력 성장은 국력의 많은 부분을 군사 분야에 투입하게 되면서 국가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경제 발전에 투입한 2, 3위의 국가들보다 그 속도가 늦어지게 되며 결국 패권국가와 2, 3위권 도전자 국가의 힘이 근접하게 되는데,

23) Kindleberger(1973) 재인용: 임혜란·이영섭, 앞의 책, p. 35 이하 참조.

24) 위의 책, p. 37.

25) Kenneth(1979), pp. 170-171.

26) 이춘근, 앞의 책, p. 47.

일정 시점에 이르렀을 때 도전국이 패권국을 선제공격하는 일이 패턴처럼 발생한다.²⁷⁾ 이 이론은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 관점에서 입각하여 전쟁의 발발 원인을 국가 간 힘의 분포 상태에서 찾고 있다.²⁸⁾ 오간스키는 국력으로 대표되는 ‘능력’과 만족도로 대표되는 ‘의도’를 국제질서의 중요한 기준으로 봤는데, 지배국의 패권체제에 불만을 가진 도전국과 그의 동맹국들의 힘이 현상유지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거의 균등해질 때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았다.²⁹⁾

오간스키는 국력의 3대 요인으로 부와 산업능력, 인구,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제시했으며,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한 국가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 강대국이 된다고 보았다.³⁰⁾ 이 중 힘의 전이 이론은 성숙기의 패권 강대국과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신흥 강대국 사이에 힘의 격차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성숙한 강대국과 신흥 도전국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으로, 기존 강대국은 지배권 유지를 위해, 그리고 신흥 강대국은 지배권 쟁취를 위해 각각 노력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야기될 것이며 갈등은 전쟁으로 비화된다고 보는 이론이다.³¹⁾ 이에 따라, 오간스키는 도전국의 국력이 아직 기존의 패권국의 국력에 도달하기 이전에 먼저 선제공격을 했다는 것이 역사의 패턴이라고 주장했으며, 그 예가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일으켰던 대전쟁, 독일이 일으켰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 있다.³²⁾

오간스키는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전국과 패권국의 국가 속성과 힘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변수로 제시했다. 우선 패권 도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크기를 보유한 국가이어야 하며,

27) 위의 책, p. 53.

28) 위의 책, p. 54.

29) Oraganski(1968), p. 361, 재인용: 이춘근, 앞의 책, pp. 60-61.

30) 위의 책, p. 55.

31) 위의 책, p. 57.

32) 위의 책, p. 58.

국력 증강 속도가 빠를수록 전쟁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보았다.³³⁾ 마지막으로, 지배국가와 잠재적 도전국 관계가 우호적이면 패권 전쟁의 가능성은 줄어든 것으로 보았다.³⁴⁾

오간스키는 이미 60여 년 전 힘의 이전 이론을 제시하면서 추후 중국이 패권 도전국으로 부상하여, 서방국가들의 지배권에 대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³⁵⁾

2) 패권 전쟁 이론

패권 전쟁에 관한 이론들은 주기적으로 발생한 대전쟁을 연구한 결과로 나온 이론들이다. 패권 전쟁은 기존의 세계 체제를 새로운 힘의 관계에 합당하게 바꾸려는 전쟁으로 기존의 패권국의 힘이 쇠약해지고, 도전국의 힘이 증강될 때 신흥 강대국은 기존의 국제질서가 자신에게 불리한 국제질서라고 인식하고 이를 수정하고자 하며, 패권 전쟁은 새로운 힘의 구조에 적합한 새로운 패권국 또는 챔피언을 결정하기 위한 전쟁이다.³⁶⁾

기존 강대국과 새로이 출현한 강대국 간의 힘의 구조 변동이 국제정치에 어떤 충격을 가져오는지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약 2400년 전,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저술한 투키디데스이다. 그의 연구를 토대로 신흥 세력이 기존 지배 세력의 지위를 위협할 때 상호 긴장, 두려움 등으로 인해 뒷에 빠지듯이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을 두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그레이엄 앨리슨은 과거 500년의 전쟁 기록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거 16가지의 사례 중 12가지는 전쟁으로 귀결되었고, 나머지 네 가지 사례는 평화적으로 해결됐다는 결과를 도출했다.³⁷⁾

33) 위의 책, p. 61.

34) 위의 책, p. 61.

35) Oraganski(1968), p. 361, 재인용: Kim., W. et al(2015), pp. 219-220.

36) 이춘근, 앞의 책, p. 65.

〈표 2-2〉 지난 500년간 신흥 세력과 지배 세력

시기	지배 세력	신흥 세력	갈등 영역	결과
15세기 말	포르투갈	에스파냐	세계 제국과 무역	전쟁 회피
16세기 전반	프랑스	합스부르크	서유럽의 영토권	전쟁
16, 17세기	합스부르크	오토만제국	중부 유럽과 동유럽의 영토권과 지중해의 제해권	전쟁
17세기 전반	합스부르크	스웨덴	북유럽의 영토권 및 제해권	전쟁
17세기 중엽~말	네덜란드 공화국	영국	세계제국, 제해권, 무역	전쟁
17세기 말~18세기 중엽	프랑스	대영제국	세계 제국과 유럽의 영토권	전쟁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영국	프랑스	유럽의 영토권 및 제해권	전쟁
19세기 중엽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	세계 제국, 중앙아시아와 동부 지중해에서의 영향력	전쟁
19세기 중엽	프랑스	독일	유럽의 영토권	전쟁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중국과 러시아	일본	동아시아의 영토권 및 제해권	전쟁
20세기 초	영국	미국	세계경제 지배와 서반구에서의 해군력 우위	전쟁 회피
20세기 초	프랑스와 러시아의 지지를 받는 영국	독일	유럽의 영토권과 세계 제해권	전쟁
20세기 중엽	소련,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의 영토권 및 제해권	전쟁
20세기 중엽	미국	일본	아태 지역의 제해권과 영향력	전쟁
1940년대~1980년대	미국	소련	세계 패권	전쟁 회피
1990년대~현재	영국과 프랑스	독일	유럽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전쟁 회피

자료: Allison (2017), p. 42 자료를 저자가 번역하여 재작성

37) Allison, G. (2017), p. 42.

토인비는 주도적 국가에 의한 세계 지배권 장악 시도는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대항 연합을 형성하게 하여 세력균형 유지를 위한 세계대전을 불러 오게 된다고 주장했다.³⁸⁾ 레이몽 아롱의 경우에는 패권 전쟁을 ‘기존 국제 질서에서 변하고 있는 힘의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테스트’라고 정의 내리며, 도전국이 기존의 국제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패권 전쟁이라고 봤다.³⁹⁾ 하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과연 미·중 간 패권 경쟁이 패권 전쟁으로 귀결될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제2절 중국의 해양국가 전환과 신흥 패권국으로의 부상 —

1. 중국의 군사력 신장과 해양력 팽창

1) 중국의 군사력 신장

전 세계는 주로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을 주목해 왔지만,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연간 군사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웃돈다. 특히 1989년부터 1992년 사이에 중국의 국방비는 매년 50% 이상 증가했다.⁴⁰⁾ 당시는 주로 중국 국경 밖의 인민해방군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방비를 대폭 늘렸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높은 증가율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중국의 연간 국방비 증가율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 2016년 7.6%, 2017년 7%,

38) 위의 자료, p. 65.

39) 위의 자료, p. 66.

40) Munro(1992), pp. 10-11.

2018년 8.1%를 기록했다.⁴¹⁾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현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2022년에는 2,934억 달러를 기록했다.⁴²⁾ 이는 같은 해 미국의 국방비 지출액인 8,010억 달러보다는 훨씬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국과 주변 국가들은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20년 이상 매년 증가해 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가령 2021년 중국 정부의 국방비 예산을 역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극명하게 드러난다(〈표 2-3〉 참조). 이 때문에 미국 및 동북아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따른 안보 위협을 우려하며, 중국이 발표하는 통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실제 중국의 국방비 증가 속도는 더욱 빠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아래 표 〈2-3〉은 중국의 국방비가 인도, 일본 및 러시아를 합한 것 보다 많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림 2-1〉은 중국의 방위비 지출의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표 2-3〉 2021년 중국 및 주변국 공식 국방비 예산 비교

단위: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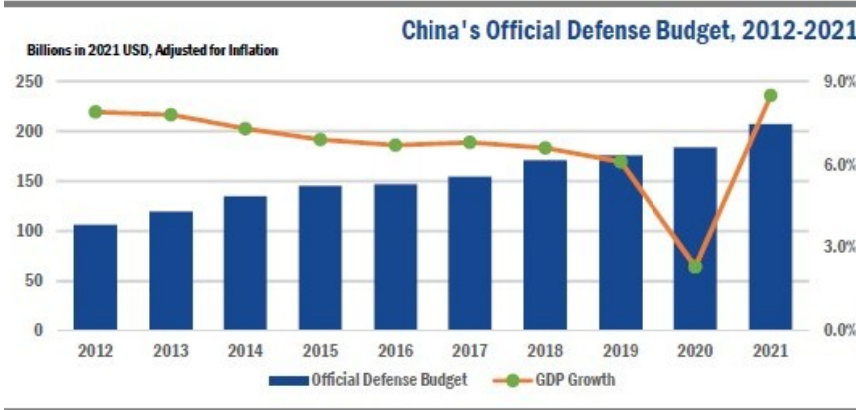
국가/지역	공식 국방예산
중국	209
인도	64.8
일본	55
러시아	66.8
대한민국	48
대만	15.4

자료: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21.11.2.), p. 143.

41) 김태성 · 이상현(2018), p. 100.

42) The World Bank Data(검색일: 2023.2.17.)

〈그림 2-1〉 중국의 국방비 예산 증가 추이



자료: The U.S. Department of Defense(DoD)(2021.11.2.), p. 142.

중국 국방비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질적 신장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이다. 현재 중국의 군사력은 경제력 비교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약 80%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밝혔듯이 중국의 국방비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지만, 군사력 수준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인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매년 1월 발표하는 세계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해서 세계 3위를 기록했다.⁴³⁾ 그런데 매년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가령, 2022년 1월의 경우 미국의 군사력 지수가 0.072이고 중국은 0.086이었으나, 2023년 미국은 0.071, 중국은 0.072로 양국 간 격차가 현저히 좁혀졌다(평가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함).⁴⁴⁾

특히, 대만해협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이 결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는 2023년 1월 발표한

43) GFP(2023.1.4.)(검색일: 2023.2.17.)

44) GFP(2023)(검색일: 2023.2.17.),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22.1.10.)(검색일: 2023.2.17.)

‘다음 전쟁의 첫 전투: 중국의 대만 침공 전쟁 게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군이 2026년 대만 점령을 위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면 결국 실패로 끝나지만, 미국은 몇 년 동안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받는 ‘값비싼 승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기도 했다.⁴⁵⁾

중국의 군사력 측면에서 특히 해군의 빠른 성장은 동북아 해양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해군은 함정 수에서 2015년을 기점으로 미국을 앞선다. 미국 의회조사국(CRS)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중국 해군함정 수는 총 348척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미국보다 52척 많았다. 2015년 중국이 미국을 제친 이후 양국 간 차이가 더욱 벌어지는 추세다. 이는 중국이 1990년대 중반부터 더욱 유능한 해군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군 ‘현대화’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로, 함정 수와 같은 양적 측면과 아울러 함정 종류 및 구조 등 질적 측면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CRS는 해당 보고서에서 중국의 전체 함정 수는 2030년에는 460척으로 증가해 미국과의 격차가 더욱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⁴⁶⁾

2) 중국의 해양력 팽창

중국은 전통적으로(특히 청나라 이후) 대륙 세력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으나, 아편전쟁 패배와 제2차 국공내전 후 대만 수복 실패, 한국전쟁 참전 등을 계기로 해군력을 비롯한 해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중국공산당의 위협과 동아시아의 공산화 가능성을 우려한 미국 트루먼 정부는 대만을 방어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반공 기지로 활용하기로 하고, 제1~2차 대만해협 위기에서 제7함대를 통해 대만 국민당 정부를 지원하였다.

45) 보고서 원제: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CSIS(2023.1.9.)(검색일: 2023.1.16.)

46) CRS(2022.12.1.)(검색일: 2022.12.30.)

중국 인민해방군은 당시 약한 해군력을 대만 수복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였고, 미국에 맞서기 위해 해군력 증강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1953년 6월 소련과 〈해군함정 인도와 전함 건조에 대한 기술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소련으로부터 잠수함 1척과 137척의 함정을 구매하는 등 자국의 해군 전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⁴⁷⁾

덩샤오핑 집권(1978년~1992년) 시기부터 중국은 해양이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해군 현대화와 해상교통로 확보를 연계하는 해양력 팽창 구상을 하게 되었다. 1982년 해군 총사령관으로 부임한 류화칭(刘华清)은 1980년대 중반 냉전 체제 및 중소 결렬(Sino-Soviet split) 이후 소련의 위협이 완화되었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해군 doktrin인 ‘근해방어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중국 연안에서 단기적으로 해상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으므로 중국 해군은 연안을 훨씬 넘어 근해에서 전투력 투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 정부는 발해(보하이),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중국의 근해로 분류한다.⁴⁸⁾ 동중국해의 경우 상하이·저장성·푸젠성 동쪽 해역과 대만 동쪽부터 일본 류큐열도 서쪽(동경 130도 서쪽) 사이를 별도로 구분해 총 다섯 구역의 근해로 구분하기도 한다.

류화칭은 또한 21세기 중국 해군의 3단계 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⁴⁹⁾ 제1단계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이른바 제1도련선 안쪽을 중국 내해(內海)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제2단계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괌-사이판을 잇는 제2도련선 해역까지 힘을 투사할 수 있는 해군을 보유해야 하며, 동중국해를 중국의 근해로 장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제2도련선은 제1도련선부터 태평양 북부 군도 사이를 연결하는 선이다. 마지막 제3단계는 2040년경까지 태평양과 인도

47) 이재형(2007), pp. 93-94; 안슬기(2020), p. 66.

48) 中国科学院地理科学与资源研究所(2007.3.28.)〈검색일: 2022.10.6.〉

49) 白笛(2012), p. 31.

양에서 미국 해군을 견제하는 해군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류화칭의 해군 발전 전략은 지금까지도 중국 해군의 기초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40년까지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미국 해군을 견제한다는 제3단계 목표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며 중국의 해양력 팽창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다.

〈표 2-4〉 류화칭의 중국 해군 3단계 발전 전략

구분	단계별 목표
제1단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제1도련선 이내를 내해(內海)로 만들기 위한 해군 건설 (* 제1도련선: 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
제2단계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제2도련선까지 힘을 투사할 수 있는 해군을 보유해야 하며, 동중국해를 중국의 근해로 장악 (* 제2도련선: 제1도련선~태평양 북부 군도 사이)
제3단계	2040년경까지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미국 해군 견제

자료: 白笛(2012), p. 31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2〉 중국의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



자료: BBC News(2019.8.25.)(검색일: 2022.10.3.)

덩샤오핑의 후임인 장쩌민(1993년~2003년)은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을 추진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해상교통로 안정과 해군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저우추취 전략은 원래 중국 국영 석유 기업들의 해외 자원 확보 전략이었으나 제10차 5개년 계획(2001년~2005년)에서 국가전략으로 승급되고 다른 부문으로 확장되었다. 당시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해군뿐만 아니라 해운, 항만, 해상교통로 안전, 자원개발 등 경제 및 기술을 융합한 종합적인 해양력 발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후진타오 집권 이후 중국은 그동안 추구해온 해양력 팽창을 더욱 구체화하고 해양세력으로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본격적으로 표방하게 된다. 후진타오는 임기 말인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인민대표대회(당대회)에서 ‘해양강국 건설’ 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해양자원 개발 능력 향상, 해양 경제 발전, 해양 생태환경 보호, 국가의 해양권의 수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⁵⁰⁾ 이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해양으로부터의 이익 확대를 통해 국가의 종합적 국력을 증대시키고자 수립한 국가전략이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해양강국의 조건으로 △강한 해군 건설 △해양경제 확대 △해양기술 및 개발 △해양 거버넌스 △해양전략을 제시하였다.

후진타오 후임인 시진핑은 2013년 집권 이후 해양강국 건설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국가전략과의 연계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해양력 팽창을 추진하였다. 시진핑은 2017년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에서 “대륙과 해양에 대한 중요도를 동일시하고, 해양강국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해양강국 건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강조하였다.⁵¹⁾

50) 新华网(2012.11.10.)(검색일: 2022.7.25.)

51) 안슬기, 앞의 책, pp. 69-72.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의 해양력 팽창 추진 과정은 중국이 해양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중시하고 있고, 해양을 통해 중국몽과 같은 국가전략을 실현하려는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 해군의 일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5〉 중국의 주요 해군사

연도	주요 사건
1839~42	제1차 아편전쟁(난징조약, 홍콩 할양 및 광저우 등 5개 항구 개방)
1856~60	제2차 아편전쟁(톈진 · 베이징조약 체결, 주룽반도 · 연해주 할양)
1871	베이양함대 창설
1894	청일전쟁(시모노세키조약, 대만 및 랴오둥반도 할양)
1912	중화민국 건국
1949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인민해방군 해군(PLAN) 창설
1953	소련에서 최초로 잠수함 도입
1954	제1차 대만해협 위기
1955	동해함대 창설
1958	제2차 대만해협 위기
1960	북해함대 창설
1974	중국-베트남 해상교전
1979	중국-베트남 전쟁, 중국-미국 국교 정상화
1980~85	류화칭, 도련선 개념에 따른 단계적 해군력 건설 방향 제시
1985	‘연안방어전략’에서 ‘근해적극방어전략’으로 전환
1988	중국-베트남 해상교전
1992	중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 공포
1993	소련의 킬로급 잠수함 도입
1995~96	제3차 대만해협 위기
2001	진급 핵잠수함 인수
2005	중국-러시아 해상연합훈련 시작
2012	후진타오 주석, 해양강국 건설 천명/제1호 항모 랴오닝함 취역
2013	중국 동중국해 ADIZ(방공식별구역) 선포
2015	난사군도(스프래틀리) 인공섬 건설
2019	제2호 항모 산둥함 취역
2022	제3호 항모 푸젠함 진수

자료: 오순근(2015), pp. 201~20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시진핑 정부의 해양력 강화 정책

1) 배경

중국은 2012년을 기점으로 해양 세력으로의 성장을 표방하고 있으며, 시진핑 지도부가 그러한 정책 변화를 이끌고 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은 임기 말인 2012년 11월 열린 제18차 당대회에서 ‘해양강국 건설’을 국가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는 덩샤오핑 지도부 시기에 주로 강조되었던 해양 경제와 자원 부문과 장쩌민 시기에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던 해양안보, 해양권의 등을 포괄한 국가전략이다.

이러한 해양강국 건설 전략은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주석, 2013년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시진핑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시진핑은 해양강국 건설이 중국의 꿈(중국몽),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중국몽은 시진핑의 정치 슬로건으로, 그가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며, 이 꿈은 여러 대에 걸친 중국인의 숙원을 응집하는 것이자 중화민족과 중국 인민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제시한 것이다.⁵²⁾ 시진핑 지도부는 대만과의 통일을 중국몽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과제로 언급하였다. 해양강국 건설이 대만 문제와 같은 수준으로 언급될 만큼 중요 과업 중 하나로 강조된 것을 보면, 중국에서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

2012년 말 당시 중국 정부가 ‘해양강국’ 건설을 국가 목표로 제시한 대내외적 배경을 파악하려면 중국 국내 정치의 변화와 함께 2008년 이후 급변한 국제정치경제 및 안보 관련 동향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52) 정현욱(2018), p. 351.

대만과의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다. 2013년 출범한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이전 지도부보다 더욱 강력하게 ‘대만 문제’⁵³⁾ 해결 의지를 표출해 왔다. 대만과 인접한 중국 남부 푸젠성(福建省)에서 17년간 근무한 바 있는 시진핑은 자신의 풍부한 대만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임기 내에 양안 통일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는 양안 통일이야말로 중국몽을 실현하여 중국을 명실상부한 최강대국으로 재부상시킬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본다.

둘째, 2008년 이후 가속화된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상승이다. 당시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경제는 성장률이 저하되는 등 악영향을 받은 반면, 중국은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상황은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빠르게 추격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은 이웃 국가들과 경제적,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였고, 주변국들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패권을 유지해 오던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더욱 자각하게 되었고, 이는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 정책으로 연결된다.

중국 역시 이에 대한 대응 및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일대일로(Belt and Road) 이니셔티브를 추구하게 되었는데, 일대일로의 한 축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으로, 해양력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미국과 중국 양 강대국의 전략적 충돌은 주로 군사력, 무역, 기술 등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러한 영역에서 제해권은 핵심적인 요소다. 이에 중국은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는 구조를 강조하면서 자국이 전통적인 대륙 세력 이미지를 탈피하고 해양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약하고자 노력하였다.

53) ‘대만 문제(Taiwan Issue)’는 1949년 중국의 제2차 국공내전 종료 이후 대만 정권과 주권 귀속에 관한 문제 및 분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중국은 이를 내정 문제라고 보며, 미국 등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한다.

셋째, 1994년 11월 16일부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발효되어 국제법적 기반을 갖춘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해양자원 개발이나 해양영토 관할권 범위, 경계획정 등 이슈에 관한 관심이 상승하고, 해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중국 정부 또한 해양자원 개발 이용이나 해양 관련 법규 및 거버넌스 등이 선진국에 비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인식이 강화되었고, 국력 향상과 함께 각종 해양권익이 도전받는 문제 등에 대해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날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이 중립(neutrality)에서 개입(engagement)으로 전환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면서 강경한 태도로 도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해양력 강화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된다.⁵⁴⁾

넷째, 1979년부터 실시된 개혁개방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 실현 문제 역시 중요의 해양정책 강화의 중요한 배경이다. 경제성장은 경제 차원을 넘어 중국공산당 정부의 정당성 및 통치 지속성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다. 해양으로부터 석유나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를 획득하고, 이를 수송하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과거보다 공세적인 남중국해 정책을 추진하였다.

다섯째, 해양안보를 바탕으로 양안 통일을 실현하고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를 기반으로 대외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지역에서 자국의 힘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과거 세계 패권국들이 해양 세력임을 알고 있으며, 중국이 19세기 아편전쟁 패배로 인해 ‘치욕의 세기’를 맞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약한 해양력에 있었다고 본다. 또한 21세기에도 해양의 중요성은 지대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양강국이 되어야만 한다고 판단한다.

54) 안슬기, 앞의 책, p. 64.

그렇다면 시진핑 정부가 추구하는 해양력 강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주요 내용을 해군력 강화, 해상 법집행 강화, 해양경제 성장,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후술한다.

2) 해군력 강화

(1) 대양해군 건설과 항공모함 증축

시진핑 정부가 추구하는 인민해방군 해군은 한마디로 강하고 현대화된 해군이다. 강한 해군 건설은 기존의 근해방어(近海防禦)뿐만 아니라 원해호위(遠海護衛)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수세 위주가 아닌 공세적 해군으로 성장과 원양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해군, 이른바 대양해군(blue-water navy)을 의미한다.⁵⁵⁾ 이는 중국이 대만 문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과 같은 핵심이익을 수호하고 말라카해협 주변 해상교통로 장악과 해외 해군기지 건설 등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뿐만 아니라 무력 투사라는 보다 적극적 태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강한 해군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항모 전단 구축이다. 중국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 사이에 총 세 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었다. 제1호와 제2호 항공모함은 랴오닝(遼寧)함과 산둥(山東)함으로, 각각 지난 2012년과 2019년에 취역하였다. 랴오닝함은 1998년 구소련(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낡은 항공모함을 개조한 것이고, 산둥함은 랴오닝함을 모방한 군함이다. 이에 반해 2022년 6월 진수한 제3호 푸젠함은 중국이 최초로 완전 자체 개발한 것으로, 기존 두 척에 비해 훨씬 발전된 전자식 캐터펄트(catapult, 발진) 기술이 적용되었다. 미국 외 지역에서 건조된 항공모함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55) 임경한 외(2015), p. 182.

기술도 가장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만재 배수량은 8만여 톤에 이르며, 흘수선은 약 300m, 비행갑판 길이는 320m, 폭은 78m로, 1961년에 취역한 미국의 키티호크(Kitty Hawk)급 항공모함과 비슷한 크기다.⁵⁶⁾

중국은 항공모함 이름으로 연안 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푸젠은 대만과 마주하고 있는 중국 동남부 성(省)을 가리킨다. 대만해협 서쪽에 있는 중요 해군 거점으로, 중국의 전초기지과 같은 곳이다.

중국은 2035년까지 총 여섯 척의 항공모함을 운영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더욱 확대해 미국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추기를 원한다. 대만 국립정치대학 천원지아(陳文甲)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랴오닝·산둥 이외에) 2027년 이전에 항공모함 세 척을 추가로 건조하고 2035년까지 총 여섯 척을 보유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11척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초월해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이다.⁵⁷⁾

〈표 2-6〉 중국 함정 증강 추이

단위: 척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1년
탄도미사일잠수함(SSB)	1	2	4	4	6
원자력 추진공격잠수함(SSN)	6	6	5	6	9
디젤공격잠수함(SS)	51	54	53	46	56
항공모함(CV)	0	0	1	2	2
구축함(DD)	21	25	21	32	32
호위함(FF)	43	49	52	49	48
경호위함(FFL)	0	0	15	49	51
해안경비정(PC)	51	85	86	86	86
상륙함·상륙정(LST/LPD/LSM)	43	55	57	58	57
중국 총 함정	216	276	294	333	348
미국 총 함정	291	285	289	296	296
미국 함정 수 - 중국 함정 수	+75	+9	-5	-37	-52

자료: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2), pp. 7-8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56) 이 항공모함의 이름은 당초 '장쑤(江蘇)'로 알려졌었으나 진수식 때 정식 명칭이 푸젠함으로 공개됐다.

57) Newtalk(2021.4.23.)(검색일: 2022.5.14.)

이 밖에 시진핑 지도부는 2015년 ‘국방백서(《中國的軍事戰略》白皮書)’에서 “근해지역의 심층적인 방어능력은 물로 원해호위를 핵심으로 하는 원해 작전능력을 발전시킨다”라는 해군 전략 목표를 명시하였다.⁵⁸⁾ 이는 1980년대 류화칭의 제안으로 시작된 근해방어전략이 30년 만에 ‘대양해군 전략’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이다. 중국은 1998년 이후 총 아홉 권의 국방백서를 발간했는데 2015년 국방백서에서 해양권익, 해상방향, 해외이익, 영해주권, 해상군사 투쟁, 해상군사 역량, 해양강국, 해상교통로, 해군전략 전환 등 개념이 과거 국방백서보다 훨씬 더 많이 언급되었다.⁵⁹⁾

(2) 해외 해군기지 건설과 글로벌 협력 강화

중국은 다른 국가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자국 해군의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남부와 동남아, 서남아를 거쳐 인도양과 아프리카까지 일대일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와 비슷한 형태로 확장된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과 군사전문가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소위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ls strategy)’이라고 분석하면서, 인도양 등 연안 국가의 항구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중국 남부에서 파키스탄까지 이어지는 해군기지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중국의 해군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⁶⁰⁾

중국의 첫 해외 해군기지는 아프리카 지부티(Djibouti)에 건설되었다. 지부티는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약소국이지만, 아덴만-홍해-수에즈 운하를 연결하는 해상교통 요충지로 지정학적 중요성이 매우 높다. 지부티에는 원래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강대국들이 군사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중국 또한 2016년 2월부터 보급기지 건설에 착수하였다.⁶¹⁾ 중국 국방부는

58) 안슬기, 앞의 책, pp. 7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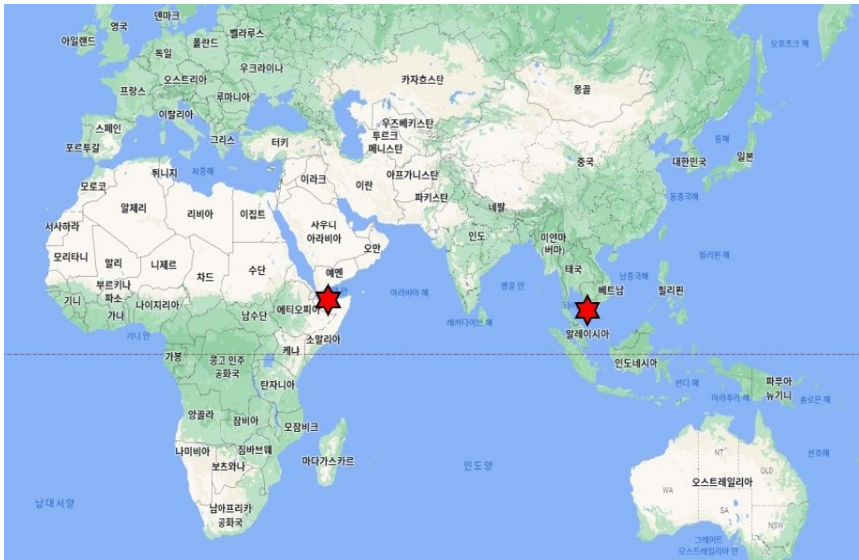
59) 謝游麟(2017), p. 34.

60) Washington Times(2005.1.17.)(검색일: 2022.12.16.), China Briefing News(2009.3.18.)(검색일: 2022.10.7.), Khurana(2008) pp. 1-39, Ashraf(2017), pp. 166-181.

이 기지 건설이 중국군의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함선 보호, 인도주의적 구조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⁶²⁾

지부티에 이어 2022년 6월에는 캄보디아 레암(Ream) 기지에 두 번째 해외 해군 거점을 확보했다.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 확장 및 현대화 프로젝트를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것인데, 미국 등 서방은 레암 기지가 중국의 남중국해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첫 군사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 베트남 등과 도서 영유권 문제를 겪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도양 진출에 전략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 아프리카 지부티와 캄보디아 레암 기지 위치



자료: 구글 지도에 저자가 표시

61) 양정학 · 김순수(2017), p. 132.

62) 위의 논문, pp. 137-138.

이 밖에 중국은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와 아프리카 중서부 적도기니에서도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 솔로몬제도와 2022년 4월 안보 협정을 맺었으며, 적도기니와는 2021년 12월 자국 군사기지 건설을 목표로 정부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서양 연안에 있는 적도기니에 군사기지 건설이 현실화하면 미국 동부 해안 맞은편에 중국 군함이 상시 주둔하여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한편, 최근 중국이 우방인 러시아, 파키스탄과 해상 연합훈련을 잇달아 진행하는 등 해양안보 측면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2012년부터 해상 연합훈련을 시행해 왔다.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정례화된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훈련 규모가 커지고 동원 자산도 다원화되는 추세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함정이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인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인근 해상을 통과하는 상황도 최근 자주 목격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파키스탄과 최근 경제, 기술, 군사 등 측면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파키스탄 서부 남단에 중국의 해·공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양국은 2020년 1월 북아라비아해(North Arabian Sea)에서 합동 해상 훈련을 시행하였고, 2022년 7월에는 ‘시 가디언즈-2’ 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해상 연합훈련이 ‘제삼자’, 즉 미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미국 등 서방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러시아 및 파키스탄 등 우방국들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또한 중국의 해양강국 건설과 일대일로 추진이라는 전략적 측면에서 해외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표 2-7〉 중·러의 해상 연합 군사훈련 현황(2012-2022)

일시	명칭	장소
2012년 4월	해상연합-2012	중국 산둥성 칭다오 (서해 수역)
2013년 7월	해상연합-2013	러시아 극동 (표트르대제만)
2014년 5월	해상연합-2014	동중국해 북부 해공역 (센카쿠 열도 인근)
2015년 5월	해상연합-2015(Ⅰ)	지중해
2015년 8월	해상연합-2015(Ⅱ)	러시아 극동 (표트르대제만)
2016년 9월	해상연합-2016	남중국해 (하이난다오 동부 해역 추정)
2017년 7월	해상연합-2017(Ⅰ)	발트해
2017년 9월	해상연합-2017(Ⅱ)	러시아 극동 (표트르대제만 및 오후츠크해)
2018년(추정)	해상연합-2018	중국 산둥성 (서해 수역)
2019년 5월	해상연합-2019	중국 산둥성 칭다오 인근 공역 (서해 수역)
2021년 10월	해상연합-2021	러시아 극동 (표트르대제만)
2022년 12월	해상연합-2022	동중국해 (중국 저장성 인근 해역)

자료: 김선재·김태호(2020)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최신 동향을 추가하여 작성

3) 해경 출범 및 해상 법집행 강화

중국 해양력 팽창의 또 다른 사례로 해상에서 중국 정부의 법집행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중국해양경찰국(China Coast Guard, 이하 해경국)이 선도하고 있다. 해양강국 건설 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가 해경국의 출범이다.⁶³⁾ 해양 관리 업무는 그전까지만

해도 국토자원부 국가해양국, 해양감시대(海監), 농업부 어정국(어업 관리), 해양경찰 변방관리국(연안 방어), 해관총서 집사국(緝私局, 해상 밀수 적발 업무 처리)이 각각 담당하였다.⁶⁴⁾ 그런데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분산된 복수의 부처에서 처리함에 따라 행정 비용 낭비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3년 7월 해경국을 설립하고 해상에서의 범죄단속, 치안보호, 해상수색구조 등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다.

중국 해경은 2013년 출범 이후 매년 조직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역할 또한 강화하고 있다. 가령, 중국 해경이 보유한 배수량 1,000톤 이상 대형 함정은 2012년에만 해도 40여 척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131척으로 급증했다.⁶⁵⁾ 중국 정부는 2018년 해경을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부대로 재편하고, 중국 해경법(海警法)은 제1장 총칙 제2조에서 "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부대, 즉 해경기구는 해상권의 보호와 법집행 직무를 모두 수행한다"라고 명시했다.⁶⁶⁾ 이로써 해경은 법집행 권한과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군 업무와는 구별되지만, 무력행사 권한을 또한 갖추고 있다. 가령 평상시에는 해경이 최전방, 해군이 후방에서 국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해경이 해군의 예비군이 되어, 주로 근해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⁶⁷⁾ 원래 국가해양국 산하에 있었던 해경이 해양주권 수호를 담당하는 준(準)군사조직으로 승급된 것이다. 해경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황해(서해)를 담당하는 동해분국, 남해분국, 북해분국을 각각 내부 조직으로 두고 있다.⁶⁸⁾

63) 전체 명칭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해경총대(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海警总队, Chinese People's Armed Police Force Coast Guard Corps)이다.

64) 彭克慧(2017), pp. 200-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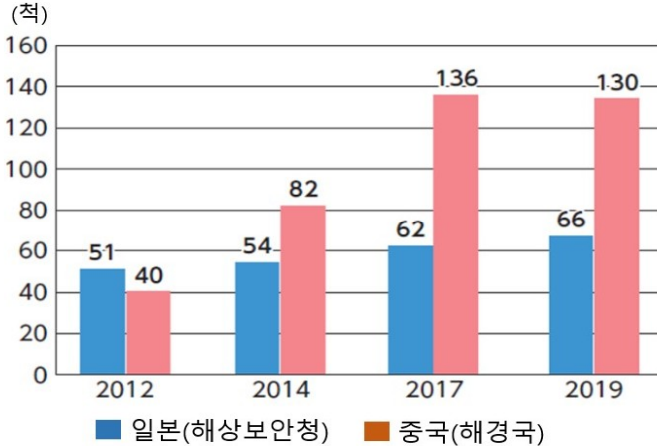
65) Japan Ministry of Defense(검색일: 2023.2.19.)

66) 中国人大网(2021.1.22.)(검색일: 2023.2.19.)

67) 鍾永和(2019), p. 43.

68) 人民网(2013.7.23.)(검색일: 2022.12.3.)

〈그림 2-4〉 중국 해경 배수량 1,000톤 이상 대형함정 수



자료: Japan Ministry of Defense(검색일: 2023.2.19.)

중국 정부는 해경의 활동 내용과 권한 등에 대해서 2021년 1월 제정하고 2월 발효한 해경법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외국 선박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요건들을 규정하면서 해경의 공권력 행사 범위를 강화하였다.⁶⁹⁾ 가령, 해경법 제22조에서는 “국가주권, 주권 권리와 관할권이 해상에서 불법 침해당하거나 긴박한 위협에 처했을 때 해경 기구는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무기 사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 위협을 제거할 권한이 있다”라고 명시하였다.⁷⁰⁾

이 때문에 중국 주변 국가에서는 중국 해경이 해상에서 비상시에 군사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등 공권력 행사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69) 유현정(2021), pp. 1-3.

70) 중국 해경법 제22조 원문: 第二十二条. 国家主权、主权利和管辖权在海上正在受到外国组织和个人不法侵害或者面临不法侵害的紧迫危险时，海警机构有权依照本法和其他相关法律、法规，采取包括使用武器在内的一切必要措施制止侵害、排除危险。

4) 해양경제 강화

중국의 해양강국 건설 계획에서 또 다른 중요 요소는 해양경제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책이다. 제18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 전 주석이 해양강국 건설 계획을 발표했을 때 해양자원 개발 능력 향상, 해양경제 발전, 해양 생태 환경 보호, 국가 해양권익 수호가 중요 이슈로 언급되었다. 대부분 해양경제와 관련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이후 2018년 12월 24일 중국 자연자원부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해양경제의 발전과 해양발전의 가속화에 관한 보고’라는 제목으로 해양경제 발전이란 △해양 개발 능력 향상, △해양산업 구조 개선, △현대적인 해양산업 시스템 구축이라고 밝혔다.⁷¹⁾ 동월 자연자원부는 중국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와 공동으로 〈해양경제 발전 시범구 건설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통지에 따라 산둥성의 열 개 도시와 톈진시의 네 개 항이 해양경제 발전 시범 구역으로 지정되었다.⁷²⁾

이 밖에 원양 어선 능력 제고 등 조선산업과 해운산업 발전도 해양강국 건설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된다. 조선산업 능력은 곧 함정 건조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며, 해운 부문의 발전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해상교통로 안정 등 해양안보와도 연계되는 문제이므로 중국 정부가 특히 주목하고 있다. 중국 공신부는 2017년 ‘선박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전환 행동 계획(2016~2020)’을 발표하고,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년~2020년) 중국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산업 발전 수준 제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중국 조선산업의 고도화 및 친환경화, 연구개발, 기술 제고 등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선박과 친환경 에너지 절약 선박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⁷³⁾

71) 中国人大网(2018.12.24.)(검색일: 2022.10.6.)

72) 凤凰网(2019.6.11.)(검색일: 2022.10.8.)

73) KOTRA(2021.9.17.)(검색일: 2022.10.6.)

한편, 중국 정부가 2021년 3월 발표한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비전’에서는 선박 및 해양 엔지니어링 장비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고, 선박 산업 체인 경쟁력 강화와 크루즈 선박,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및 심해 석유 및 가스 생산 플랫폼과 같은 R&D 응용 프로그램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⁷⁴⁾ 이와 같은 해양경제 발전 시범 구역 지정, 조선산업 및 해운산업 고도화 등 구체적인 조치들은 중국의 해양강국 건설 전략의 해양경제 부문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5) 해양 거버넌스 구축

중국은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해양 제도를 정비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해양 문제를 전담할 통합 행정기구 구축을 위해서 2018년에 국가해양국을 다른 부처 등과 통합해 자연자원부를 출범하였다. 이로써 국가해양국은 농업부, 수리부, 주택 및 도농 건설부, 임업국의 일부 부서 등과 함께 자연자원부로 통합되어 해양을 포함한 모든 국토 공간 이용 통제와 생태 보호를 책임지는 국무원 산하 부서로 승급되었다. 이 부처는 중앙정부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해양강국 건설 전략 추진을 담당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 발전 전략 및 장기 계획과 개혁 정책을 결정 및 집행하는 기구다.

자연자원부에는 북해, 동해(동중국해), 남해(남중국해) 세 개의 해역을 구별해 기구를 설립하였다. 자연자원부는 해양전략 계획의 실행과 해양경제 발전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는다. 해양 개발, 심해 및 극지 등에 대한 전략 수립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 역시 자연자원부의 임무다. 이 밖에 무인도, 해역, 해저 지형 이름에 대한 관리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영해 기점 제정과 같은 특수한 목적의 도서 관리 업무도 책임지고 있다. 해양관측 및 예보, 조기경보 모니터링 및 주요 해양 재난에 대한 비상 대응에도 참여한다.⁷⁵⁾

74) 위의 자료.

3. 중국의 패권국가로서의 특징

1) 권위주의 체제

중국이 기존의 패권국가인 미국에 대한 도전 세력, 더욱이 기존 패권국가가 구축해 놓은 질서에 불만족한 도전국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중국이 미국과 다른 권위주의(authoritarian regime) 정치 체제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체제는 간단히 말해 강력한 중앙 권력과 정치적 자유의 제한성을 특징으로 한다. 미국과 그 동맹국, 서방 국가들은 자유의 가치, 다당제와 법치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이거나 그것을 지향한다. 반면, 중국은 평등의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일당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권위주의 정치 체제이다. 권위주의를 개념화한 비교정치학자, 후안 린츠(Juan Linz)는 △정치적 다원주의의 제한성, △정교하고 지도력 있는 이데올로기의 부재,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정치적 동원(반체제 활동)의 부재, △권력 행사의 비공식성과 불분명성을 권위주의의 특징이라고 보았다.⁷⁶⁾

미국의 시각에서 중국은 과거 소련이나 일본과 달리 경제, 군사, 정치체제 측면에서 동시에 미국의 기존 패권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중국을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이나 냉전 시기 소련을 훨씬 능가하는 도전자로 간주하는 미국의 관점에 서방 세계는 전반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가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2022년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한 새 전략 개념(Strategic Concept)을 채택했다. 이는 NATO가 향후 10년 청사진을 그리는 보고서에서 중국에 의한 도전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⁷⁷⁾ 중국의 도전에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동

75) 중국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 공식 홈페이지(검색일: 2022.10.9.) 참고

76) Schlumberger(2017.12.6.)(검색일: 2023.2.19.)

시에 미·중 패권 경쟁의 범위와 정도가 모두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며, 따라서 양국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면서 양 진영(bloc) 간 경쟁으로 확산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학자 중에서는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통한 매력 공세(charm offensive)⁷⁸⁾나 중국공산당의 통치 능력을 활용해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보다 낫다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 경제의 무기화

중국은 대만 또는 타국과 정치적 갈등을 겪을 때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이 우위에 있는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전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른바 경제의 무기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후진타오 시기부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력에 힘입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국의 정치적 입장을 이전 정부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표명하게 된 것이다. 개혁개방 직후 중국은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도광양晦(韜光養晦)⁷⁹⁾ 외교 방침을 내세우며 소극적인 비개입주의 외교정책을 추구했다.

하지만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으로 극복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과 서방 세계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국제사회에서 약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중국이 경제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중국은 빈번하게 이 전술을 사용하면서 자국의

77)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2022.6.30.)(검색일: 2023.1.3.)

78) 국제 관계에서 매력 공세란 한 국가가 주변국에 대하여 협력적, 평화적, 건설적 태도로 외교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주변국들이 이 국가에 대한 인식 또는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가는 과정을 뜻한다. 한석희(2008), p. 365 참조.

79) 힘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때를 기다린다는 뜻.

핵심이익이나 외교 목적을 공표하고 관철하는 데 사용하였다. 대표적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전 프랑스 파리에서 티베트기가 게양된 이후 프랑스 유통업체인 까르푸에 대해 중국인들이 벌인 대규모 보이콧이나, 같은 해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유럽연합 의장으로서 티베트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회견한 뒤 중국이 프랑스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 계약을 취소한 것 등은 널리 알려진 사례다.⁸⁰⁾ 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과 필리핀 간 스카버러섬(Scarborough Shoal, 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영유권 갈등으로 중국이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을 일시 중단한 것, 2017년 한국의 사드(THAAD) 설치 결정 이후 한국산 수입품, 문화상품 수입 제한 및 관광객 송출 금지 등 광범위한 비공식 경제 제재를 시행한 것도 중국이 경제를 무기화해 타국과의 정치적 갈등에 대응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특징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스스로 명명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즉 중국 특유의 정치경제 체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주권, 국가안보, 통일 등과 같은 핵심이익을 위해 일시적인 경제적 손실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권을 유지하는 데 치명적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체제 국가처럼 선거에 의해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경우 경제적 타격은 국내 기업과 유권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선거에서 집권당이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일당독재 당국가(party-state) 체제인 중국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를 무기화하여, 설사 단기적으로 자국 내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당할 만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자유시장 경쟁을 지향하고, 정치의 경제 분야 개입이나 조작을 제한하는 시장 자본주의 기반 민주주의 체제와는 상반되는 특징이다.

80) 정현욱(2018), p. 347.

3) 힘에 기반한 팽창적 해양정책

중국이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등장하기 전 세계질서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유주의 질서였다. 이는 다시 말해 규칙 기반 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로, 해양질서에서도 적용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을 기초로 하는 규칙에 각국이 합의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함으로써 규칙 기반 해양질서가 형성된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해양질서 측면에서도 일종의 전환점으로, 기존 질서 구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이 힘에 기반한 팽창적 해양정책을 추구하면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해양에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가령,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해상민병대’라는 특수한 조직을 활용하여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합법적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관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빈번하게 자행하고 있다. 국제법을 위반하는 해상민병대의 활동은 현재로서는 남중국해에 한정되어 있지만,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잠재적 분쟁 수역인 동중국해와 서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 해상민병대가 이 수역에서도 활동하게 된다면 주변 연안국인 한국과 일본 등에는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이 밖에 중국이 2021년 4월 개정하고 9월부터 시행한 해상교통안전법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취지와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중국의 또 다른 해양질서 변경 시도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 개정법에서 외국 선박이 중국 영해를 통과할 시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중국 법률 및 행정법규와 규칙에 따라 특별 예방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자국 해사관리기관의 지령과 감독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법은 제54조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선박으로 “잠수함, 원자력 추진선박, 방사성 물질 또는 그 밖에 유독·유해 물질을 실은 선박,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규정한 중국의 해상교통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타 선박”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런데 “해상교통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타 선박”은 범위가 모호하고 중국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또한 중국의 사전 허가 조치는 무해통항의 정의를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9조의 취지나 범위를 벗어났다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제3절 미국의 대중 억제정책

1.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정책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의 태도로 일관하여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초래되고 실패한 중국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1) 경제적 제재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을 야기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500억 달러(약 54조 원)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도 제한하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하는 등 무역분쟁으로 시작해서 전방위적(whole-of-government)으로 진행되었다.⁸¹⁾ 양국의 무역분쟁은 2020년 1월 15일 1단계 무역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

81) 김현욱(2020), p. 18.

지면서 합의안이 실행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무역 전쟁을 하게 된 계기로는 우선 미국의 일자리 및 경제적 손실이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잘못된 자유무역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판단에서 시작되었다.⁸²⁾ 또한 양국 간 무역불균형뿐만 아니라 중국의 첨단기술력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즉, 중국이 자국의 첨단기술산업에 불공정하게 지원하게 되면 미국 상품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무역정책은 장기간에 누적되어 온 무역적자 축소와 더불어 미래 경제패권을 담보할 첨단기술을 중국이 보유하는 데 대한 견제라는 두 차원에서 전개되었다.⁸³⁾

2) 인도-태평양 전략 공개

2019년 6월 미 국방부가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중국을 수장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로 표현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지역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으며, 지역 국가들을 빗의 덫(Debt Trap)에 빠뜨리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⁸⁴⁾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방위적으로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였다. 2020년 5월 의회에 제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⁸⁵⁾ 보고서는 대중국 압박을 늘릴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중 경쟁을 이념적 경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 이후 국가보안법 집행에 관여한 홍콩과 중국 당국자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였으며, 홍콩과

82) 김관욱(2022), p. 40.

83) 위의 논문, pp. 42-43.

84) 김현욱, 앞의 책, p. 17.

85) The White House(2020.5.26.)(검색일: 2022.10.11.)

맺은 범죄인 인도 등 세 가지 협정을 중단하거나 종료하였다. 또한 탈주범 인도, 국제수형자 이송, 선박의 국제 운항 수입에 대한 상호 세금 면제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홍콩 정부에 통지했다.⁸⁶⁾

이와 함께, 미·일·인도·호주 4자 협의체(Quad)는 2007년 처음 시도되었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라졌으나, 트럼프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이를 2017년 다시 복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경쟁을 민주주의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 간의 이념적 경쟁으로 간주했다. 처음에는 경제적인 무역 전쟁으로 시작했으나 미·중 관계를 체제 경쟁 내지는 이념 경쟁으로 인식하면서 미국의 목표가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20년 8월, 중국 해군력 현대화에 관한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 유사시, 미국에 대한 ‘접근저지능력(anti-access/area-denial(A2/AD) force)’ 강화라는 우선적 목표 외에 해양 영토분쟁에 대한 중국 입장 옹호 등의 부수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하와이, 괌, 일본 등에 주둔하는 태평양 함대 증강, 서태평양에서의 작전수행 능력 향상 등을 제안하고 있다.⁸⁷⁾

2.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인식과 전략은 트럼프 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바이든 정부도 중국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기존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자주의를 경시하고 일방주의 정책을 추구했던

86) 위의 자료(검색일: 2022.10.11.)

87) Ronald O'Rourke(2022), p. 3.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서 탈퇴했던 국제기구로의 복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 다자주의 복원 등을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⁸⁸⁾

1) 미국의 대중 억제정책

미국의 최근 대중 억제정책은 2022년 2월 바이든 정부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의 최근 세력 확장이 세계질서에 반(反)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⁸⁹⁾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북한 등과 관련된 문제 또한 안보와 관련하여 대응해야 할 문제들로 언급하고 있다.⁹⁰⁾

인도-태평양 전략은 구체적으로 전략적 이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⁹¹⁾

- 1)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촉진하고,
- 2) 역내·외 연결(connections)을 구축하며,
- 3) 지역의 번영을 촉진하고,
- 4) 인도-태평양 안보를 강화하고,
- 5) 초국가적 위협에 대해 지역의 회복력을 구축

전략은 각 목표가 보호하고자 하는 핵심이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방안 또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자유와 개방된 인도-태평양 목표를 위해

88) 최원기(2020), p. 5.

89) The US(2022), p. 5.

90) The US(2022), pp. 5-6.

91) The US(2022), p. 7.

언론의 자유, 시민사회 활동을 보호하여 역내 위치한 개별 국가들의 민주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정 투명성을 개선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국제법에 따른 통치를 이행할 것을 제시한다.

2) 다자주의 중심 협력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지역 관여 강화와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

바이든 정부도 사실상 중국 견제를 목표로 군사안보 분야에서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는 동맹 복원의 핵심 기제로 활용 가능성이 큰 쿼드 차원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연결성과 관련하여 전략은 역내 개별국가들과의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를 제시하면서, 아세안(ASEAN), 쿼드 등 국제기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2022년 5월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안보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통합과 중심,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의 이행을 지지하고,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와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옹호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해양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처할 것을 밝혔다. 또한 분쟁지역의 군사화, 해경 합정과 해상민병대의 위험한 활동, 타국의 해저 자원 개발에 대한 방해 등 지역의 긴장감을 높이고 도발적인 행동에 반대함을 밝혔다.⁹²⁾

아울러 경제 분야에서도 높은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무역에 대한 접근 방법 개발, 디지털 경제와 국가 간 데이터 흐름 관리, 역내 인프라 격차 해소를 번영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을 위해 통합 역지력 증진,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 심화 및 상호운용성 강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조율과 확장 역지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AUKUS의 지속적

92) The White House(2022.5.24.)(검색일: 2022.10.13.)

이행, 기타 초국가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해안경비대(USCG) 주둔과 협력 확대,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태평양 억지력 이니셔티브와 해상안보 이니셔티브에 자금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⁹³⁾

그리고 전략은 지역의 번영을 위해 주요 경제협력체로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구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APEC을 통한 자유 무역 촉진, G7을 통한 역내 인프라 격차를 해소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안보와 관련하여 전략은 역내 국가들과의 동맹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만해협 안보, 신기술 안보,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AUKUS 이행⁹⁴⁾, 미 해안경비대 주둔과 동맹국과의 협력 확대, 태평양 안보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 등을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과 관련하여 전략은 초국가적 위협을 기후변화, 코로나, 자연재해 등으로 정의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해수면 상승 등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코로나 현상을 종식하여 보건안보를 확보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⁹⁵⁾

미국의 이러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특징은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지원과 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전(Challenges) 또는 공격(aggression, coercion)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쿼드⁹⁶⁾, AUKUS,

93) The White House(2022.2.11.)(검색일: 2022.10.13.)

94) The White House(2022.4.5.)(검색일: 2022.9.24.); The Australia-United Kingdom-United States Partnership의 약어로 호주에 전통무기를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공급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강화된 합동 군사력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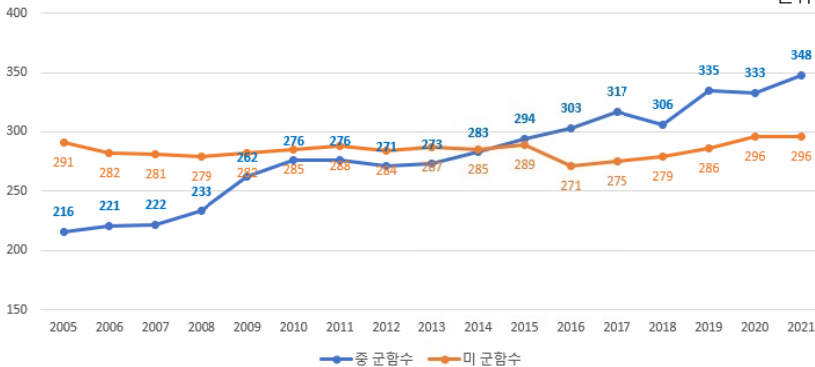
95) The US(2022), pp. 8-14.

96) Sheila A. Smith(2021.3.27.)(검색일: 2022.9.24.);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약어로 2004년 인도양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호주, 인도 일본으로 처음 구성된

ASEAN 등 다자협의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중국의 급속한 대외 팽창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쇠퇴한 미국의 국력을 고려할 때,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⁹⁷⁾ 일례로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진주목걸이 전략’을 추진하여 잠정적으로 중국군의 해외진출을 위한 동남아, 인도, 페르시아만 등을 연결하는 해외 거점항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⁹⁸⁾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쿼드를 중심으로 호주, 일본, 인도와 협력하여 중국의 팽창을 다이아몬드 전략으로 견제하면서 AUKUS를 통해 호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지원하여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만해협의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을 통해 대만해협에 미 해군의 함정들을 현시하면서, 호주, 캐나다, 일본 등과 연합 FONOP을 수행하고, 동시에 대만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하여 대만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다.⁹⁹⁾

〈그림 2-5〉 미·중 연도별 해군함정 수 변화 추이

단위 : 척



자료: Ronald O'Rourke(2022.3.8.), p. 7 참조하여 저자 편집

협의체이다. 쿼드는 현재 안보, 경제, 보건 등과 관련하여 폭넓은 의제를 회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의 공격적 패권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대중 제재, 조어도 등 영유권 분쟁, 항행의 자유 작전 등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97) 서동주(2022), p. 47.

98) 아시아경제(2021.6.13.)(검색일: 2022.9.24.); 연합뉴스(2022.4.27.)(검색일: 2022.9.24.); 연합뉴스(2022.7.4.)(검색일: 2022.9.24.)

99) 한겨레(2022.6.9.)(검색일: 2022.9.24.)

사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압박 정책은 트럼프 정부의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미국 우선주의를 승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⁰⁾ 다만, 정책 실현의 방법에 있어 과거 동맹국과 우호국과의 관계를 미국의 이익 실현을 위한 거래 관계로 설정하였다면, 바이든 정부는 협력과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해 열 가지 행동계획으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안보 지원 등을 약속하고 IPEF를 통한 경제적 지원, 대만해협 등을 포함한 지역 안보 확보를 위한 동맹·우호국 지원(AUKUS 포함), ASEAN 지원, 남아시아 지역 안정을 위한 인도 리더십 지원, 한·미·일 협력 확대, 쿼드 약속 이행, 기술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¹⁰¹⁾ 사실 바이든은 취임 직후 과거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이 국제사회의 미국에 대한 신뢰를 실추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쇠퇴한 미국의 국제 리더십을 회복하겠다고 공언하였다.¹⁰²⁾ 이는 과거 미국 정부의 대중 정책의 방향성은 적절했지만, 이행방안이 과도하게 미국 우선주의에 편중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동맹국과 우방국의 역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의지로 보인다. 다만, 향후 동맹국들의 이익과 미국의 국익이 양립할 경우 미국의 지원이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대중 안보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은 주로 대만해협 문제, 쿼드, AUKUS, IPEF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별 동맹국과 우호국에 대한 지원이 현재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 G7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

2022년 6월 28일 G7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사이버문제, 노동, 기업,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21세기 과제에 대해 G7

100) 김영준(2021.4.26.), pp. 5-6.

101) The US(2022), pp. 15-17.

102) Joseph R. Biden, Jr.(2020.3.)(검색일: 2022.9.24.)

국가들이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세계 경제의 50% 이상을 대표하는 G7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인 가장 강력한 협의체임을 강조했다.¹⁰³⁾ 그리고 협력의 방향은 (1)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통일된 접근 방식, (2) 공급망 탄력성/ 회복력(resilience) 제고, (3) 사이버 및 양자기술 협력, (4) 민주적이고 시장지향적 접근법을 반영한 무역기술위원회 표준 향상, (5) 강제노동과 인권 문제에 대한 대처, (6) 민주적 회복력의 중요성 인식 등을 제시했다.¹⁰⁴⁾

즉, 중국의 불공정 관행이 시장을 왜곡하고 전 세계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업과 근로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도록 중국의 비시장 정책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공급망 충격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취약점을 분석하고 물류의 병목현상을 식별, 모니터링,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전 세계 안보와 안정성을 저해하는 장기적 위협에 대해 조율할 것을 제안했다. 지속가능하며 투명한 중요 광물 공급망 개발을 강화하고 가공, 정제, 재활용을 고려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G7 국가와의 사이버 협력을 강화하고 향상시킬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중국과 경쟁함에 있어 무역, 기술, 혁신에 대한 민주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접근의 확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G7과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세네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도자들과 함께 권위주의적 위협에 대한 민주주의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¹⁰⁵⁾

103) The White House(2022.6.28.)(검색일: 2022.9.2.)

104) 위의 자료(검색일: 2022.9.2.)

105) 위의 자료(검색일: 2022.9.2.)

3. 미국의 대중 정책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이해관계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호주와 더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일본은 미국의 대중 압박정책에 있어 쿼드의 일원으로 중국의 인도-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일본은 이미 중국과 동중국해 조어도 영유권 문제 등을 놓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다만, 일본과 중국의 분쟁 양상은 미국의 대중 정책과 상이한 면이 존재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구축에 있어 가장 큰 도전으로 정의하고 중국의 부상을 안보 문제와 결부하여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경제·외교 관계로 이해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인도, 호주뿐만 아니라 ASEAN 국가들과도 안보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남중국해 조어도 문제 등으로 대중 견제 정책을 신중하게 펼치면서 주변국과의 협력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이러한 일본의 역할을 인지하여 일본이 참여하는 쿼드의 전략적 입장을 비전통안보 분야의 우선적 협력 기제로 설정하고 향후 안보 협력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최우방국으로 우선 협력해야 할 국가로 언급되어 있으나, 대중 견제를 위한 전략적 협력보다 북한 문제를 억제하기 위한 협력국으로 우선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한미 관계는 대(對)북 군사안보 분야 협력을 넘어 경제, 기술,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¹⁰⁶⁾ ‘22.5.21.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한국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낮추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2022년 5월 23일 출범한 미국 주도의 경제프레임워크인 IPEF에도 참여했다.

106) 이동규(2022), p. 1.

제4절 미·중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의 특징

1. 탈세계화·신냉전 시기 진입

미·중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의 특징으로 먼저, 탈세계화와 탈세계화의 주요 현상으로 나타나는 신냉전을 들 수 있다. 탈세계화(degloabalization)란 국가 간 상호의존과 통합이 약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1990년부터 약 30년간 지속된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반대 개념이다. 이에 따라 국가 사이의 무역과 투자가 감소하고 국제정치 관계에서는 통합에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난다.¹⁰⁷⁾ 세계화가 가치의 보편화를 지향했다면 탈세계화는 ‘가치’의 진영화를 지향하는데,¹⁰⁸⁾ 진영 내의 결속을 다지고 다른 진영과는 대결(경쟁과 갈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탈세계화는 신냉전을 초래한다.¹⁰⁹⁾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트럼프 정부 이후 격화된 미·중 간의 통상 분쟁, 2020년 영국의 EU 탈퇴, 코로나 19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들 수 있다.¹¹⁰⁾ 다만, 주의할 점은 탈세계화가 세계화로부터의 전적인 일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탈세계화 시기에 진입한 현시점을 ‘세계화의 정체’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¹¹¹⁾ 즉,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화가 진행되어 글로벌 통합이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은 진행 상황이 정체되고 일부 반대작용도 나타나고 있지만, 과거 20~30년 전과 비교할 때 세계화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탈세계화로 대표되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107) 이상환(2022), p. 2.

108) 구냉전 구도에서는 정치적 이념이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권위주의), 경제적 이념이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의 가치대립을 보였다면, 신냉전 구도에서는 정치적 이념 대립은 동일하나 경제적 이념 대립은 시장 자본주의 대 국가자본주의로 양상이 변화했다. 위의 책,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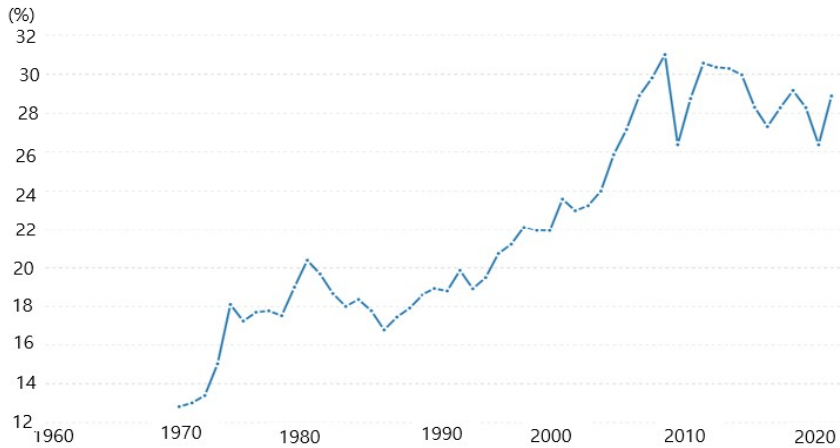
109) 위의 책, p. 3.

110) 위의 책, p. 20.

111) 위의 책, p. 21.

우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세계화 속에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원리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림 2-6>은 국가들의 GDP 대비 상품과 서비스 수출 비중의 증가가 대략 2010년 이후 정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6〉 세계 상품과 서비스 수출



자료: World Bank (검색일: 2023.2.27.)

이 보고서와 관련해서 탈세계화·신냉전의 특징은 크게 소다자 체제의 강화와 진영 간 대립의 심화를 들 수 있다. 소다자 체제의 강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 측면의 쿼드, AUKUS, 인도-태평양 전략, 파이프 아이즈(Five Eyes, 정보동맹), 그리고 경제 측면의 IPEF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¹¹²⁾

소다자 체제의 강화는 특히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안보 및 경제적 소다자 체제를 결성하여, 중국에 맞서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며 관련국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이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다자

112) AUKUS와 인도-태평양 전략은 경제적 협력 네트워크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체제의 강화는 세계화의 특징이었던 다자주의 체제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국가 간 무역분쟁에서 WTO의 역할이 감소하고, 코로나19의 대응에서 보듯이 WHO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엔(안보리)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소다자 체제의 강화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진영 간 대립의 심화이다. 여기서 진영 간 대립이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치적 이념에서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권위주의), 경제적 이념에서는 시장자본주의 대 국가자본주의의 대립을 말한다. 이러한 진영 간 대립은 일반적으로 미·중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 과정과 궤적을 같이한다. 미국은 패권 도전국인 중국에 맞서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국가들을 결집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강화하면서 일대일로 등을 통해 개도국들과 협력 전선을 구축하면서 미국의 제재에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가치 중심의 진영 간 대립의 심화는 진영 구분이 명확한 국가들(예: 호주, 일본, 뉴질랜드,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정책 결정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가치 우선과 이익 우선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많은 국가들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온다.¹¹³⁾

2. 전통적 의미의 패권적 지위 약화와 파트너 역할 증대

미·중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으로 전통적 의미의 패권적 지위가 약화되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패권국으로서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감소했으며, 오늘날 패권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등이 절대적 우위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113) 이상환, 앞의 책, p. 26.

이와 같이 패권국의 영향력 약화는 앞서 탈세계화의 특징으로 기술한 바와 같이 소다자 체제 강화와 진영 간 대립 심화를 불러오며, 이는 결국 패권국의 동맹 및 파트너들의 역할이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쿼드와 같은 소다자 체제를 구축하여 중국에 맞서고, 중국은 그에 대응하여 러시아 등과 협력 관계를 견고히 함으로써 선명한 진영 간 대립 관계가 나타난다.

2010년대 중반 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기존의 포용주의적 정책을 포기하고 경쟁자이자 적으로 간주해 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 국방부의 국가안보전략 등의 전략보고서에 반영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특히 중국을 세계질서 재편성 의도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경제·외교·군사·기술력을 모두 가진 유일한 경쟁국으로 묘사하였다.¹¹⁴⁾ 나아가 이 보고서는 오늘날 세계가 민주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사이의 경쟁 관계임을 인식하고, 중국·러시아 등 국가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를 하며, 그 수단으로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통합(integration)을 추구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¹¹⁵⁾ 또한 미 국방부가 발표한 2022년 국가안보전략도 중국을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심각한 도전으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질서를 재구성하려는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노력이라고 보았다.¹¹⁶⁾ 그리고 안보전략 보고서는 통합억제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호주, 인도, 대만, 한국 등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들을 기술하고 있다.¹¹⁷⁾ 이는 미국 입장에서 동아시아에서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지위를

114) The White House, op. cit., p. 23.

115) Ibid., pp. 8, 22. "The PRC is the only competitor with both the intent to reshape the international order and, increasingly, the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and technological power to do it."

116) U.S. Department of Defense(2022), p. 4.

유지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관계 강화는 필수적임을 의미하는데, 이해관계가 복잡한 동맹 및 파트너들로서는 대외 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3. 동아시아 역내 무력충돌 가능성 증가

미·중 간의 갈등과 경쟁의 세계질서 재편은 동아시아 역내 무력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민주주의와 시장주의라는 가치 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한 유일한 위협이자 적국으로 간주해 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점점 더 강경하고 견고해질 수 있다.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전개해 오고 있으며, 중국의 대만 침략 시 대만 수호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일본 또한 아베 내각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하며 국가안보전략에서 해양국가를 일본의 미래 국가상으로 공식화했으며, 2021년 출범한 기시다 내각 역시 아베 내각의 기본 정책들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 예로 2022년 12월 일본은 개정 국가안보전략에서 ‘적 기지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했으며, 임시각의에서 무력공격 발생 시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하는 등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 자위대의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그리고 구체적 방위 장비 조달방침 등을 정리한 방위력 정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국내총생산의 1%(5조 엔) 이내인 방위비를 2027년 2%(11조 엔)까지 높이기로 했는데, 이는 방위비 기준으로 현재 세계 8위에서 세계 4위로 높아지는 것이다.¹¹⁸⁾

117) Ibid., pp. 14-15.

118) 한겨레(2022.12.16.)(검색일: 2023.2.27.).

03

세계질서 재편의 동북아 해양안보에 대한 영향

패권 다툼의 심화로 인한 계획적 또는 우발적 무력충돌은 대만해협, 동중국해의 조어도, 남중국해의 여러 섬을 둘러싸고 발생할 가능성이 크나, 그 외의 지역에서 충돌 발생 여지도 있다.

제1절 동북아 해양의 공간적 범위와 해양안보 대상 영역 -

1. 동북아 해양의 공간적 범위

통상 동북아(Northeast Asia)란 말은 동남아(Southeast Asia)란 말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구체적 범위에 대한 권위 있는 정의가 없어서 사용자 또는 용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통상적으로는 중국의 북쪽 지방, 한국, 일본, 몽고, 러시아 극동지역과 주변 바다를 일컫는다. 그래서 동북아의 해양이라고 하면 동중국해의 위쪽, 서해(황해), 동해, 북동태평양, 오크츠크해가 포함되고, 베링해의 남서쪽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미·중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동북아 해양안보에 대한 영향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에서 기술하는 동북아 해양은 대만해협을 비롯한 대만 주변의 바다부터 동중국해, 서해와 동해로 상정한다. 오후츠크해와 북동태평양은 보고서와 관련성이 낮아 동북아 해양에는 포함되겠지만 그와 관련한 사항을 다루지는 않는다.

2. 해양안보의 대상 영역

‘해양안보’란 ‘해양에서의 안보’의 줄임말로, ‘안보’(security)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영어에서 ‘안보’(security)란 말은 라틴어 ‘securus’에서 유래한 것으로 ‘근심으로부터 자유’라는 의미를 지닌다. 안보를 국가와 연결 지으면 국가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안보는 국가안보 또는 군사안보를 의미하였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외적의 침략뿐만 아니라, 테러 등으로 인한 사회질서 혼란, 국가부도와 같은 경제 위기, 전염병의 확산과 같은 보건·위생 위기,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같은 자연재해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가의 안위 또한 정복으로 인한 국가 소멸처럼 극단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국가 상태를 위협하는 요인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의 폭이 확대되었다.¹¹⁹⁾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특히 밀, 옥수수 등의 곡물(식량)과 석유와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이 공급망 병목현상 내지 붕괴로 인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러 국가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스리랑카와 같은 국가는 경제위기로 인해 국가부도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는 오늘날 식량

119) 비전통적 안보를 다루는 최근 논문으로 다음을 참조. 한종환(2022); 윤지원·배일수(2021).

안보와 에너지 안보 등의 비전통 안보가 국가의 안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해양안보’는 해양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국가에 위협이 되는 다양한 종류의 비전통적 안보를 포함한다. 하지만 본 보고서는 군사안보적 의미의 해양안보를 다루되 비전통적 안보는 특히 동북아 해양과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 해양영토 갈등과 분쟁과 해상교통로로 인한 위협 요인만을 다룬다. 동북아 해양영토 갈등과 분쟁은 특히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중국의 해양력 팽창과 관련성이 깊으며, 해상교통로 위협은 99% 이상 절대적 수치의 수출입 물동량을 해상교통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주제이다.

제2절 동북아 해양의 군사안보에 대한 영향

1. 미·중·일·한의 군사력 현황과 강화 계획

1)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력 현황

2011년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추진 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임을 강조하는 ‘재균형 정책(rebalancing policy)’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해군력의 60%를 해당 지역에 배치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서태평양에서의 제해권을 유지·강화할 의지를 천명했다. 이러한 기조는 다음의 트럼프 정부까지 이어졌으며, 기존의 아태 중심 전략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확대·수정하여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확대 추진 의지는 정부 예산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국 국방·안보 예산 법안인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군사력을 대폭 확대하고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태평양 억지 구상(The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이라는 항목이 2022 회계연도 예산부터 새로이 도입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22년 PDI 규모는 71억 천만달러로, 전체 국방예산 중 1% 정도였으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예산과 관계 지어보면 전체 인도-태평양 지역 예산의 10% 내외로 책정되었다.¹²⁰⁾ 법안에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연합군사훈련 강화와 군사장비 재배치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¹²¹⁾ 이는 2023 회계연도에서 115억 달러로 증액되었으며,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위한 별도의 10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본 예산은 중국-러시아의 전략 경쟁 대응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여 배정되었으며 군사력 현대화, 인공지능 등도 고려 요소에 포함되었다.

미국의 대중 견제를 위한 국방 부문 예산 확대 계획은 미국이 2022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2022년 역대 최대 규모인 7,73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제출하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8.1% 증액한 것으로 중국의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명시하였다.¹²²⁾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 위협에 맞서는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도전 억제 등을 우선 대응 순위로 정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18억 달러를,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는 4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¹²³⁾

한편 미국이 2020년 12월 발표한 <해양에서의 우세: 전 영역 통합 해군력을

120) 손윤진(2022), pp. 6-8.

121) VOA Korea(2020.7.3.)(검색일:2022.9.30.)

122) U.S. Department of Defense(2022.10.27.)(검색일: 2022.11.30.)

123) U.S. Department of Defense(2022.10.27.)(검색일: 2022.11.30.); 중앙일보(2022.3.29.)

통한 우위(Advantage at Sea: Prevailing with Integrated All-Domain Naval Power))는 미 해군·해병대·해경이 공동 발간한 세 번째 해양전략서로, 전 영역 통합 해군력 구축을 위한 전략을 기술하였다. 본 전략서에서는 종전의 전략서와는 달리 중국이 미국에 중요한 위협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중국은 미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 중 가장 심각한 도전이며, 이를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갖춘 포괄적이고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다.¹²⁴⁾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와 그에 따른 해군력 확대 계획은 또 다른 전략서인 <전투력 2045(Battle Force 204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해군은 중국 해군의 세력 확대에 맞서 2045년까지 유인 함정 373척과 무인 함정 150척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¹²⁵⁾ 한편 미국이 2022년 7월 발표한 전략서인 <미 해군참모총장 항해계획(Chief of Naval Operations Navigation Plan)>에 따르면 2040년대에는 350척 이상의 전함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의 2030년 구축 달성 목표치인 425척과 비교해도 한참 밀리는 수치이다. 하지만 미국은 약 150척의 무인 전함 및 무인 잠수함 구축으로 대체하겠다고 설명했다.¹²⁶⁾

이와 같이 미국은 첨단 기술에 기초한 체계적인 해군 전력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함정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작전수행 능력과 미래 해군 전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무인화·자동화와 관련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기뢰전, 대잠전, 감시·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무인체계 분야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추세이다.¹²⁷⁾ 또한 미국은 인공지능 기술 및 첨단 기술력을 활용하여 중국의 해군력보다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극초

124) 정능·정재영(2021), pp. 2-5.

125) USNI News(2022.7.26.)(<검색일: 2022.9.24.>)

126) United States Navy(2022), pp. 9-11.

127) 국방기술진흥연구소(2021), pp. 162-176.

음속 미사일을 개발하여 함정 및 육상 기지에 배치하고 표적 타격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과의 장기적 경쟁에서 승리하고 중국의 비대칭적 능력을 상쇄하기 위한 저비용·고효과의 무기체계 개발 및 운용에 나서고 있다.¹²⁸⁾ <표 3-1>에 나타나 있는 미 해군력의 현 규모와 장기 건조 계획 중 함정 수는 레이건 대통령 시기 이후 최대 규모의 함정 건조 계획으로, 미국이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다.¹²⁹⁾

〈표 3-1〉 미 해군력 현 규모 및 장기 건조 계획

단위 : 척

함정유형	현 규모	장기 계획	에스퍼 계획
항모(CVNs)	11	8-11	8-11
경항모	-	0-6	6
전략잠수함(SSBNs)	10	12	12
공격잠수함(SSNs)	50	72-78	70-80
대지공격 잠수함(SSGNs)	4	-	-
대형 수상전투함(CGs/DDGs)	92	73-88	미 언급, 약 80-90척
중소형 수상함(FFS/LCSs/기뢰전함)	30	60-67	60-70
상륙함	33	61-67	50-60
전투 군수지원함	29	69-87	70-90
지휘 및 지원함	34	27-30	
중대형무인수상함(LUSVs/MUSVs)	-	24-769	140-240
대형무인잠수정(XLUUVs)	-	119-166	
유인함 총계	297	382-446	
무인함 및 선택적 유인함 총계	-	143-242	
총계	297	525-688	500+

자료: 박창권(2021), p. 8.

128) 박창권(2021), pp. 7-8.

129) 위의 책, p. 7.

2) 중국의 주요 군사력 현황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기 위한 전방위적 군사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군(PLAN: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은 해군력 증강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오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2005년에 비교하여 약 75% 성장한 것이며, 각 함대사령부에는 신형 위주의 무기 및 함정을 배치하며 해군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¹³⁰⁾ 중국은 2012년 자국의 최초 항공모함인 랴오닝함 배치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이자 중국의 독자 기술로 건조된 산둥함을 진수하였다. 이후 2022년 6월에는 캐터펄트 사출 방식을 적용한 푸젠함을 진수하는 등 빠른 속도로 항모를 건조해왔다. 이어 중국은 2035년까지 네 척의 항공모함을 추가 건조할 것이라고 밝히며 해군력 증강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¹³¹⁾

이에 미국 역시 중국의 해군력이 20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했음을 인정하며 전함, 잠수함, 항공모함, 연안 초계함 및 쇄빙선 등 다양한 형태의 선박들을 놀라운 속도로 건조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¹³²⁾ 특히 중국은 2021년 한 해 동안 총 29척의 함정을 실전 배치함으로써 해군력 현대화와 함께 막강한 군사력을 구축한 것으로 분석하였다.¹³³⁾ 미국 정부가 중국의 군사력을 평가한 보고서에서는 양국이 동원 가능한 전력 중 우세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으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안보를 저해하는 심각한 군사위협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¹³⁴⁾

130) 윤석준(2020), pp. 1-3.

131) South China Morning Post(2022.6.17.)(검색일: 2022.12.12.)

132) U.S. Navy, U.S. Marine Corps, & U.S. Coast Guard team(2020), pp. 3-5.

133) 094형 탄도미사일 전략 원자력 추진 잠수함(SSBN) 1척, 4만t급으로 중형 항모에 버금가는 075형 대형강습상륙함(LHD) 2척, 아시아 최대인 055형 구축함 3척, 중국판 이지스함 052D형 구축함 7척, 056A형 초계함 6척, 082II형 소해함 6척 등이 이에 해당한다. The Economic Times(2022.1.4.) (검색일: 2022.8.5.)

134) 윤석준, 앞의 책, pp. 1-3.

2005년만 해도 미국 해군이 중국 해군보다 78척 더 많은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5년 255척에서 2020년에는 360척으로 늘어나 2030년에는 425척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¹³⁵⁾ 이는 오늘날 미국의 해군력 운용이 무인 전함, 무인 잠수함 등 하이브리드(hybrid)화되면서 질적으로 우세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은 양적 우위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표 3-2〉 중국과 미국의 해군 전투함 보유 현황 및 전망

단위: 척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중국 해군 전투함	210	220	220	255	360	400	425
미국 해군 전투함	318	282	288	271	297	-	-

주: 2025년과 2030년은 전망치이며, ‘-’는 자료 미공개
 자료: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2), p. 9.

중국은 미국을 이어 수상함, 잠수함, 해양무인체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무인체계 시험시설을 건설하는 등 군 첨단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 추진 중이다.¹³⁶⁾

〈표 3-3〉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사일 전력 현황

미사일 구분	발사대 수	미사일 수	예상 사거리
ICBM	300	300	5,500km 이상
IRBM	250	250 이상	3,000~5,500km
MRBM	250	500 이상	1,000~3,000km
SRBM	200	600 이상	300~1,000km
GLCM	100	300 이상	1,500km 이상

자료: U.S. Department of Defense(2022), p. 167.

13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2), p. 9.

136)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앞의 책, pp. 162~176.

〈표 3-4〉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전력 강화 계획

단위: 척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40년
전략핵잠수함	4	6	8	10
공격잠수함	53	57	60	62
항공모함	2	3	5	6
구축함/순양함	41	52	60	80
호위함/초계함	102	120	135	140
상륙강습함	0	4	4	6
대형상륙함	7	10	14	14
상륙함	30	24	24	15
합계	239	276	310	333

자료: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2), p. 10.

중국은 해군 이외에도 해양경찰과 해상민병대(中華人民共和國天涯民兵, Maritime Militia)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엄청난 규모의 해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운용할 수 있는 선박의 수는 최근 15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해양순찰선, 지역순찰선, 해안순찰선, 근해순찰선 등 모든 유형의 선박 수가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2,500톤 이상급의 해상순찰선 전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증대된 것으로 분석된다.¹³⁷⁾ 중국 해경은 다양한 신형 함정 건조 이외에도 해군의 퇴역함정을 개조하여 도입함으로써 공격적인 경비함 확충에 나서고 있다. 이외에도 함포나 기관포를 장착하여 중무장한 해경 함정의 수도 늘고 있다. 이러한 함정들이 배치되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해경의 공격적인 활동이 예상된다.¹³⁸⁾

137) Erickson & Martinson(2022), 곽대훈 역, pp. 119-120.

138) 최현호(2017), pp. 67-70.

〈표 3-5〉 중국 해경 선박 보유 현황(2005-2020)

단위: 척

등급(형식, 배수량(톤))	2005	2010	2017	2020	15년간 증가 수(%)
해양순찰선 (2,500-10,000)	3	5	55	60	57
지역순찰선 (1,000-2,499)	25	30	70	80	55
지역순찰선 (500-999)	30	65	100	120	90
계: 연안에서 운영 중인 선박수	58	100	225	260	202(350%)
해양순찰선 (100-499)	350	400	450	450	100
근해순찰선/소형선박 (<100)	500+	500+	600+	600+	100(약)
총합: 중국 해안경비대	900+	1,000+	1,275+	1,300+	400(약)

자료: Erickson & Martinson(2022), 광대훈 역, p. 120.

한편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평소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찰활동을 수행하면서 전시에는 군으로 편입되는 일종의 준 군사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해상민병대는 18~35세의 어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조직인데, 중국은 해상민병대의 정확한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그 규모는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고, 난사군도에서는 매일 약 300척의 민병대 함정이 운항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¹³⁹⁾ 중국은 해상민병대가 갖는 모호한 지위를 잘 활용하여 해상민병대를 앞세워 회색지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2009년 하이난섬 인근에서 미국 해양조사선인 임페커블(Impeccable)호의 해양조사활동을 방해한 ‘임페커블호 사건’을 시작으로 해상무력의 새로운 축으로 해상민병대를 운용해나가고 있다.

139) 최영찬(2022), p. 121, 재인용: 해군미래혁신연구단(2022), p. 311.; South China Morning Post (2021.11.19.)(검색일: 2022.12.19.)

〈표 3-6〉 중국의 해상민병대 규모 추정

구분	원해 수송분대	외해 지원분대	근해 지원분대
톤수	200톤 이상	50~200톤	50톤 이하
항속거리	1,000NM 이상	500~1,000NM	5,000NM 이내
선박종류	대형 철선, 화물선	중형 철선, 화물선	소형 철선, 목선
주요 임무	원해 정찰 및 감시 물자 및 인원 수송	해상 정찰 및 감시 해안방어 해상유격전	항만 및 기지 방호 탐색 및 구조 환자 수송

자료: 최영찬(2022), p. 121, 재인용: 해군미래혁신연구단(2022), p. 311.

3) 일본의 군사력 현황

가. 주요 군사력 현황

일본은 헌법상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현행 일본국 헌법 제9조에서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영구히 포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⁴⁰⁾ 이 규정에 따라 군대가 아닌 자위대라는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잘 훈련된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군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부 조직 역시 일반적인 군대와 동일하게 육·해·공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보유 전력 현황은 〈표 3-8〉, 〈표 3-9〉와 같다.

140) 日本国憲法(검색일: 2022.11.10.)

〈표 3-7〉 일본 해상자위대 보유 전력 현황

구분		보유
병력※		42,435명
호위함		47척
잠수함		21척
기뢰함정		22척
초계함정		6척
운송함정		11척
보조함정		30척
항공기	고정익(초계/구난)	73/6대
	회전익(초계/소해, 운송)	83/10대

주: ※ 병력은 2022년 3월 31일 기준, 그 외 자료는 2021년 3월 31일 기준
 자료: 令和3年版 防衛白書 資料 5(검색일: 2022.10.15.), 資料 6(검색일: 2022.10.15.), 防衛省 · 自衛隊, 防衛省 · 自衛隊の人員構成(검색일: 2022.10.15.)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8〉 일본 항공자위대 보유 전력 현황

구분		보유
병력※		43,720명
고정익	전투기	318대
	수송	25대
	공중급유/수송	7대
	조기경계/조기경계 관제	13대/7대
회전익	수송	15대
	구난	41대

주: ※ 병력은 2022년 3월 31일 기준, 그 외 자료는 2021년 3월 31일 기준
 자료: 令和3年版 防衛白書 資料 5(검색일: 2022.10.15.), 資料 6(검색일: 2022.10.15.), 防衛省 · 自衛隊, 防衛省 · 自衛隊の人員構成(검색일: 2022.10.15.)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일본 방위비(방위관계비)는 방위력 정비, 자위대 유지운영 경비, 기지 주변 대책 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도 방위비는 5조 1,788억 엔으로 GDP 대비 약 0.9%이다. 2021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530억 달러로 미국(7,176억 달러), 중국(3,242억 달러), 러시아(1,356달러), 영국(689억 달러), 프랑스(668억 달러), 독일(642억 달러) 등 주요 국가와 비교

했을 때 일본의 국방비가 가장 낮았다. 한편,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미국이 3.12%, 러시아 2.73%, 영국 1.99%, 프랑스 1.92%, 독일 1.31%이며,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향후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2%까지 증액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¹⁴¹⁾

〈표 3-9〉 일본 방위비 추이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방위비*(억엔)	49,388	50,070	50,688	51,235	51,788
GDP 대비 방위비(%)	0.875	0.884	0.889	0.916	0.917

주: ※ 미·일특별행동위원회(SACO) 관계 경비, 미군 재편 관계 경비 중 지역부담 경감분, 새 정부 전용기도 입 경비, 방재, 국토강인화 3개년 긴급 대체 소요 경비 제외
 자료: 防衛省・自衛隊, 令和4年版 防衛白書 資料編, p. 54 바탕으로 저자 작성

아울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자위대법 제84조에 근거해 대영공 침범조치에 대해 일차적으로 항공자위대에서 관할하고 있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은 이어도 상공에서는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센카쿠 열도 주변 및 동중국해 일부 수역에서는 일본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어 있다. 그리고 방위백서의 그림에서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지만 요나구니섬 상공에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대만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어 있다.

〈그림 3-1〉 일본과 주변국 및 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자료: 防衛省・自衛隊, 令和2年版 防衛白書, わが国の主権を侵害する行為に対する措置(검색일: 2022. 11.15.); Taipei Times(2010.6.26.)(검색일: 2022.11.15.) 바탕으로 저자 작성

141) 防衛省・自衛隊, 令和4年版 防衛白書(검색일: 2022.11.10.)

나. 군사력 강화계획

일본은 자위대의 통합적 운용 능력을 강화하면서 군사력 특히 해상보안 능력을 점진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특히 2022년은 일본은 자국의 방위정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국내 정책 정비를 가시화한 해였다. 2022년 7월 공개한 2022년 방위백서에서는 ‘반격 능력’이 처음 명시되고, 방위비를 GDP의 2%까지 증액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은 12월 16일 개최된 각의에서 채택된 3대 안보 문서, 즉 「국가안보전략」, 「국가안보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해상보안 청체제 강화에 관한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상보안능력 강화와 관련된 중점 분야로 ① 센카쿠 열도 주변의 영해 경비, ② 무인기 등을 활용한 해양 감시, ③ 테러나 재해 등 대규모·중대사안의 동시발생에 대한 대응, ④ 자위대 등 국내 외 관계기관과의 연대·지원, ⑤ 해양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해양조사 ⑥ 사이버 대책 등 업무 기반의 강화 등 여섯 개 분야를 제시했다.¹⁴²⁾

최근 방위백서에서는 현재의 안전보장환경의 주요 특징의 하나로 ‘하이브리드전’과 ‘그레이존 사태’를 들고 있다. ‘하이브리드전’은 국가 간의 군사적 경쟁에서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¹⁴³⁾ ‘그레이존 사태’는 국가 간 영토, 주권, 해양을 포함한 권익에 대한 경쟁에서 무력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상변경을 시도하거나 자국의 주장·요구의 수용을 강요하려는 행위가 나타나는 상황을 지칭한다.¹⁴⁴⁾ 일본의 방위·안전보장정책이 ‘평시, 그레이존, 유사시에 해당하는 사태’의 구분에 따라 결정¹⁴⁵⁾되기 때문에, 상황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

142) 読売新聞オンライン(2022.12.16.)(검색일: 2022.12.17.)

143) 令和4年版 防衛白書, p. 1.

144) 令和4年版 防衛白書, p. 1.

145) 神保謙(2016), p. 31.

아울러 2022년 방위백서 처음 명시된 ‘반격 능력’은 극초음속 비행 무기와 변칙궤도로 이동하는 미사일 등 관련 군사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정비해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도입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무력공격이 발생한 시점은 적국이 무력공격을 착수한 때이지 무력공격으로 인해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상대의 무력공격이 시작된 후 일본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가 무력공격을 하기 전 공격을 하는 선제공격과는 다름을 재확인했다.¹⁴⁶⁾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전보장상 주목해야 할 국가로 중국, 북한, 러시아를 들고 있다. 중국은 군사력 증강과 일대일로상 국가에의 경제적 압력, 대만 문제로 지역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북한은 미사일 관련 기술의 급격한 진전과 핵전력 강화 방침, 납치 문제 등이 일본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¹⁴⁷⁾ 관련 문제에 대해 외교력·방위력·경제력·기술력·정보력의 총합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국가안보전략에서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제시했다. 이는 영역 횡단 작전능력 및 스탠드오프 방위능력¹⁴⁸⁾, 무인기를 활용한 방위능력강화, 반격능력 보유, 2027년도까지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와 보안을 위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 예산 수준을 현재 GDP의 2%에 달할 수 있도록 조치, 유사시 방위대신의 해상보안청 통제 및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연대 강화 등을 기반으로 한다.¹⁴⁹⁾

방위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과 수단을 제시하는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방위목표의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접근법으로 일본의 방

146) 令和4年版 防衛白書, p. 196.

147) 防衛省・自衛隊,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검색일: 2023.1.15.), pp. 8-10.

148) 레이더와 미사일의 성능 강화에 대한 대응으로, 침공하는 적을 사정권 밖의 위치에서부터 대처할 수 있는 방위 능력.

149) 防衛省・自衛隊,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검색일: 2023.1.15.), pp. 17-20.

위체제 강화, 미·일 동맹의 역지력 및 대처능력 강화, 동지국(同志國)과의 연대 강화를 명시했다. 특히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일곱 가지 중점 능력으로 ①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② 통합방공 미사일 방위능력, ③ 무인기 방위능력, ④ 영역횡단 작전능력, ⑤ 지휘 통제, 정보관련 기능, ⑥ 기동전개능력·국민보호, ⑦ 지속성, 강인성을 열거하고 있다. 이 일곱 가지 분야와 함께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체제를 정비해 상설 사령부를 창설하고 통합운영체제를 정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신속한 기동·분산 전개, 지휘 통제·정보 관련 기능을 중시한 체제 정비, 사이버를 중심으로 한 영역횡단 작전의 적용 등을 목표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방공능력, 정보전 능력,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등의 강화, 최소승선·무인화 추진, 수중전의 우세를 획득·유지할 수 있는 체제 정비를 세부 목표로 들고 있다. 항공자위대는 기동분산 운용,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등의 강화, 우주 이용의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 정보전 대응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동시에, 타국의 군사 활동 등을 파악하여 분석·발신하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방위력 정비계획은 보유해야 할 방위력의 수준과 달성 방안을 제시하는 중장기 정비계획이다. 상술한 국가안보전략과 국가안보전략을 기반으로 방위력 정비계획에서는 자위대의 체제 정비와 5년간의 방위비 총액 및 방위장비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위대의 능력은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시한 일곱 가지 중점 사항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확대 강화할 것을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2023년~2027년까지 약 43조 5천억 엔에 해당하는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¹⁵⁰⁾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향상을 위해 사정거리가 증가한 12식 지대함 유도탄과 도서 방위용 고속활공탄 등의 양산이 포함되어 있다. 통합 방공 미사일 방위능력을 위해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150) 防衛省・自衛隊,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검색일: 2023.1.15.), p. 3.

이지스시스템 탑재함, 조기 경계기 등을 정비 예정이다. 영역횡단 작전능력을 위해 위성체계 강화, 차기 방위통신위성 정비, 사이버 방호기재 기능강화와 육해공영역에서의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호위함, 초계기, 잠수함, 전투기 등의 추가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¹⁵¹⁾ 아울러 육해공 자위대의 개편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상설통합사령부를 창설하고 사이버 방위대를 신설했다. 특히 해상자위대는 기존의 호위대와 소해대를 수상함정부대(水上艦艇部隊)로, 함대정보·해양사업 및 대체지원·시스템통신대를 정보전 기간부대(情報戰基幹部隊)로 편재했다.¹⁵²⁾

또한 2022년 3월 17일 육해공 자위대의 공동 부대로 사이버 방위대가 창설되었다. 사이버 방위대 신설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이버 방호 기능과 함께 자위대 본부의 체제 강화 도모와 사이버 방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처, 방위성·자위대의 공통 네트워크인 방위 정보 통신 기반(DII)의 관리·운용을 담당하게 된다.¹⁵³⁾

〈표 3-10〉 방위력 정비에 따른 사업비 내역

구분	분야	사업비 (조 엔)	주요 사업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5	• 12식 지대함 유도탄 • 도서 방위용 고속활공탄 • 위성지상국 유지 강화 등
통합 방공 미사일 방위능력		3	•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등
무인기 방위능력		1	• 공격용 UAV • 체공형 UAV 등
영역횡단 작 전능력	우주	1	• 위성통신 인프라 정비 • SDA 위성체계 강화 • 차기 방위통신위성 정비 등

151) 防衛省・自衛隊,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검색일: 2023.1.15.), pp. 4-19.

152) 防衛省・自衛隊,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검색일: 2023.1.15.), pp. 21-22.

153) 防衛省・自衛隊, 令和4年版 防衛白書(검색일: 2022.11.10.), p. 207.

구분	분야	사업비 (조 엔)	주요 사업
	사이버	1	• 전 시스템에 대한 상시지속 리스크 평가 • 시큐리티 대책 • 클라우드 기반 정비 등
	차량, 함선, 항공기 등	6	• 스탠드오프 전자전 기기 • F-15 능력 향상, F-35A/B 취득 • 호위함 FFM, 초계기, 잠수함 등
기동전개능력, 국민 보호		2	• 수송용 헬리콥터, 공중급유 · 수송기 등
지휘 통제, 정보관련기능		1	• 전자정보 수집기, 화상해석 · 분석용 데이터 수집 등
지속성 · 강인성	탄약 · 유도탄	2	• 훈련탄, 공대공 미사일, 어뢰 등
	장비품 등의 유지정비비 · 가동확보	9	
	시설의 강인화	4	• 기지와 주둔지의 재배치 · 집약화 • 방호성능 향상 등
방위생산기반의 강화		0.4	
연구개발		1	
기지 대책		2.6	
교육훈련비, 연료비 등		4	
합		43	

자료: 防衛省 · 自衛隊(2022.12.)(검색일: 2023.1.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한국

(1) 주요 군사력 현황

우리 군은 합동참모본부, 육 · 해 · 공군, 주한미군사령부를 바탕으로 연
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육군은 육군본부와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
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사령부, 미사일전략사령부, 동
원전력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병력은 약 36만 5천여 명,
전차 2,200여 대, 장갑차 3,100여 대, 야포/다연장 5,900여 문, 헬기 62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육군은 현재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미래 합동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부대를 개편하고 기동 및 타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기반의 부대 및 전력 구조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¹⁵⁴⁾

해군은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병력은 7만여 명이며, 전투함정 90여 척, 기뢰전함정 1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항공기 60여 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¹⁵⁵⁾ 해군은 향후 수중·수상·공중에서 각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기잠수함, 이지스급 구축함, 차기구축함, 차기호위함, 해상초계기, 해상 작전헬기 등을 확보하고 해병대는 다목적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 등 공지기동형부대로의 발전을 목표로하고 있다(〈표 3-12〉 참고).¹⁵⁶⁾

〈표 3-11〉 대한민국 해군 보유 전력 현황

구분	현황
병력	7만여 명(해병대 2만 9천여 명 포함)
전투함정	90여 척
상륙함정	10여 척
기뢰전함정	10여 척
지원함정	2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항공기	60여 대

자료: 국방부(2023), p. 48.

공군은 공군본부와 공군작전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병력은 6만 5천여 명, 전투임무기 410여 대, 공중기동기 50여 대, 헬기 50여 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공군은 최신예 전투기를 지속 확보,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도입 등으로 공중감시정찰 능력을 확대하며, 복합·광역·다층

154) 국방부(2023), pp. 47-48.

155) 위의 책, p. 48.

156) 위의 책, pp. 48-49.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표 3-13〉참고).¹⁵⁷⁾

〈표 3-12〉 대한민국 공군 군사력 현황

구분	현황
병력	6만 5천여 명
전투임무기	410여 대
공중기동기	50여 대
감시통제기	50여 대
훈련기	190여 대
헬기	40여 대
천궁/패트리엇	150여 기

자료: 국방부(2023), p. 49.

국방 분야 예산은 병력운영비, 전력유지비, 방위력개선비 세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력운영비는 군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전력유지비는 이미 획득한 무기체계 및 시설을 유지하고 운용 비용으로 국방부에서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방위력개선비는 군사력 건설을 위한 비용으로 방위사업청에서 편성·집행한다.¹⁵⁸⁾ 국방비는 2023년 57조 원으로 GDP 대비 2.54%이다.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보았을 때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GDP 대비했을 때는 유사한 규모로 유지하고 있다(〈표 3-14〉참고).

〈표 3-13〉 대한민국 국방비 증가 추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방비(천억원)	431.58	466.97	501.53	528.40	546.11	570.14
GDP 대비 국방비(%)	2.27	2.43	2.58	2.55	2.53	2.54

자료: 국방부(2023), p. 333. 본예산 기준

157) 위의 책, p. 49.

158) 국회예산정책처(2022), p. 3.

(2) 군사력 강화계획

2022년 12월 공개된 「'23~'27 국방중기계획」에서는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향후 5년간 33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방위력개선과 전력 운영에 집중한다고 밝혔다.¹⁵⁹⁾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은 위기 상황 발생 시 북 핵·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 위기 상황 발생 시 북 핵·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북한이 핵·WMD 공격 시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을 대량응징·보복해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 ‘대량응징보복’ 능력이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에서 방위력개선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2년 31%에서 2027년 36%로 늘린다고 명시했다.¹⁶⁰⁾

〈표 3-14〉 「'23~'27 국방중기계획」 재원

단위: 조 원, %

구분	'22	중기계획 대상 기간					
		'23*	'24	'25	'26	'27	계
국방예산	54.6	57.1	61.4	66.0	70.9	76.0	331.4
(증가율)	(3.4)	(4.6)	(7.5)	(7.5)	(7.3)	(7.3)	(6.8)
방위력개선비	16.7	17.0	18.5	20.7	23.7	27.5	107.4
(증가율)	(△1.8)	(2.0)	(8.8)	(11.8)	(14.2)	(16.1)	(10.5)
전력운영비	37.9	40.1	42.9	45.3	47.2	48.5	224.0
(증가율)	(5.8)	(5.8)	(6.9)	(5.7)	(4.2)	(3.0)	(5.1)

자료: 국방부 보도자료(2022.12.28.)(검색일: 2023.1.18.),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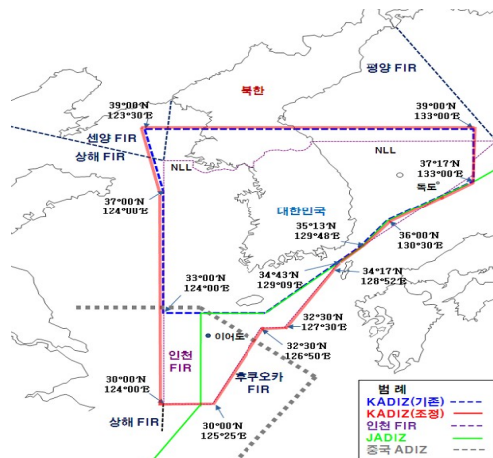
『2022 국방백서』에서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복합적 안보위협에 대한 통합·능동 방위가 가능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역량 확충, 국방혁신 4.0' 추진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강군 건설, 한미동맹의 발전과 우방국과의 연대를 통한 국방 협력 심화·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59) 국방부 보도자료(2022.12.28.)(검색일: 2023.1.18.), pp. 4-6.

160) 국방부 보도자료(2022.12.28.)(검색일: 2023.1.18.)

한편 2013년 11월 중국이 일방적으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를 선포한 데 대해, 우리 정부도 2013년 12월 우리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해 발표했다.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서 확장된 방공식별구역을 공표함으로써 적극적인 영유권 강화정책을 표방한 것이다. 중국 CADIZ 선포로 해당 해역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등 상공과 함께 우리 이어도와 센카쿠 열도 등 영유권 분쟁해역 상공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반발을 초래했다.¹⁶¹⁾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격 저지를 위해 설정했으며, 62년 만에 조정된 것이다.¹⁶²⁾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서는 동서해상의 방공식별구역은 그대로 두고 거제도 남쪽과 제주도 남쪽에서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하도록 했다.¹⁶³⁾ 결과적으로 이어도 수역 상공과 마라도 및 홍도 남방이 영공에 포함되었다.¹⁶⁴⁾

〈그림 3-2〉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자료: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2013.12.10.)(검색일: 2022.10.16.)

161) 반길주(2020), pp. 187-188.

16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3.12.9.)(검색일: 2022.10.20.)

16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3.12.9.)(검색일: 2022.10.20.)

164) 국방부(2013.12.8.)(검색일: 2022.10.16.)

2. 중국의 해양력 확장과 동북아 해양안보

중국의 해양력 팽창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는 동북아 해양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의 해양력 팽창은 곧 자국의 해양주권 강조로 이어지고, 이는 주변국과의 경쟁 및 마찰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강하고 현대화된 해군 건설을 위해 군비증강을 추진하면서 일본도 해상자위대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대만도 국방비 예산을 증축하고 있다. 미국도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역내에는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 발생 우려마저 생긴다.

안보 딜레마는 한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구한 행위가 상대국의 안보를 위협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상대국의 안보 증강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자국의 안보에 해를 끼치는 악순환의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존 헤르츠(John Herz),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s)와 같은 국제정치 학자들은 안보 문제가 가진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안보 딜레마가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해 왔다.¹⁶⁵⁾ 다시 말해 행위자인 국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서로에게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주의의 비관론적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다.

현실주의 정치학자인 스테픈 반 에버라(Stephen Van Evera)는 안보 딜레마의 악화가 낳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는데,¹⁶⁶⁾ 이는 현재 동북아의 해양안보 긴장 고조의 상황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에버라의 추론에 따르면, ①국가들은 더욱 기회주의적으로 팽창한다. ②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공격적인 의도가 없다고 해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팽창하여야 한다. ③취약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생존을 위해 팽창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격렬하게 저항한다. ④선제공격이 이점이

165) 민병원(2012), pp. 35-36.

166) 이근욱(2009), pp. 63-64.

증가한다. ⑤기회의 창과 취약성의 창이 커지며, 예방 전쟁의 위험 또한 증가한다. ⑥국가들은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으므로 ‘기정사실(fait accompli)’을 다른 국가에 강요한다. ⑦국가들은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으므로, 많은 경우 외교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 ⑧외교와 국방 정책을 둘러싸고 비밀이 많아지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오인과 오판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⑨다른 국가의 실수를 이용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피해로 이어진다. ⑩군비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⑪앞의 열 가지 효과는 상승작용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추론을 중국과 동북아 상황에 적용해 보면, 중국이 아무리 자국의 생존 혹은 발전을 위해 해양력을 팽창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타국의 저항을 초래하기 쉽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더군다나 중국이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 국가라고 본다면 그러한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역내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과정에서 양보와 협상보다는 오인과 경쟁에 노출되기 쉽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특히 주권·영유권 분쟁과 패권 경쟁이 격렬한 열점(熱點), 대만해협, 동중국해, 그리고 서해 해역에서 의도적 또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크다.

대만해협의 경우 특히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치열한데, 이 지역의 위기 발생 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연루 가능성도 크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비하여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로 확대하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반적으로 역내 안보 불안을 증대하고 확전의 위험성을 가중한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국가/지역은 국가 경제에서 해양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대만해협은 이 지역의 핵심 해상교통로이다. 따라서 대만해협의 위기 발생으로 인한 해협 봉쇄 시 한국의 안보 및 경제 피해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과 미국은 양 진영으로 블록화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해상훈련 증가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동맹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중 수교 후 안미경중(安美經中)과 같은 헤징(hedging) 전략을 추구해온 한국의 전략적 공간은 앞으로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협력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적 고려사항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제3절 동북아 해양영토 갈등과 분쟁에 대한 영향

1. 도서 영유권 갈등과 분쟁

미·중간 전략적 경쟁은 직·간접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도서 영유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분쟁의 직접 당사자로 있는 일본과 조어도(釣魚島) 분쟁은 중국의 지역 세력 확장과 미·일 간 동맹 강화로 안보 긴장이 높아지고 분쟁 해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 간 남쿠릴열도 분쟁의 경우, 미·중이 직접 당사자로 개입하고 있진 않지만, 각 진영의 최우방국의 당사자로 있어 미·중 경쟁이 이 지역의 군사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 따른 세계질서의 재편이 조어도 분쟁과 남쿠릴열도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지역의 불확실성 증가와 안보 긴장 증가가 한국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본다.

1) 미·중 경쟁 속 불확실성 증가와 중·일 조어도 분쟁

(1) 중·일 조어도 분쟁 개요 및 현황

조어도(센카쿠(일본), 댜오위다오(중국))는 동중국해에 있는 여덟 개의 무인도서로, 다섯 개의 섬과 세 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섬과 암초로 이루어진 조어도 제도는 1971년 오키나와 반환협정 이후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 조어도 제도가 중국의 역사적 고유 영토로 1895년 청일전쟁 패전 이후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일본에 일시 할양하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인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⁶⁷⁾

〈그림 3-3〉 조어도 위치



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검색일: 2023.2.18.)

조어도에 관한 양국의 기본 입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은 조어도 제도가 중국의 역사적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역사적 사료로 1534년 진간(陳侃)의 ‘사류구록(使琉球錄)’, 1561년 호종헌(胡宗憲)의 주해도편(籌海圖編)의 ‘연해산사도(沿海山沙圖)’, 1756년 주황(周煌)의 ‘류구국지략(琉球國志略)’, 1802년 이정원(李鼎元)의 ‘사류구기(史琉球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조어도 제도가 1885년

167) 조어도 제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동북아역사재단(검색일: 2022.9.24.); 신정화 (2021), pp. 49-51; 이석우 · 박영길(2012), pp. 178-180 등 참조.

오키나와현의 조사가 실시되기 전까지 무주지였음을 주장하고, 따라서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 이론에 따라 1895년 이 지역을 오키나와에 편입시킴으로써 일본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조어도 제도가 청일전쟁의 시모노세키조약의 결과로 편입된 것이 아니고, 당시 관습국제법인 무주지 선점 이론에 따라 우선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으며, 시모노세키조약은 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조어도 제도에 대한 양국의 기본 입장과는 별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의 성장은 조어도 영유권 분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미국이 조어도 제도를 약 20년간 관할하고, 일본이 실효 지배를 시작한 1971년부터 오키나와 반환협정 이후 1990년까지 중국과 일본은 양국의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해 조어도 제도 문제를 유보하는 데 합의하였다.¹⁶⁸⁾ 이러한 조어도 제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유보 기류는 2010년까지 이어졌는데, 이는 당시 중국이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를 거치면서 국제사회로의 진입 확대를 위해 국제정치적 쟁점을 전략적으로 회피하는 ‘도광양회’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지역을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일본 또한 지역 분쟁 문제를 조용히 관리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표 3-15〉 중국 해경선의 조어도 주변 접속수역 진입 현황

단위: 연, 척, 일

구분	2021	2020	2019	2018	2017
진입척수	1,222	1,161	1,097	607	696
진입일수	332	333	282	158	171

자료: 한국국방연구원(2022b), p. 5 참고하여 저자 편집

168) 1971년 오키나와 반환협정 당시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조어도 제도가 일본의 영토로 반환되는 것에 대해 중국의 영토주권 침범이라고 항의하였으나, 1978년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교섭에서 조어도 영유권 문제를 유보하는 데 동의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동북아역사재단(검색일: 2022.9.24.); 신정화, 앞의 책, pp. 51-52 참조).

그러나 중국은 후진타오 시기를 거치면서 도광양회 중심의 정책을 ‘유소 작위(有所作為)’로 변경하고 국제사회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 행동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하나로 중국은 2011년 국가 핵심이익 중 하나를 영토 수호로 설정하고 점차 조어도 제도 영유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0년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충돌 사건에서 중국이 보인 일련의 조치는 조어도 제도에 있어서 중국이 유소작위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¹⁶⁹⁾ 더불어, 중국은 일본이 조어도 제도를 국유화하는 2012년 이후 자국 해경선이 조어도 주변 해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중국은 이후 시진핑 주석 시대에 들어서며, 국가 핵심이익을 보호하고 달성하는 것에 국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한때 조어도 제도를 둘러싸고, 중·일 간 군사적 대립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2013년 중국 해군의 군함이 동중국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헬리콥터에 레이더를 조준한 사건, 같은 해 중국의 무인기가 조어도 제도 상공으로 진입한 사건, 그리고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사건 등은 조어도 제도 및 동중국해에서 중·일 간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2013년 중국이 조어도 제도를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선언한 것 또한 양국 간 외교적·군사적으로 긴장 상황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2014년 양국은 이러한 긴장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조어도 제도 등 동중국해 영토분쟁의 관리 원칙에 합의하였다.¹⁷⁰⁾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조어도 제도 주변 해역의 중국 해경 및

169) 조어도 제도 영해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퇴거시키기 위해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선체 충돌을 실시하고 중국 어선 선장 등 15명을 체포 및 연행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양국 간 각료급 이상의 교류 및 항공교섭을 중지하고, 양국 간 동중국해 공동개발 교섭을 중단하였으며, 일본 나라시에서 개막된 APEC 관광장관 회의에 불참하는 등 조어도 제도에 대한 자국의 입장과 의사를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대일본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조어도 제도의 2010년 중·일 선박 충돌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조양현(2010), p. 19 참조).

170) 이러한 원칙에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분쟁 해결, 위기관리, 예측 불가능한 사태의 회피 등이 있다(원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국방연구원(2022b), p. 7 참조).

해군 소속 함정의 활동이 증가하였고, 2018년, 2020년, 2021년에 중국 해군 잠수함이 잠항 활동을 실시하면서 양국 간 긴장은 지속되고 있다.¹⁷¹⁾

최근 중국은 이러한 군사적 긴장 조성 외에도 이들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조어도 제도 주변 해역에서 일본의 실효 지배와 관계없이 조어도 제도가 중국의 영토인 것으로 간주하여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조어도 제도 주변 접속수역에서 활동하는 중국 해경선을 감시하기 위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가 경비활동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중국 해군함정이 일본 항공기의 중국 영공 침해를 주장하며 퇴각을 경고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2020년에는 중국 해경선이 조어도 제도 주변 해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일본 민간 어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퇴각을 요구하며 추격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¹⁷²⁾ 이러한 중국의 행위는 조어도 제도를 중국의 영토로 기정사실화하고 일본의 실효적 지배와 관계없이 자국의 영토에 관한 주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양국 간 실질적 분쟁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고조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2) 조어도 지정학적 가치

조어도 제도는 그 지리적 위치와 주변 해역 자연 자원을 고려할 때, 중국과 일본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지정학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지리적 위치상 조어도 제도는 중국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관문(關門)에 있다. 중국 해군은 서태평양 진출 시 조어도 제도와 오키나와 사이의 해협을 많이 활용한다. 2021년 일본 방위백서에 의하면, 중국 해군은 2017년에 이 해협을 17회, 2021년에는 12회 통과하였다. 또한 조어도 제도는 중국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미군의 진입을 차단하는 최후 방어선인

171) 위의 책, pp. 4-8.

172) 위의 책, pp. 8-9.

제1도련선상에 있어 이 지역의 통제권을 상실할 경우 중국의 대미 방어전략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이 지역의 영유권 확보를 통해 미국의 최우방국으로 중국의 대만위협, 서태평양 확장 등을 견제하고 미군의 동중국해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조어도 제도는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 외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조어도 제도 주변 해역의 해저에는 다량의 석유, 가스 등 중요한 천연자원이 부존하고 있어, 영유권을 가진 국가가 이를 개발·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조어도 제도는 다섯 개의 섬과 세 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엔해양법협약상 섬은 최대 12해리 영해와 독자적인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조어도 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는 국가는 조어도 제도 다섯 개 섬을 기준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200해리 수역의 해저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에 있는 해양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¹⁷³⁾ 다만, 이들 섬 주변 대륙붕에 있는 천연자원의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른 대륙붕을 별도로 설정해야 하는 또 다른 법적 쟁점이 생긴다. 그러나 이들 섬을 자국의 영토로 가진다는 것은 주변 해저 상부수역 및 해저지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객관적 근거가 된다. 결국, 양국은 해저 천연자원 및 해저 상부수역 자원이라는 경제적 가치 때문에도 조어도 제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173) 다만, 현재까지 조어도 제도 다섯 개 섬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른 섬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다만, 이들 섬 중 주섬인 조어도는 면적이 3.5km²에 이르고 식수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변 수역에 풍부한 어장과 지하자원이 있어 인간의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하여 유엔해양법협약상 섬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좀 더 자세한 논의는 이석우·박영길, 앞의 책, pp. 183-184 참조).

(3)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조어도 제도 분쟁의 불확실성 증가

최근 미·중 간 전략 경쟁은 중·일 간 조어도 제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 다양한 불안요소를 야기한다. 특히, 동중국해 패권 확보를 위한 중국의 해양력 팽창 등은 중국 정부가 자국의 해경을 준군사화하도록 하였고, 이는 조어도 제도 주변 해역에서 중·일 간 실질적인 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미·중 간 대만해협 군사 긴장 고조는 지리적으로 대만과 근접한 조어도 제도에 군사적 위협을 전이할 가능성을 야기하고 있다.¹⁷⁴⁾

먼저, 미·중 간 동중국해 패권 경쟁과 관련하여, 중국은 2021년 2월 해경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자국 관할해역에서 필요시 자국 해경의 무기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조어도 제도를 자국의 영토로 기정사실화하고 자국 해경선의 조어도 주변 접속수역 진입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이러한 조어도 제도 주변 수역 진입이 일본에 의해 방해받거나 저지될 경우 실질적인 마찰 또는 분쟁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해경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법집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무경으로 소속되어 있어 군사조직에 가깝다. 중국 해경의 지휘체계 변경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초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무원 산하 공안부의 이중 통제를 받던 중국 해경이 중앙군사위원회의 단일 통제를 받게 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변경이 중국의 비상 상황과 전쟁 등 위기 상황에 중국 해경이 더 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해경의 정체성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관할해역에서 무기 사용이 가능하며, 군사조직에 소속되어 있어 중국 해경의 함정을 군함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조어도 제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 해경이 자국 해상 권익 보호를

174) 한국국방연구원(2022b), pp. 11-13.

위해 활동하는 것을 일본이 안보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표면상 중국 해경은 법집행기관이기에 해상자위대의 대응에 모호성을 준다. 일본은 2014년 중국의 무장집단이 조어도 제도에 상륙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상자위대 등이 대응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인 무력 충돌이 아닌 이상 해상보안청이 이를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해경은 조직구조와 장비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퇴역 해군함정을 해경 소속으로 전환하거나, 해경 함정의 크기와 수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해경의 준군사화 또는 정체성의 모호함은 조어도 제도 주변 해역에 긴장과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⁷⁵⁾ 다만, 현재까지 이러한 활동이 양국 간 직접적인 무력 마찰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일본 기시다 총리가 2023년 1월 방미 성명을 통해 조어도 제도 방위를 위한 미국의 군사 협력을 다시 확인하였고,¹⁷⁶⁾ 일본 정부가 중국의 해경선이 조어도 제도 영해에 침범할 경우, 경고사격 등이 가능하도록 정책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일본에서의 흉악범죄로 다루기로 결정한 것은 조어도 제도를 둘러싼 미·중 패권이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¹⁷⁷⁾ 결과적으로 미·중 간 동중국해 패권 경쟁은 조어도 제도를 둘러싸고 형식적인 면에서 중·일 간 정책적인 대립을 고조시키고 실질적인 분쟁 가능성 또한 가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미·중 간 전략 경쟁으로 첨예화된 대만해협 문제 또한 조어도 제도 분쟁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을 중국몽 실현의 핵심적 과제로 언급하고, 미국 등 서방국의 대만 문제 개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특히, 최근 2022년 8월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시 중국은 대만해협 및 주변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175) 김석균(2018), pp. 1-2; 한국국방연구원(2022b), p. 13.

176) 한겨레(2023.1.14.)(검색일: 2023.3.20.)

177) 장혜진·조비연·이상국(2021), p. 8; 한국국방연구원(2022b), pp. 9-11.

실시하여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에 강경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으며, 대만의 독자적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무기 수출에도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해 왔다. 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 국가안보전략 등을 통해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을 지속할 것을 언급하며, 동맹국에게도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 참여하기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양국 간 군사 긴장은 2022년 10월 미·중관계위원회를 통해 양국 수장이 서로에게 축사를 보내면서 다소나마 완화되고, 향후 양국이 대만해협 문제 등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경쟁을 관리하는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2023년 2월 미국 영공에 진입한 중국 스파이 열기구 사건으로 인해 양국 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¹⁷⁸⁾

이러한 대만해협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과 함께 2021년 4월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해양권익 주장과 동중국해에서의 현상변경 시도를 반대하는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일본의 행동을 견제하기 위해 조어도 제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공세를 높여 중·일 간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이 미·일 동맹을 강조하면서, 대만해협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수록 중국은 일본과 미국을 동시에 견제하기 위한 지렛대로 조어도 제도 분쟁을 대만 문제와 상호 연계하여 대응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¹⁷⁹⁾ 결국, 대만해협의 미·중 간 전략 경쟁은 중·일 조어도 제도 분쟁에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데 일조하며 이들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78) 경향신문(2023.2.12.) (검색일: 2023.3.20.)

179) 이미 미국은 2014년 조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임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조어도 제도에서 중·일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결국 대만 문제가 미·중 간 군사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또는 조어도 제도에서 중·일 간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모두 미·중·일이 충돌하게 되는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다.

2) 강대국 군사 경쟁과 남쿠릴열도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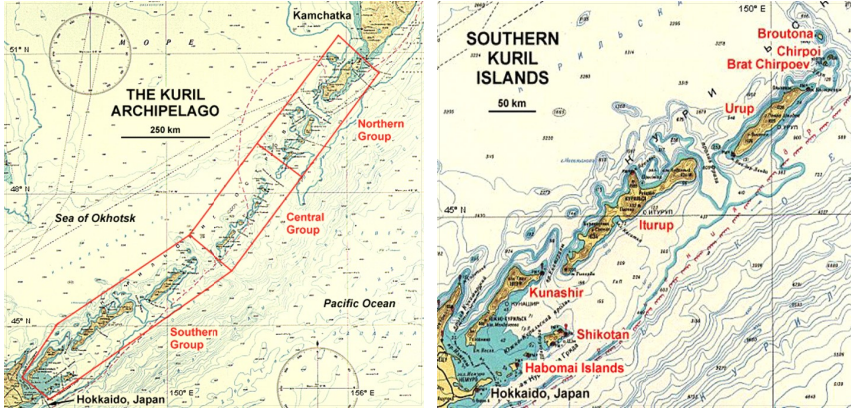
(1) 러·일 남쿠릴열도 분쟁 개요 및 현황

남쿠릴열도는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北海道)와 러시아 극동의 캄차카반도 사이에 있는 총길이 1,300km의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남쿠릴열도 분쟁은 이들 섬 중 하보마이군도, 시코탄, 쿠나시르(일본명: 쿠나시리),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 네 개 섬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유권 분쟁이다.¹⁸⁰⁾

남쿠릴열도에 대한 러·일 간 최초의 협정은 1855년 러·일 통상조약이다. 조약 체결 당시 양국은 이투루프섬과 우루프섬 사이에 경계를 설정하고 하보마이 군도를 포함한 우루프섬 이남의 섬들이 일본에 귀속됨을 확인하였다. 이후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을 통해 쿠릴열도 전체를 일본에 귀속하면서, 당시 공동으로 관리하던 사할린 지역을 러시아로 귀속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이후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러시아로 귀속시켰던 남사할린 지역을 1905년 양도받았으나 제2차 세계대전 말 러시아가 알타회담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남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차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참전을 결정하고, 이후 일·소 중립조약을 파기하면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한 후 러시아는 쿠릴열도를 침공하여 이 지역 전체를 자국에 편입하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면서 러시아는 쿠릴열도 전체와 사할린 전체 지역을 자국의 실효 지배하에 두게 된다.

180) 하보마이 군도는 또한 폴론스코고(일본명: 다라쿠), 유리, 아누치나(일본명: 아키유리), 하르카르(일본명: 하루카루), 탄필레바(일본명: 스이쇼), 시그날니(일본명: 가이가라)의 여섯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4〉 쿠릴열도와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자료: 현대송 · 최지현 · 현승수(2017), pp. 8-9.

반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쿠릴열도와 사할린 지역에 대한 권리 포기가 명기되어 있었는데, 일본은 1951년 강화조약의 쿠릴열도는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1945년 러시아의 쿠릴열도와 사할린지역 침공 당시 일본은 남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지역은 1951년 강화조약의 영유권 포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1951년 당시 소련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은 조약에서 명시한 영토 문제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남쿠릴열도 영유권 문제는 러·일 양국 간 협상을 통해 조약으로 해결해야 할 의제로 남게 된다.¹⁸¹⁾

이후 1956년 일본과 소련은 평화협정 체결과 남쿠릴열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사항을 공동선언으로 발표하였다. 이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은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협상을 지속하고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하보마이 군

181) 현대송 · 최지현 · 현승수(2017), pp. 10-23; 한국국방연구원(2022a), pp. 1-2; 배규성(2018), p. 57.

도와 시코탄을 일본에 우선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토 문제 해결에 관한 우호적 분위기는 1960년 일본이 미국과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무산되었다. 이후 소련은 일본과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1973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정상회담, 1976년 어업협정 체결 협상 등에서 남쿠릴열도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양국이 남쿠릴열도에 대한 영토 문제를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시기는 1991년 4월이다. 당시 소련은 일본과의 영토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꿔 남쿠릴열도 네 개 섬이 영토 획정의 대상임을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1991년 12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소련을 계승한 국가로서 1956년 일·소 공동선언 및 1991년 정상회담 공동선언 등 양국이 합의한 모든 문서와 법에 근거하여 양국 간 영토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합의한다. 이후 러시아는 남쿠릴열도 공동개발을 일본에 제안하였고, 또한 양국은 2000년까지 관련 영토 문제 해결을 포함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¹⁸²⁾

그러나 남쿠릴열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우호적 분위기는 푸틴과 메드베데프 대통령 집권기를 지나면서 2012년까지 다시 강경한 분위기로 선회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2010년 이투루프섬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남쿠릴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자국 영토주권을 재확인하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같은 해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소련 시기를 포함하여)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쿠나시르섬을 방문하였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력한 비난이 있었으나 이후 러시아 정부 지도자들의 이 지역 방문이 계

182) 영토 문제에 대한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었던 계기는 1991년 나카야마 당시 외무상이 소련 측에 제안했던 정책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나카야마 외무상은 남쿠릴열도에 대한 양국 간 문제에 대해 당초 일본의 입장이었던 영토 문제 우선 해결 정책을 변경하여 영토 귀속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개별 섬의 실제 반환 시기 및 형태는 추후에 합의하는 것으로 소련에 제안하였다(한국국방연구원(2022a), p. 4.).

속적으로 이어졌다. 비슷한 시기 일본 정부는 2009년 러시아의 남쿠릴열도가 불법점거라고 공식 결정하였고, 일본 중의원이 이 지역을 일본 고유 영토로 명시한 ‘북방영토 문제 등 해결촉진특별조치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¹⁸³⁾

2012년 이후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양국 간 강경 기조 분위기는 일본 아베 총리의 노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듯하였다. 2012년 양국 정상은 10년 만에 러시아에서 만나 남쿠릴열도 문제 해결 협상 등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2016년 남쿠릴열도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에 합의하였다.¹⁸⁴⁾ 이후 2018년과 2019년 양국은 ASEAN과 G20을 통해 정상회담을 갖고, 1956년 일·소공동선언을 토대로 2개 도서에 대한 우선적인 반환을 전제로 남쿠릴열도 전체에 대한 협상과 양국 간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도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대한 일본의 대러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완전히 중단되었다. 특히 러시아의 외무성은 2022년 3월 일본의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로 남쿠릴열도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하였다. 반면 일본은 러시아의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러시아의 선언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으나, 이후 러·일 간 남쿠릴열도 문제 및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은 진전되지 않고 답보하고 있는 상황이다.¹⁸⁵⁾

183) 한국국방연구원(2022a), pp. 4-5; 러시아가 이 시기 남쿠릴열도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주요 요인은 먼저 러시아가 남쿠릴열도의 군사·안보적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이 지역의 역내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현대송·최지현·현승수(2017), pp. 37-42 참조).

184) 이 새로운 접근법은 남쿠릴열도에 공동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영토 문제 교섭 또한 진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새로운 접근법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현대송·최지현·현승수(2017), pp. 50-59 참조).

185) 한국국방연구원(2022a), p. 8.

(2) 남쿠릴열도의 지정학적 가치

남쿠릴 해역은 군사안보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남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를 통해 북서태평양으로부터 사할린 등 러시아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관문에 있다.

〈그림 3-5〉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 지역(북방영토 문제 지역)



자료: 연합뉴스(2021.12.2.)(검색일: 2023.1.31.)

따라서 러시아는 남쿠릴열도 확보를 통해 러시아의 국경을 직접 보호하고, 유사시 러시아 극동지역을 통해 태평양으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운용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는 2015년 신해양독트린을 통해 남쿠릴열도가 러시아에서 가장 중시하는 해역 북극해와 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2010년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은 쿠나시르섬을 방문한 이후 남쿠릴열도 네 개 섬을 러시아와 분리할 수 없는 전략적 영토로 평가하고 이들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부관구 및

동부통합전략 사령부를 설치하여 남쿠릴열도를 전략적 지역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군사안보적 가치와 더불어 남쿠릴열도 주변 해역에는 풍부한 해저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천연가스, 석유, 비철금속, 수은, 금, 은, 탄화수소, 타이타늄, 철, 황 등 필수 에너지 자원과 고부가 해저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다. 특히 이투루프섬 주변에는 세계 최대 레늄 광산인 쿠드라브 화산이 있어, 전 세계 레늄의 약 50%를 공급하고 있다.¹⁸⁶⁾ 그 밖에도 이 지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점으로 세계 10대 어장 중 하나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쪽 원해에는 세계 4대 어장인 북서태평양 어장이 자리하고 있다.¹⁸⁷⁾ 따라서 이들 지역을 실효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 사할린주 지방정부는 남쿠릴열도를 매우 중요한 재정 수입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남쿠릴열도의 자국 주권을 강화하면서, 이들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군사시설을 이들 지역에 배치하고 있어 남쿠릴열도 분쟁을 통한 양 진영 간 위협의 전이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러시아는 쿠릴열도에 이동식 해안 방위 미사일 시스템인 바스티온 미사일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2022년 12월 시스템 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러시아 국방부는 이를 통해 태평양 함대 연안 경비대가 인접한 수역, 해협 지역 관리를 위해 24시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¹⁸⁸⁾

186) 현대송 · 최지현 · 현승수(2017), p. 38. 레늄은 항공우주 기술에서 초합금체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희귀 광물이다.

187) 조선일보(2010.11.8.)(검색일: 2023.2.18.); 현대송 · 최지현 · 현승수(2017), pp. 37-38.

188) 뉴시스(2022.12.7.)(검색일: 2023.2.19.); 한국국방연구원(2022a), p. 12.

(3) 미·일 동맹 강화와 남쿠릴열도

남쿠릴열도 분쟁에 있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영향은 다른 동북아 도서 영유권 분쟁에 비해 다소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향후 남쿠릴열도 분쟁이 진영 갈등으로 전이될 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중·러 군사 협력은 탈냉전 이후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러시아의 단순 협력국인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이 2000년대 이후 급성장하고,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양국 간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 본격적인 군사 협력이 시작된다. 양국은 2001년 ‘중·러 선린우호 협력조약’을 체결하여 전략적 협력을 위한 기초를 다졌으며, 이후 2005년부터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러 협력 관계는 2010년대 들어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고, 양국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 2012년 조어도 주변 해역에서 해상연합훈련을, 2015년에는 지중해에서, 2016년에는 남중국해에서, 2017년에는 동해와 오후츠크해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러시아 동부군관구 내 아홉 개 훈련장과 동해, 오후츠크해, 베링해 일대에서 대규모 전략기동훈련을 양국이 실시하여, 북서태평양 주변 해역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러 간 전략적 협력은 최근 심화 단계에 이르러, 에너지 경제 분야의 협력을 포함하여 군사기술 이전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¹⁸⁹⁾

일본 또한 최근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방위비를 확대하고 있다. 2022년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

189) 뉴스투데이(2022.10.7.)(검색일: 2023.2.19.); 뉴스투데이(2022.10.13.)(검색일: 2023.2.19.); 뉴스투데이(2022.10.14.)(검색일: 2023.2.19.)

평양 전략과 국가안보전략에 동참하면서 이를 지지하는 자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국가안보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을 채택하였다. 이들 전략과 계획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면서, 북한의 동북아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고, 러시아의 군사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의 방위비를 약 두 배로 확대하고 과거의 안보정책을 수정하여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에 미국은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일 동맹을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다.¹⁹⁰⁾ 이러한 중·러-미·일의 대립적 협력 관계가 당장 남쿠릴열도 분쟁에 결과적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남쿠릴열도의 군사 전략상 가치를 고려할 때, 양 진영 간의 대립이 가시적인 단계에 이르렀을 때 남쿠릴열도 문제 또한 관리 또는 해결해야 할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3) 소결

동북아 도서 영유권 갈등과 분쟁에 있어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미치는 영향은 도서의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하다. 조어도 제도 분쟁의 경우 강대국 전략 경쟁의 당사자인 중국이 직접 개입하고 있어, 중국의 발전 속도 및 확대 전략에 따라 분쟁의 면모가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경 세력의 확대와 대만해협군의 군사 긴장 고조는 조어도 제도 분쟁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즉, 동중국해에서 미국의 세력이 축소한 반면, 중국의 세력은 군사 및 경제를 포함하여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분쟁 당사자인 일본에 미국의 지렛대 역할을 강조하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남쿠릴열도 분쟁에 있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영향은 다소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남쿠릴열도의 군사안보상 가치를 고려할 때,

190) 연합뉴스(2022.12.17.)(검색일: 2023.2.19.)

최근 중·러 간 전략적 군사 협력의 확대와 미·일 간 동맹 강화 현상은 추후 남쿠릴열도 문제로 또는 이들 문제로부터 진영 간 군사안보의 위협으로 서로 전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해양관할권 갈등과 분쟁

중국은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2012년 제18차 당대회 보고에서 당대회 문건 최초로 ‘해양강국건설’을 국가발전전략 목표로 설정한 이후 동중국해를 포함한 동북아 수역에서 공세적 해양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¹⁹¹⁾ 오랜 기간 대륙국가로 존재하고 인식되어 온 중국이 해양으로의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대륙해양복합 국가로의 전환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¹⁹²⁾ 이 과정에서 중국은 동북아 수역에서 영유권 분쟁 등을 전개하면서 역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특히 한국 주변 수역에서 다음과 같은 일방적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1) 한국의 관할해역 내 중국의 해상 군사활동의 증가

최근 동북아 수역 특히 서해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¹⁹³⁾ 이는 과거 비정기적인 활동 위주였던 함정 활동이 정기적인 경비 활동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투입되고 있는 함정 또한 지원함, 정보함 위주에서 전투함 위주로 변경되어 운용되는 사실에서 살펴볼 수 있다.¹⁹⁴⁾

191) 이동률(2017), pp. 376-378.

192) 위의 책, p. 370.

193) 군사활동(military activities)은 일반적으로 정보수집, 연습, 시험, 훈련 및 무기실습을 포함한 군사적 선박, 항공기 및 장치의 운용을 의미한다. EEZ Group 21(2005.9.26.), pp. 5-6.

194) 중국은 전력화를 마친 라오닝 항공모함, 전략 핵잠수함 등을 서해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중국이 서해를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배학영(2020), pp. 87-88.

서해 가상 중간선을 넘는 중국 함정의 활동 횟수 또한 2016년 이후 급증하였다.¹⁹⁵⁾ 2014년과 2015년 약 30회 정도였던 것이 2016년에는 그 두 배인 60여 회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약 80여 차례로 증가하였다. 2018년 8월 말에는 약 80여 회 서해 중간선을 넘어 군사활동을 하였다.¹⁹⁶⁾

더불어 중국은 한국 해군 관할해역(MCA)에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그 출현 빈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¹⁹⁷⁾ 2016년에서 2020년 5년간 중국 군함이 한국 해군 관할해역으로 진입한 횟수는 910회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0여 회, 2017년 110여 회, 2018년 230여 회, 2019년 290여 회, 2020년 8월 170여 회이다. 2017년 사드 한반도 배치 이후 2018년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¹⁹⁸⁾

〈표 3-16〉 해군 관할해역에 진입한 중국 군함의 출현 횟수

연도	‘16	‘17	‘18	‘19	‘20
출현 횟수	110	110	230	290	170

자료: 세계일보(2020.10.16.) (검색일: 2023.1.5.)

또한 중국은 이어도 인근 해역 및 중첩수역 내에서도 해경조사선, 해양자원조사선 등을 통하여 해양과학조사 또는 유사조사 활동의 해역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어도 주변 수역에 중국 조사선이 63건(2015년~2020년 6월)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5)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 수역 일대에서의 군사 훈련 또한 늘여가고 있다. 2017년, 2018년 서해에서 중국의 군사훈련은 5회였지만 2019년 10회 미만으로 늘려졌고 2022년 8월 기준 서해 중첩 수역에서 군사 훈련을 10회에 달하였다. 연합뉴스(2022.10.3.) (검색일: 2023.2.17.)

196) 이러한 중국 군함의 서해 중간선 월선이 급증한 것에 대해, 정부에서는 “항공모함 라오닝함 등 중국 대형 함정이 서해상에서 훈련을 강화하는 게 주원인으로 분석된다”라고 보았다. 조선일보(2018.3.2.) (검색일: 2023.2.17.)

197) 해군 관할해역이란 한국 해군이 한반도 주변에 설정한 해양통제구역(MCA)을 의미한다.

198) 세계일보(2020.10.16.) (검색일: 2023.2.17.)

〈표 3-17〉 이어도 주변 수역에 나타난 중국 관공선의 출현 횟수

연도	'15	'16	'17	'18	'19	20.6
출현 횟수	17	28	8	1	6	3

자료: 조선일보(2019.2.27.) (검색일: 2023.1.5.)

중국 관공선이 한국 관할수역에 출현한 횟수가 증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군용기도 KADIZ 침범 등 활동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2015년까지는 이어도 남쪽의 한중 간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된 지역에서 활동하였지만, 2016년 이후에는 제주 남방의 한중 방공식별구역의 중첩수역을 경유하여 동해까지 장거리 비행을 실시하였다. 2017년에는 중국이 전략폭격기, 전자전 정보수집기 등을 이용하여 10여 대가 이어도 부근 및 제주 남동방까지, 다섯 대는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선상을 따라 동해까지 비행하였다. 2018년에는 울릉도와 대한해협, 포항에서 강릉까지 이동하였다.¹⁹⁹⁾

이와 같이 중국은 한반도 주변 해상과 상공에서 군사활동을 늘여가고 있다. 중국 관공선이 한반도 주변 수역에 등장하는 일은 과거에도 흔한 일이었으나 최근 들어 침범 규모와 영역, 횟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중국의 해양 정책을 고려한다면 한반도 주변 해양 활동의 확대는 중국의 국가적 차원의 의도와 특정 목적을 내포한 해양 확대 전략의 일부이므로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²⁰⁰⁾

2) 남중국해 문제의 동북아에 대한 영향

바다는 다양한 어족자원뿐만 아니라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해저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원의 보고라고도 불린다. 이는 곧 국가 산업 및 경제와도 직결되므로 국가들은 해양자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따

199) 조선일보(2019.2.27.) (검색일: 2023.2.17.)

200) 강승규 · 황상현 · 최구식(2018), p. 66.

라서 대부분의 해양자원 문제는 EEZ와 대륙붕, 그리고 관할권 중첩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행사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역시 한·중·일 간 중첩수역에서의 EEZ와 대륙붕을 두고 국가 간의 권리 확보 문제를 겪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국가 간의 이념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은 단연컨대 남중국해라고 할 수 있다. 남중국해를 두고 분쟁이 본격화된 것은 남중국해에 대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1968년 UN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on Asia and the Far East)에서 발간²⁰¹⁾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중국해는 다양하고 풍부한 천연자원과 어족자원이 매장된 지정학적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은 남중국해에 약 110억 배럴의 석유와 190조㎥가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였다.²⁰²⁾ 또한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가의 국민 중 77% 이상이 단백질 섭취와 생계를 위해 남중국해에서 어획된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의 연간 어획량은 전 세계 어획량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²⁰³⁾ 무엇보다 남중국해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교차로이면서도 중국이 세계로 뻗어나 갈 수 있는 주요 해상교통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40%와 수입 에너지의 90%가 남중국해를 통해 들어오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남중국해의 장악은 곧 동아시아 지역을 거머쥐는 것이므로 남중국해를 둘러싼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ASEAN 국가들이 함께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에 일방적으로 구단선을 설정하여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 함으로써 실효적

201) UN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Committee for Co-ordination of Joint Prospecting for Mineral Resources in Asian Offshore Areas(Report of the Sixth Session)

202)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2019.10.15.)(검색일: 2022.9.27.)

203) Asia & The Pacific Policy Society(2022.6.25.)(검색일: 2022.10.10.)

지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미국은 해당 지역을 장악해 나가려는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으며 남중국해는 오늘날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에 이를 공식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이 관여하는 남중국해 영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군사적 개입 의지를 명확하게 내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⁰⁴⁾ 이에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세력 확장을 저지함으로써 패권 유지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도,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국가도 아니지만 관습국제법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행함으로써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억지라고 응수에 나서고 있다.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부인하는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이후, 미국은 중국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맹비난하며 남중국해 판결 5주년 기념 성명에서는 ‘규범에 기반한 해양질서가 남중국해보다 더 위협받는 곳은 없다’라며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을 겁박하고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 확대를 계속하여 견제하고 있다.

3) 중국의 해양 시설물 설치 증가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 수역 내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역 내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시설물 설치에 한국과의 분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법적 의무 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산둥성 르자오로부터 동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서해에 팔각기둥 모양의 대형 구조물(선란 01호)을 수중에 설치하여

204) The New York Times(2010.4.23.)(검색일: 2010.10.1.)

연어를 양식하고 있다. 해당 구조물은 높이 35m, 팔면 합계 180m의 대형 원통형 철근 구조물로, 한국이 주장하는 가상 중간선 외측에 설치되어 바다목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3-6〉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설치된 선란 01호



자료: 서울신문(2022.5.2.)(검색일: 2023.1.5.)

문제는 연어 양식장의 위치이다.²⁰⁵⁾ 〈그림 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식장은 한중 간 관할권 주장이 중첩되는 잠정조치 수역 내에 있다. 관할권 중첩수역에서 최종경계획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연안국들은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잠정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신의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를 부담하며, 최종경계획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를 부담한다.²⁰⁶⁾ 그러므로 중국이 관할권 중첩수역에서 일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는 최종경계획정을 저해하지 아니할 자체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²⁰⁷⁾

205) 더불어 연어 양식장의 법적 지위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시설 및 구조물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해양경계획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제8항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들은 자체의 영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들의 존재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6)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 제83조 제3항

207) 2007년 가이아나-수리남 중재판정에서 재판부는 분쟁의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권리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일방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분쟁 기간 동안 분쟁수역에서 경제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쟁 당사국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약해서도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연어 양식장이 해양환경에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적 개발을 추진하여 타방 당사국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서해 잠정조치 구역 주변에 설치된 해상부표 또한 유사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중국은 2014년 백령도에서 서쪽으로 98km 떨어진 동경 124도 부근에 해양관측부표 한 개를 설치한 이후 2018년에는 한중 잠정조치 구역 부근에 여덟 개의 부표를 설치하였다.

해양관측부표는 원래 해류, 조류, 파도, 수온, 염분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기후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부유식 관측 장비로 운용 해양학 조사 목적으로 이용된다. 문제는 이 부표의 목적이 해양관측을 가장한 군사조사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있다.²⁰⁸⁾

〈그림 3-7〉 중국 해양관측부표 발견 현황(2022.8.24. 기준)



자료: 연합뉴스(2022.10.3.)(검색일: 2023.2.17.)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Arbitration Between Guyana and Suriname(Guyana /Suriname), Award(2007), para.47

208)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아태 지역에서 미국에 맞서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한·미·일 잠수함과 함정에 대한 감시와 경계목적으로 부표를 설치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조선일보 (2018.9.14.)(검색일: 2023.2.17.)

〈그림 3-7〉과 같이 현재 총 아홉 개의 부표(2022년 8월 24일 기준)가 서해 잠정조치 수역 내부 또는 그 주변에 설치되어 있다. 특히 동경 124도선을 축으로 설치된 6번, 7번 부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부표들은 잠정조치 수역 외부에 설치되어 있지만 중국이 자국 중심의 해양관할권을 확대하는 실례로 볼 수 있다. 중국 해군은 암묵적으로 124도선을 자신의 작전영역(AO: Area of Operation)의 한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표가 잠정조치 수역 내에 설치되었거나 124도선을 축으로 설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중국의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양국의 관할권 중첩수역에서 한국이 주장하는 중간선을 넘어 중국이 부표를 설치하거나 조사선을 통하여 해양과학 조사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이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관할권 침해가 될 수 있다.²⁰⁹⁾

4) 미·중 경쟁 속 안보 딜레마 가중

미국은 2019년 발간한 전략서에서 미국의 최우선적 전구는 인도-태평양 지역임을 서문에서부터 강조하며 그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²¹⁰⁾ 이는 과거 냉전 시기에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였던 것과는 달리 위협 인식이 증대하였음을 시사한다. 즉 미국이 중국을 자국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기존의 협력적 포용 전략에서 일종의 전면 견제 전략으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미·중 간 패권 경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209) 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중국과의 중간선 내측 수역을 한국의 관할수역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가상 중간선 내측 수역에 있는 부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해양 과학조사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210)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pp. 1-7.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은 각각의 힘으로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에 나서고 있다.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미·중 간의 편 가르기 경쟁과 블록화가 심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압력이 한층 부가되는 안보 딜레마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나라는 한쪽에 기울지 않는 균형적인 협력 방안과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5) 자원확보 경쟁 심화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주변 국가들은 자국 내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과 일본 모두 대부분의 에너지 확보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 정부는 미나미토리섬 주변 해저에 있는 희토류 채굴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 확보에 나서고 있다.²¹¹⁾ 중국 역시 미국과의 갈등 악화로 인한 해외 에너지 수입 원으로부터의 차단을 우려하여 에너지 자원 개발 가속화와 자국 내 에너지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미,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것을 고려하면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해양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수산 및 어족 자원, 광물 자원 등 다양하고 풍부한 양의 자원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대륙붕 해저에 석유 및 천연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보고서가 UN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에서 발표되었고 이에 우리나라가 해저 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하자 일본이 거센 반발에 나서면서 결국 양측 주장

211) 한겨레(2022.10.31.)(검색일: 2022.11.10.)

이 중복되는 해역에서의 자원 공동개발 합의 역시 대륙붕을 둘러싼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¹²⁾ 여기에 2008년 중국과 일본도 대륙붕 공동개발 협의를 완료하였는데, 현재는 아주 미약한 수준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언제든지 해당 해역에서의 자원 탐사 및 개발이 추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는 곧 한·중·일 간 다자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제4절 동북아 해상교통로 안보에 미치는 영향

1. 패권과 해상교통로 안보

과거 패권국은 모두 해양 제국들이었다.²¹³⁾ 패권국에는 국력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경제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 무역의 90% 이상이 이뤄지는 주요 해상교통로에 대한 안보 확보 문제가 중요한 과제이다. 해상교통로는 원유와 LNG와 같은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 그리고 해외시장으로의 수출품을 운송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제 동맥이다. 미 해군 제독 앨프리드 세이어 머한의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격언은 잘 알려져 있으며, 머한은 특히 해양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있어 해군력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상업 운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²¹⁴⁾ 따라서 주요 해상교통로를 따라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지배 또는 영향력 확보는 과거와 현재 패권국에 중요한

212) 일본은 1978년 협정 발효 이후의 국제법 상황이 자국에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JDZ 협정 이행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나서고 있으며 사실상 한일 간 공동개발은 답보상태에 있다.

213) 이춘근, 앞의 책, p. 64.

214) Mahan(1890)(검색일: 2023.2.1.)

과제였으며, 포르투갈과 영국제국과 같은 과거 패권국들이 전략요충지의 식민지화를 통해 주요 요충지와 해상교통로 안보를 확보했다면, 미국은 동맹과 막강한 해군력을 활용하여 세계 주요 항로 안보를 보장해 왔다. 특히, 미국은 세일 혁명을 이루고 천연가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미국의 주요 에너지 수입원인 중동지역의 안정과 해적 등 해상교통로에 대한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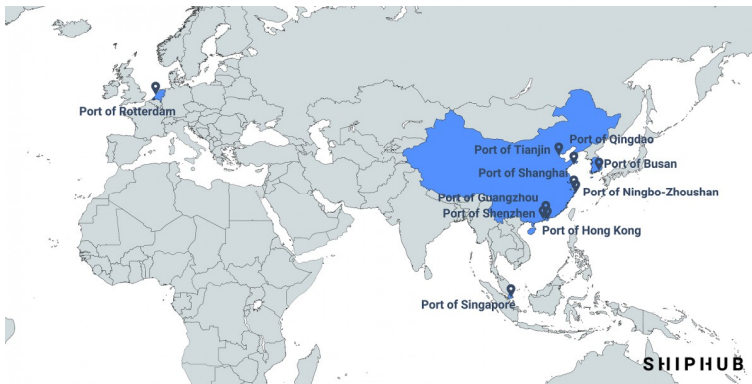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대두되고 있으며, 해양에서의 패권 경쟁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과 해협에 대한 지배권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해상교통로는 세계 물동량이 집중되는 주요 무역 중심지이자 최근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충돌하는 지역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 아래 육해상 경로를 통한 경제벨트 구축,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 제1도련선 및 제2도련선 정책 발표 등 중국의 해양력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항하여, 미국은 2011년 미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밝힌 이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목표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 아태지역 동맹국 간 군사동맹인 쿼드 결성, IPEF 발족 등 중국을 포위하여 중국의 해양력 확장을 통제하고자 하는 림랜드(Rimland)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본 장에서는 우선 동아시아의 주요 해상교통로와 위협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동아시아 해상교통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전 미소, 미·중 간의 해양패권 경쟁은 해상교통로를 중심으로 한 미·중 양국의 ‘점’-‘선’-‘면’ 전략의 동시다발적 경합과 충돌이다.²¹⁵⁾ 따라서 본 장에서는 미·중 간 ‘점’, ‘선’, ‘면’ 경쟁이 해상교통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15) 구민교(2017), p. 39.

2. 동아시아 주요 해상교통로와 안보 위협

2022년 물동량 기준 전 세계 10대 주요 항만은 유럽 로테르담 항만을 제외하고 모두 동아시아에 있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 무역의 중심지이며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해상교통로 안보 문제는 비단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주 대륙 국가들의 경제안보적으로도 중요하게 연결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지역의 해상교통로 안보는 동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안보와도 직결되어 있으며, 해상교통로에 문제가 생기면 글로벌 공급망도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

〈그림 3-8〉 2022년 세계 주요 항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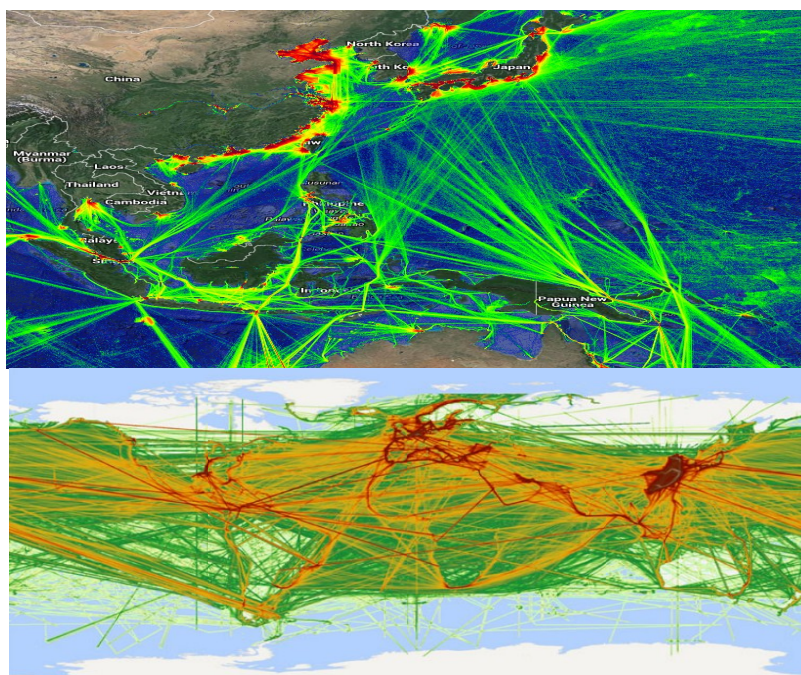
자료: Shiphub(2021.12.2.)(검색일: 2023.2.1.)

동아시아 지역에는 유럽과 미주 시장으로 향하는 다양한 해상교통로가 존재한다. 대한해협, 대만해협, 루손해협, 말라카해협 등이 동아시아의 주요 항로로 언급된다. 동북아 지역과 유럽시장으로 잇는 주요 항로는 동북아의 주요 항만에서 대만해협이나 루손해협을 통해 말라카해협을 통과한 다음 수에즈운하를 통하여 유럽시장으로 가거나 중동 페르시아만의 주요 시장을 연결하는 항로이다. 특히 이 항로는 유럽시장과 동아시아 간 주요

무역 수출입품이 운송되고, 중동지역과 동아시아 간의 주요 에너지원이 수출입되는 경로로 중요한 항로이다. 2021년 기준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었으며, 일본, 중국, 한국은 각각 세계 1위~3위의 LNG 수입국이였다.²¹⁶⁾

해상교통로의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²¹⁷⁾ 우선 자연적인 위협과 인위적인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인위적인 위협은 다시 전통적 위협 요인과 비전통적 위협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해상교통로의 안보에 대한 위협은 평시와 전시로도 구분될 수 있다.

〈그림 3-9〉 동아시아 선박교통 집중도



주: 아래 그림은 2015년 4월 기준이며, 빨간색일수록 교통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
자료: Panda(2016.2.3.)(검색일: 2023.2.1.)(위); Wu et al(2017), p. 73.(아래)

216) B.P.(2022), pp. 27-28, 36-37.

217) 해상교통로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에 대한 구분은 백병선(2010), pp. 92-93 참조

본 보고서는 미·중 패권 경쟁이 해상교통로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므로 태풍과 같은 자연적인 위협 요인, 해적과 같은 초국가적 비전통적 위협 요인 등은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주로 패권 경쟁이라는 구도에서 관련된 전통 및 비전통 위협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해상교통로의 위협 리스크가 가장 높으면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해상교통로는 말라카해협이다. 말라카해협은 세계 주요 병목지점 중 하나이자,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동과 유럽 시장으로 가기 위한 주요 관문이다.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의 규모는 호르무즈해협 다음으로 가장 높으며,²¹⁸⁾ 동시에 해적 공격으로부터도 취약하다. 하지만 최근 주변 국가들의 감시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해적 피해는 2015년 41건에서 2019년 8건으로 급감하는 추세이다.²¹⁹⁾ 또한,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 경쟁의 영향으로 위험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해상교통로는 대만해협이다. 대만해협은 과거 대만해협 위기 제1차~3차가 발생하는 등 아태 전략 측면에서 대만 정책을 접근하는 미국과, 대만을 주권문제로 접근하는 중국 간의 대립이 심화하는 점점이며, 지난해 8월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촉발된 또 한번의 대만해협의 위기로 인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해상교통로 안보상 리스크가 고조되어 있다.

〈표 3-18〉 동아시아 주요 항로와 위협 요인

항로	위협 요인
대한해협	자연재해, 한일 갈등
대만해협	대만 주권문제와 중국의 대만 수복 가능성
루손해협	태풍(여름) 등 자연재해
말라카해협	병목지점, 해적
남중국해	중국의 내해화 정책(9단선, 인공섬 구축 및 군사화)과 주변국 간의 갈등

자료: 저자 작성

218) EIA(2017.8.1.)(검색일: 2023.2.1.)

219) 아틀라스뉴스(2019.7.22.)(검색일: 2023.2.1.)

3. 패권 경쟁이 해상교통로 안보에 미치는 영향

1) 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중국은 2013년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구상을 발표한 이후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주요 거점항만에 투자하여 자국의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거점항만을 개발하고 운영권을 확보하는 차항출해(借港出海: 외국 항구를 빌려 바다로 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호주, 스리랑카, 몰디브 등에 장기 대여 협상을 완료하였다. 스리랑카의 경우 중국이 스리랑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한 함반토타 항만 건설사업에 조건부 차관을 제공한 바 있으며, 그 결과 2010년 항만이 개장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스리랑카 정부가 2017년 함반토타 항만사의 지분 70%와 99년간 항만조차권을 내주는 문서에 조인한 탓에 중국의 부채함정(debt trap)외교로 불리며 비난받고 있으며, 상업 항만이 중국에 의해 군사안보적 이유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의 하나로 주요 거점항만에 투자하여 중국의 경제적 관계를 공고화하여 경제적 영향력과 주요 해상로에 대한 중국의 통제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시 안보적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표 3-19〉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 중국이 조차한 항만

연도	지역	국가	항만	대여 기간
2015	남태평양	호주	Darwin	99년
2015	인도양	파키스탄	Gwadar	40년
2015	인도양	미얀마	Kyaukpyu	50년
2015	남중국해	말레이시아	Kuantan	60년
2016	인도양	지부티	Obock	10년
2016	남중국해	말레이시아	Melaka Gateway	99년
2017	인도양	스리랑카	Hambantota	99년
2017	남중국해	브루나이	Muara	60년
2017	인도양	몰디브	Feydhoo Finolhu	50년

자료: Ghiasy, Su, & Saalman(2018), p. 6 토대로 저자 보완

2) 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해양력 팽창을 통제하기 위해 림랜드 전략을 펼치고 있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해상교통로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말라카해협은 중국의 딜레마이다. 중국 에너지 수입의 약 80%가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는데 미국과 일본이 우방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이곳을 실제로 장악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반발로 봉쇄 등의 조치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태국에 일명 크라운하(Kra Canal)이라고 불리는 아시아 파나마 운하 건설 사업을 검토해온 것이 알려진다.²²⁰⁾ 2015년부터 태국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 2017년에는 태국-중국문화경제협회를 통해 중국 관계자들이 이 사업을 지지하고 중국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도 확보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했으며, 중국과 가깝지만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최근에는 환경에 부담이 되는 크라 운하 건설사업 대신 육로와 철로를 활용한 ‘태국육상다리(Thai Land Bridge)’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220) Lowy Institute(2021.9.22.)(검색일: 2023.2.1.)

〈그림 3-10〉 태국 크라 운하 개념



자료: Lowy Institute(2021.9.22.)(검색일: 2023.2.1.)

또한,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말라카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중동산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러시아 북극권 LNG 사업에 지분 투자하여 러시아 LNG 수입을 확대함과 동시에 북극항로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말라카해협-수에즈운하를 우회해서 유럽시장까지 갈 수 있는 대안로 개발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은 남방항로인 해상 실크로드를 일대일로 구상의 일부로 발표한 데 이어 2017년 북극권을 통과하는 빙상 실크로드 전략을 발표하면서 북극권 진출을 가시화하였다.

이외에도 기존 해양세력인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여 해상교통로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방안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통한 유라시아 육상로를 개발하는 데 투자하고 내륙국들을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벨트로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3) 면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1) 남중국해 내해화를 통한 통제력 강화

중국은 제1도련선 이내 행도의 자유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남중국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이후 제2도련선까지 군사력 투사 능력 증진을 시도하고 있다.²²¹⁾ 이를 목적으로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내해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구축한 패권체제에 대해 만족하지 않은 중국이 법률전을 통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9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남중국해에서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관한 정보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는 구상서에서 중국은 9단선이 표시된 지도를 첨부하며 그 해역에 대한 중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주장했다. 이후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간척사업 및 인공섬 건설을 추진하여 남중국해에 대한 실제 통제력과 권리행사를 공고화하고자 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미국의 제해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필리핀의 중재 재판소 제소를 지원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외에도 이곳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과 무해통항 등을 실시하는 등으로 대응하였다.

(2) 대만해협 위기 고조

대만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의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해 왔으며, 미국은 1979년 중국과의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대만과는 단교했지만 비공식적인 관계는 지속해 왔으며, 특히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대만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유지했지만, 트럼프 정부 이후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료성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의 대만 침공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평가하면

221) 구민교, 앞의 책, p. 56.

서 미국은 대만을 최근 비NATO 동맹이라고 언급하고 대만 관계법을 수정하는 등 대만을 적극 지원하기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8월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시위로 중국이 8월 4일부터 7일까지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만해협은 미·중 패권 경쟁의 화약고로 부각됐다.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대한 항의로 중국은 8월 4일부터 7일까지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한 상당한 차질이 빚을 것이 전망된다. 특히,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1950년대에 설정한 대만과 중국 본토 간 중간선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지난 40여 년 동안 중국은 이를 준수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만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이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의 해군력이 강화되면서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 소결

본 절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이 동아시아 해상교통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 주요 항만이 위치해 있고 해상 무역이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으로 이 지역의 해상교통로의 안보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 전 세계 국가의 경제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다. 하지만 2010년대부터 이 지역에서 해양력을 팽창하려고 하는 중국과 아태 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이 충돌하면서 동아시아의 해상교통로 안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아태 지역의 동맹들과 중국의 해양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린 랜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 또한,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육로를 개발하여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해상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방안과 동시에, 북극항로, 크라 운하 개발 등의 대안로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중국은 주요 해상교통로를 따라 주요 거점항만에 투자하여 주요 거점항만 중심으로 해상 통제권과 영향력을 확보하는 차항출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중국이 지역패권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동아시아의 지역의 주요 해상교통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기존 미국 중심으로 형성된 체제에 대한 현상변경을 시도할수록 이곳의 해상교통로 안보에 대한 위협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동시에 해상교통로는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중요한 경제동맥으로 공공재의 성격도 있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패권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는 한 미국과 중국 모두 동아시아의 해상교통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모두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04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경쟁 관계로 나타나는 세계질서 재편이 동북아 해양안보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패권질서에 대한 논의와 미·중 패권 경쟁을 고찰함에 있어서 특정 주제에 대한 미시적 관찰보다는 큰 틀에서의 흐름과 특징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미·중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 동북아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서 특히 한국에 대한 함의가 깊다고 여겨지는 세 가지 주제, 즉 전통적 의미의 해양안보, 해양영토 갈등과 분쟁, 그리고 해상교통로 위협에 대해 주된 내용과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세분화해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패권의 개념이 무엇인지, 패권국가의 전이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신흥 패권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해양정책, 이러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억제정책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미·중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 가지는 특징을 크게 탈세계화·신냉전의 진입, 전통적 의미의 패권적 지위 약화, 그리고 동아시아 역내 무력충돌 가능성의 심화를 들었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는 세계질서 재편이 동북아 해양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가 된다.

제3장에서는 먼저 본 보고서에서 상정하는 동북아 해양의 공간적 범위를 정의하고, 보고서에서 말하는 ‘해양안보’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세계질서 재편이 동북아 해양의 군사안보에 미치는 영향, 도서영유권 갈등과 분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해상교통로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세계질서 재편이 동북아 군사안보에 대해서는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역내 계획적 또는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2022년 12월 일본이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통해 적 기지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하고 5년 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2%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동북아 군사력 경쟁과 균형의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 많아 보인다. 세계질서 재편이 동북아 해양영토 갈등과 분쟁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중국이 팽창주의적이고 공세적인 해양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최근 적극적인 해상법 집행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제2절 동북아 해양안보에 대한 전망과 과제

미국은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유일한 도전국으로 간주하고, 경제적 제재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 또한 과거와는 달리 해양에서의 ‘중국몽’ 또는 해양굴기를 숨기지 않고 전략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미·중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 동북아 해양의 군사안보, 해양영토 갈등과 분쟁 및 해상교통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세 분야에 대한 전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해양의 군사안보에 관한 전망이다. 탈세계화에 맞추어 미·중 간의 진영 다툼이 심해지는 가운데 소다자 체제가 당분간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2022년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쿼드, 인태 전략, AUKUS의 내실을 추구하면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결속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도는 보통국가화를 지향하고 중국에 맞서길 원하는 일본에는 최상의 것이지만, 중국과 북한을 대면하는 한국으로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일본과 비교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 전개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역사적·지정학적 관점에서 일본의 군비 강화를 우호적 시각에서 볼 수만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해양에서 자강력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주변에서의 갈등과 분쟁 상황, 한국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전략 추구가 필요하다.

둘째, 동북아 해양영토 갈등과 분쟁에 대한 영향이다. 동중국해와 서해에서는 특히 중국으로 인해 주변국들과 갈등과 분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갈등과 경쟁이 직접적으로 해양영토 갈등과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항의한 바가 있고, 남중국해 상공에서 미국 초계기에 대한 중국 전투기의 초근접 비행과 미 군함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중국의 방해와 항의 등의 갈등 양상이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은 미·중의 세계질서 재편이 가져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이고 가시적 전망은 중국의 해양력 팽창과 공격적인 해양관할권 행사에서 비롯되는 해양영토 갈등과 분쟁의 심화 가능성이다. 중국은 양안 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아서 한국 및 일본과의 관할권 주장이 중첩하는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최대

200해리까지 관할권 행사를 해오고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국내법(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정책상 양안 사이의 가상 중간선을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관할권 행사를 자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2021년 제정한 해경법과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자국이 주장하는 관할해역에서의 법집행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중국 정부의 해양과학조사 활동은 한국의 영해에 인접해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공격적인 해상활동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만약 중국이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내에서 자원탐사 등의 활동을 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강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에는 공동대응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특히 중국의 팽창주의적 해양정책에 대해 국제법에 기반해서 단호히 대응하는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해양경제협정과 새로운 잠정약정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동북아 해상교통로에 대한 영향이다. 해상교통로는 동북아 국가들의 에너지 자원과 상품의 주된 수송로이므로,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해상봉쇄가 이루어지면 국가경제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하다. 제3장 제4절에서 살펴본 점-선-면 확보 경쟁 중에서 해상교통로는 ‘선’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선을 확보하기 위해선 점(거점항구들)과 면(남중국해, 동중국해, 태평양 등)에 대한 지배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경쟁과 마찰이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해 중국이 항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는 바다에서의 대립과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특히 중국으로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남중국해에 인공섬 건설을 완료하고 전력을 배치함으로써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력을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중국해에 전력을 쏟을 수 있다. 먼저는 조어도

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약화시키고 동중국해 석유·가스 자원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일본과 한국을 자극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해상교통로뿐만 아니라 해양 군사안보와 해양관할권 확보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안보와 해양영토 이슈를 포함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Erickson, Andrew S. & Martinson, Ryan D.(2022), 중국의 해양 그레이존 작전, 광대훈 역, 박영사.
- 강승규 · 황상현 · 최구식(2018), 중국해군의 서해 군사활동 증가 시사점 및 대응방안, 한국군사학논총, 7(2), pp. 65-95.
- 강철승(2019. 5. 3.), 미 · 중 무역전쟁의 영향과 한국 대응전략, 2019 한국무역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무역학회)
- 고위건(2018), 21세기 중국 해양전략에 관한 연구: 해양강대국 건설과 국제관계 변화를 중심으로(박사학위, 전남대학교 대학원).
- 곽수경(2018), 중국이 해양강국 전략과 중화주의-도서 분쟁과 해양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9(1), pp. 33-57.
- 구민교(2017), 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이 해군력 및 규범 경쟁, JPI 정책포럼, 203, pp. 6-15.
- 국방기술진흥연구소(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요약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 국회예산정책처(2022),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Ⅱ, 2022. 10.
- 길병옥(2020), 한국의 해양안보전략과 다자안보협력 증진방안, 한국 시베리아연구, 24(3), pp. 1-39.

-
- _____(2021), 경항공모함의 군사적 및 비군사적 효과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26(3), pp. 97-114.
- 김관옥(2022), 미국 트럼프정부와 바이든정부의 대중국 무역정책 비교: 왜 유사한 보호무역정책을 펴고 있을까?, 국제정치연구, 25(2), pp. 33-56.
- 김대륜(2021), 패권의 대이동: 세계사를 움직이는 부와 힘의 방정식, 웅진지식하우스.
- 김석균(2018), 중국해경, 군사조직으로 변신하는가?-3가지 중요 시사점, KIMS Periscope, 131,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김선재 · 김태호(2020),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연합(海上聯合, JOINT SEA): 한국 해양 안보에 대한 함의, KIMS Periscope, 190, pp. 1-4.
- 김용신(2022), 미중 전략 경쟁 하의 중국의 경제-안보 딜레마: 중국의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결합, 국제정치연구, 25(2), pp. 57-81.
- 김지용(2019), 세력전이와 해양패권 쟁탈전: 공공재 · 전환재 경쟁을 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12(2), pp. 85-114.
- 김진호(2020), 중국 해양 회색지대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안, 한국동북아논총, 25(2), pp. 81-100.
- 김태성 · 이상현(2018), 중국의 군사력 증강(強軍夢)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 한국의 안보정책방향과 군사대응전략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3(3), 한국동북아학회, pp. 89-110.
- 김태호(2019),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남사군도, 대만해협, 센카쿠/다오위다오 및 한반도, 대만연구, 4, pp. 1-28.
- 김하영(2017), 동아시아 지역 해양갈등과 한국에 대한 함의, 사회과학연구, 24(2), pp. 239-258.
- 김현수 · 왕가가(2022), 미중 간 남중국해 통항갈등이 한국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25(1), pp. 169-207.
- 김현욱(2020), 현 미중 경쟁 분석과 한국의 선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
- 노연상(2021), 우리나라 서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 조업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 12(8), pp. 132-149.
- 민병원(2012), 신(新)안보딜레마와 네트워크 국제정치-이론적 분석, 평화연구, 20(1),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pp. 31-69.

- 박성용·김창희(2015), 동북아시아 해양안보환경과 해양신뢰구축에서 한국의 역할, 한국동북아논총, 20(3), pp. 5-26.
- 박영준(2022), 일본의 항모보유 결정과 향후 해양전략 전망, 국제·지역연구, 31(1), pp. 1-29.
- 박창건(2019), 한일대륙붕협정의 외교사적 고찰과 미해결 과제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구축을 향하여, 현대정치연구, 12(1), pp. 177-206.
- _____(2021), 미중 해군력 경쟁의 특성과 안보적 시사점, 국방논단, 1852(21-20), 한국국방연구원.
- 박창건·윤석정(2022), 동아시아 해양질서 변동과 대륙붕경계획정: 202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와 중국 변수, 국제학논총, 35, pp. 123-151.
- 반길주(2020), 해양경계 모호성의 딜레마: 동북아 방공식별구역의 군사적 충돌과 해양신뢰구축조치, 아세아연구, 63(2), pp. 175-205.
- _____(2021), 중국의 투트랙 해양군사력 구비전략과 한국의 도전과제, 아세아연구, 64(1), pp. 349-384.
- 배규성(2018), 환동해 영토분쟁과 미국의 동맹전략: 쿠릴열도와 독도의 비교, 한국시베리아연구, 22(1), pp. 51-80.
- 배학영(2020), 중국 해양세력의 서해상 활동증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국방연구, 63(3), pp. 83-112.
- _____(2022), 미·중간의 지정학적 해양패권경쟁과 한국의 안보전략, 해양도시문화교섭학, 27, pp. 181-222.
- 백병선(2010), 한국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초국가적 위협의 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전략, 16(3), pp. 91-118.
- 백병선(2017),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분쟁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향: 주변국 해군력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71, 77-109.
- 손윤진(2022), 2022년 미국 국방예산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태평양역제구상(PDI)을 중심으로 -, 국방논단, 제1902호, pp. 22-23.
- 신경환(2022),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 변화와 패권 효용성 연구, 아시아연구, 25(4), pp. 1-14.
- 신정화(2021), 센카쿠열도 갈등과 일본의 대중 안보전략: '실질적 위협' 중국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 대한정치학회보, 29(3), pp. 49-67.

-
- 안슬기(2020), 시진핑(習近平) 시기 중국의 해군전략 특징 및 전략적 함의, 해양안보, 1(1), pp. 61-92.
- 유병준 · 정재호(2022), 미 · 중 패권경쟁시대 일본의 해양전략-‘해상자위대 전략지침’을 중심으로, 군사논단, 110, pp. 54-92.
- 유현정(2021), 중국 ‘해경법(海警法)’ 주요 내용 분석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245, 국가안보전략연구원, pp. 1-6.
- 유희복(2017), 신흥 강대국 중국의 국제질서 인식과 실천, 아태연구, 24(3), pp. 137-174.
- 윤석준(2020), 미 · 중 간 『군사력 평가 보고서』 발표 경쟁, 월간 KIMA, 32,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윤지원 · 배일수(2021), 인간안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에 대한 고찰, 전략연구, 28(2), pp. 219-243.
- 윤희령(2022), 중국의 해양굴기와 미중 신해양패권경쟁: 첨단 미사일 기술 발전과 공격-방어 균형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6(2), pp. 271-297.
- 이근욱(2009), 왓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한울아카데미.
- 이동률(2017),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57(2), pp. 369-403.
- 이상환(2022), 세계화와 탈세계화 그리고 국제관계의 변화, 정치 · 정보연구, 25(3), pp. 1-34.
- 이서향(2016),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미 · 중 관계 전망, 전략연구, 69, pp. 115-133.
- 이석우 · 박영길(2012),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과 자원공동개발, Strategy 21, 15(2), pp. 177-199.
- 이성우 · 민소영(2022), 2022 패권유지와 추격의 동아시아 대결구도, 경기연구원.
- 이승렬 · 배진식(2011), 동아시아의 해양안보환경과 해군력의 역할- 양분화이론과 진자모형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1(1), pp. 199-220.
- 이재형(2007), 중국의 해양전략, 황금알.
- 이정남(2017), 중국이 구상하는 세계질서 상(像): 중국내 국제정치학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7(4), pp. 121-162.
- _____(2018), 시진핑의 중국몽: 파스 시니카(Pax-Sinica)구상과 그 한계, 아시아연구, 61(4), pp. 165-192.
-

- 이진성(2021), 신시대 중국의 해양전략 분석과 전망, 군사논단, 108, pp. 153-177
- 이춘근(2016),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김앤김북스.
- 이흥정 · 임경한(2022), 미국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대중국 견제전략과 합의, 국가안보와 전략, 22(2), pp. 1-36.
- 임경한 외(2015),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북코리아.
- 임혜란 · 이영섭(2020), 국제정치경제와 동아시아, 율곡출판사.
- 장혜진 · 조비연 · 이상국(2021), 중국 해경법(海警法)의 주요 내용 및 안보적 함의, 국방논단, 1849(21-17), 한국국방연구원.
- 전재성, “2023년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대미 전략”(EAI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한국외교 2023 전망과 전략 1)
- 정광호 · 백주현(2021), 중국의 해양강국 구상과 ‘동방서공(東防西攻)’ 전략: 해양지정학적 관점에서, 전략연구, 83, pp. 37-73.
- 정안호(2020), 주변국의 해양안보역량 강화에 따른 대비방향, 한국국가전략, 5(3), p. 65-84.
- 정현욱(2018), 중국 경제책략의 정치경제적 분석과 사례 연구, 중국학연구, 86, pp. 329-360.
- 조양현(2010), 일 · 중 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과 동아시아 지역질서, 주요국제문제 분석, 2010-38, 외교안보연구원.
- 주은식(2022), 러시아 국가안보 전략 평가와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성과 평가, 전략연구, 87, pp. 7-52.
- 주재우(2022), 우크라이나전쟁 전후 국제질서, 미중관계와 우리의 대응전략, 전략연구, 29(2), pp. 119-154.
- 차도희(2012), 동아시아 미 · 중 해양패권 쟁탈전-미 · 중 해양력 세력전이와 천안함 피격사건을 중심으로, 북코리아.
- 최구식(2021), 중국 · 일본의 해양분쟁과 해군력 증강 비교(박사학위, 경남대학교 대학원).
- 최영찬(2022), 해상교통로-봉쇄의 유용성과 그 경제적 효과, 북코리아, 재인용: 해군미래혁신연구단(2022),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 해군미래혁신연구단.

-
- 최원기(2020),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아태전략 전망: 미·일·인도·호주 4자 협의체(Quad)를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최현호(2017), 중국 해상무력의 새로운 축...중국 해경과 해상민병대, 월간 국방과 기술, pp. 64-71.
- 하봉규(2011), 세계 권력 이동의 논리: 대륙적 불평등 발전에 대한 전략선택이론 적용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8집 3호, pp. 59-83.
- 하태영·김용환(2015), 최근 주변국 해군력 증강과 한국의 대응방향-해군력의 증강방향과 함정과학기술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67, pp. 165-193.
- 한국국방연구원(2022a), 세계분쟁정보: 남쿠릴열도/북방영토 분쟁, 한국국방연구원.
- _____ (2022b), 세계분쟁정보: 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 한국국방연구원.
- 한석희(2008), 중국의 魅力攻勢(Charm Offensive)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중-아세안(ASEAN)관계 강화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2(2), 국제지역연구센터, pp. 363-386.
- 한종환(2022),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해군의 역할에 대한 연구, 전략연구, 86, pp. 233-261.
- 현대송·최지현·현승수(2017), 러·일 간 남쿠릴 열도 분쟁의 최근 동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홍건식(2018),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성 정치: 일대일로, AIIB 그리고 패권정체성, 국제정치논총 제58집 1호 (2018), 99-146.

국외 문헌

- Allison, G.(2017),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 Trap?, Houghton Mifflin Harcourt
- B.P.(2022),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2
- Ghiasi, R., Su, F., & Saalman, L.(2018),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Security implications and ways forward for the European Union,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2),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 CRS Report(2020.8.),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 Kenneth, N. W.(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cGraw-Hill.
- Munro, R. H.(1992), Awakening dragon: the real danger in asia is from China, Policy Review, 62, pp. 10-17.
- The Department of Defense(2019),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 The White House(2022), National Security Strategy.
- _____ (2020.5.26.),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articles/united-state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검색일: 2022.10.11.)
- _____ (2022.2.11.), FACT SHEET: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2/02/11/fact-sheet-indo-pacific-strategy-of-the-united-states/>(검색일: 2022.10.13.)
- _____ (2022.4.5.), FACT SHEET: Implementation of the Australia – United Kingdom – United States Partnership(AUKU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4/05/fact-sheet-implementation-of-the-australia-united-kingdom-united-states-partnership-aukus/>(검색일: 2022.9.24.)
- _____ (2022.5.24.), Quad Joint Leader's Statement,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5/24/quad-joint-leaders-statement/>(검색일: 2022.10.13.)
- _____ (2022.6.28.),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G7 on 21st Century Challenges, including those Posed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PRC),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6/28/fact-sheet-the-united-states-continues-to-strengthen-cooperation-with-g7-on-21st-century->

-
- challenges-including-those-posed-by-the-peoples-republic-of-china-prc/(검색일: 2022.9.2.)
- _____ (2022.9.19.) <https://www.whitehouse.gov>, Fact Sheet: Rooding for a 21st-Century US-Pacific Island, September 19, 2022. (검색일: 2023.1.31.)
- Taipei Times(2010.6.26.), Japan extends ADIZ into Taiwan space, <https://www.taipetimes.com/News/front/archives/2010/06/26/2003476438>(검색일: 2022.11.15.)
- U.S. Navy, U.S. Marine Corps, & U.S. Coast Guard team(2020), Advantage at Sea: Prevailing with Integrated All-Domain Naval Power.
- U.S. Department of Defense(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United States Navy(2022), Chief of Naval Operations Navigation Plan.
- Wu, L. et al.(2017), Mapping Global Shipping Density from AIS Data, The Journal of Navigation, 70(1), pp. 00-00.
- 白笛(2012), 从有海无防到走向深蓝-中国的海洋权益问题, 祖国, 22, 中华爱国工程联合会, p. 31.
- 彭克慧(2017), 新中国海洋战略发展史, 人民出版社.
- 謝游麟(2017), 中共海軍戰略轉型之意涵與影響, 海軍學術雙月刊, 51(3), pp. 33-48.
- 鍾永和(2019), 中共海軍維權與協助執法之研究, 海軍學術雙月刊, 53(2), pp. 37-54.

인터넷 자료

〈국내〉

- 국방부(2013.12.8.), 한국 방공식별구역 조정안 발표, https://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id=mnd_020400000000&siteId=mnd&page=1&newsId=I_669&newsSeq=I_3483&command=view&parent=&findStartDate=&findEndDate=&findType=title&findWord=&findWriterName=&findOrganSeq(검색일: 2022.10.16.)

- 국방부 보도자료(2022.12.28.), 「'23~'27 국방중기계획」 향후 5년간 331조 4천억 투입, https://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sitelD=mnd&page=1&newsId=I_669&newsSeq=I_13168&command=view&id=mnd_020500000000&findStartDate=&findEndDate=&findType=title&findWord=%EC%A4%91%EA%B8%B0&findOrgnSeq=(검색일: 2023.1.18.)
- 경향신문(2023.2.12.), 미·중 충돌 부를 뺀 중국 '정찰풍선' 사태 전말, <https://m.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302120830021>(검색일: 2023.3.20.)
- 뉴시스(2022.12.7.), 러, 일과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에 미사일 배치 ... "동향 주시",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207_0002114195(검색일: 2023.2.19.)
- 뉴스투데이(2022.10.14.), [중·러 군사협력 강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함의] ⑥ 중·러 군사협력 심화단계(2020년대)와 발전 동인 분석,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21014500088>(검색일: 2023.2.19.)
- _____(2022.10.7.), [중·러 군사협력 강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함의] ④ 중·러 군사협력 초기 발전단계(2000년대),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21006500173>(검색일: 2023.2.19.)
- _____(2022.10.13.), [중·러 군사협력 강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함의] ⑤ 중·러 군사협력 성숙단계(2010년대),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21012500142>(검색일: 2023.2.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3.12.9.), 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정,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70937>(검색일: 2022.10.20.)
- 서울신문(2022.5.2.),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은 연어양식 보조시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02500192>(검색일: 2023.1.5.)
- 세계일보(2020.10.16.), “한반도 바다가 위험하다” 우리측 EEZ 넘나드는 중국 군함, <https://www.segye.com/newsView/20201016510284>(검색일: 2023.2.17.)
- 아틀라스뉴스(2019.7.22.), 아시아 해적의 소굴, 말라카 해협은?,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6>(검색일: 2023.2.1.)
- 연합뉴스(2022.10.3.), 中, 서해 중간수역 훈련 올해만 10회 육박...韓은 5년간 3회뿐,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3064700504>(검색일: 2023.2.17.)

-
- _____(2022.12.16.), “일본, 오늘 반격 능력 확보 결정...5년 뒤 방위비 GDP의 2%로”,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5147800073?input=1195m> (검색일: 2022.1.12.)
- _____(2022.12.17.), 미, 일본 안보정책 전환에 “미일동맹 강화·현대화” 환영,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6143053009>(검색일: 2023.2.19.)
- 조선일보(2018.9.14.), 韓·美잠수함 탐지? 중국, 한국쪽 서해에 대형 부표 9개 띄워,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4/201809140024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검색일: 2023.2.17.)
- _____(2010.11.8.), 동아시아는 지금 영토 분쟁 중,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08/2010110800538.html(검색일: 2023.2.18.)
- (2018.3.2.), 中, 서해 바다·동해 하늘 출몰... 美 보란 듯 노골적인 힘자랑,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2/2018030200258.html(검색일: 2023.2.17.)
- _____(2019.2.27.), 자기 앞마당처럼... 中군함 3척 또 동해 진입,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7/201902270023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검색일: 2023.2.17.)
- _____(2022.4.11.), <윤석준의 차밀> 중국의 남태평양에서 “신의 한수”, https://bema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158&num=6082(검색일: 2023.5.20.)
- 월간조선(2017.5.), 안보 위해서 중국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각오 보여야,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print.asp?ctcd=G&nNewsNumb=201705100037>(검색일: 2023.2.17.)
-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2013.12.10.), [한국정세] 한국 방공식별구역 조정안 발표, https://mex.mofa.go.kr/ca-ko/brd/m_5350/view.do?seq=1036081&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page=65(검색일: 2022.10.16.)
- 중앙일보(2022.3.29.), 美 “본토 방어 최대 위협은 중국”...역대급 국방예산 944조 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9225#home>(검색일: 2022.12.3.)
-

한겨레(2022.10.31.), '히토류 수입 의존' 일본, 해저 6천m 채굴 나선다... '탈중국' 목표,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65055.html>(검색일: 2022.11.10.)

한겨레(2022.12.16.), 군사대국으로 가는 일본...70여 년 만에 '적기지 공격 능력' 갖추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71950.html>(검색일: 2023.2.27.)

_____(2023.1.14.), 바이든, 적기지 공격 능력 "전폭지지"... 일, 군사대국화 날개,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75667.html>(검색일: 2023.3.20.)

K-stat 무역통계, <https://stat.kita.net/stat/world/major/KoreaStats02.screen>(검색일: 2022.1.12.)

VOA Korea(2020.7.3.), 미 상하원 군사위, 인도태평양 대규모 군사력 증강 계획 승인... "증증하는 중국 위협 견제",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congress-indopacific-deterrence/6032545.html(검색일: 2022.9.30.)

〈중국〉

Newtalk(2021.4.23.), 專論: 突破第一島鏈挑戰海上強權美國? 中共遼寧號航母演訓的海軍戰略分析, <https://newtalk.tw/news/view/2021-04-23/567654>(검색일: 2022.5.14.)

Washington Times(2005.1.17.), China builds up strategic sea lanes,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05/jan/17/20050117-115550-1929r/>(검색일: 2022.12.16.)

人民网(2013.7.23.), 中國海警局正式挂牌 設南海北海東海3個分局, <http://politics.people.com.cn/BIG5/n/2013/0723/c1001-22285781.html>(검색일: 2022.12.3.)

中华人民共和国自然资源部, <http://www.mnr.gov.cn/>(검색일: 2022.10.9.)

中国人大网(2018.12.24.), 关于发展海洋经济 加快建设海洋强国工作情况的报告, <http://www.npc.gov.cn/npc/c12491/201812/83131907fb234bba96edd84b6cffd1f9.shtml>(검색일: 2022.10.6.)

中国人大网(2021.1.22), 中华人民共和国海警法, <http://www.npc.gov.cn/npc/c30834/202101/ec50f62e31a6434bb6682d435a906045.shtml>(검색일: 2023.2.19.)

凤凰网(2019.6.11.), 多地谋划打造海洋强省新版图 多元化产业投资布局浮现, <https://finance.ifeng.com/c/7nQ7yOathYG>(검색일: 2022.10.8.)

〈일본〉

読売新聞オンライン(2022.12.16.), 海保強化へ重点6分野、政府決定…尖閣警備・自衛隊連携など,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21216-OYT1T50127/>(검색일: 2022.12.17.)

神保謙(2016), シームレスな安全保障体制への課題「グレーゾーン」事態からのエスカレーションを巡って, 安全保障政策のリアリティ・チェック, 公益財団法人 日本国際問題研究所.

防衛省・自衛隊,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 https://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pdf/security_strategy.pdf(검색일: 2022.11.15.)

_____, 令和2年版 防衛白書, わが国の主権を侵害する行為に対する措置, <https://www.mod.go.jp/j/publication/wp/wp2020/html/n31102000.html>(검색일: 2022.11.15.)

_____, 令和4年版 防衛白書, <https://www.mod.go.jp/j/press/wp/index.html>(검색일: 2022.11.10.)

_____, 令和3年版 防衛白書 資料5, 主要航空機の保有数・性能諸元,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21/html/ns0050000.html; 資料6, 主要艦艇の就役数,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21/html/ns0060000.html(검색일: 2022.10.15.)

_____, 令和4年版 防衛白書 資料編, <https://www.mod.go.jp/j/publication/wp/wp2022/html/shiryō.html>(검색일: 2023.1.15.)

_____(2022.12.), 国家防衛戦略について, <https://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strategy/pdf/strategy.pdf>(검색일: 2023.1.15.)

_____(2022.12.), 防衛力整備計画について, <https://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plan/pdf/plan.pdf>(검색일: 2023.1.15.)

- _____, 防衛省・自衛隊の人員構成, https://www.mod.go.jp/j/profile/mod_sdf/kousei/(검색일: 2022.11.10.)
- _____, 防衛白書, <https://www.mod.go.jp/j/press/wp/index.html>(검색일: 2022.11.10.)
- 日本国憲法(昭和二十一年憲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1CONSTITUTION>(검색일: 2022.11.10.)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Senkaku Islands,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senkaku/index.html>(검색일: 2023.2.18.)

〈미국, 영어〉

- Alina Kovalenko, Maria Morgunova, Victoria Gribkovskaia(2018), Infrastructure Synergy of the Northern Sea Route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Map-of-existing-and-developing-routes-included-in-Polar-Silk-Road-36_fig4_330643092
- Asia & The Pacific Policy Society(2022.6.25.), The truth behind China's fishing ban in the South China Sea, <https://www.policyforum.net/the-truth-behind-chinas-fishing-ban-in-the-south-china-sea/>(검색일: 2022.10.10.)
- BBC News(2019.8.25.), Is the US Still Asia's Only Military Superpower?,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49423590>(검색일: 2022.10.3.)
- CSIS(2023.1.9.),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url(검색일: 2023.1.16.)
- Defense News(2022.2.23.), Australia accuses China of using 'military grade' laser against P-8A aircraft, url(검색일: 2023.1.31.)
- EIA(2017.8.1.), Maritime chokepoints are critical to global energy security, <https://w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32292>(검색일: 2023.2.1.)
-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21. 4. 23.), <https://ecfr.eu/article/a-glimpse-of-the-future-the-ever-given-and-the-weaponisation-of-choke-points/> (검색일: 2023.2.1.)
- Girard, B.(2022.8.1.), China, US Woo Pacific Island Nations, The Diplomat, URL (검색일: 2023.1.31.)

-
- Global Times(2022.8.23.), Pointing fingers at China over Solomon Islands' suspension of foreign navies' visit shows Washington's deep insecurity: export, url(검색일: 2023.1.31.)
- _____ (2022.3.4.), Conducting joint drills in Fiji, US turns South Pacific into battleground to compete with China, url(검색일: 2023.1.31.)
- Japan Ministry of Defense, https://www.mod.go.jp/en/d_act/sec_env/ch_ocn/index_cn.html(검색일: 2023.2.19.)
- Jennings, P.(2022.5.10.), Handling of Darwin port lease a fiasco on both sides of politics, The Strategist ASPI, URL(검색일: 2023.1.31.)
- KOTRA(2021.9.17.), 2021년 중국 조선산업 정보,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00&CONTENTS_NO=1&bbsGbn=403&bbsSn=403&pNttSn=190578(검색일: 2022.10.6.)
- Lowy Institute(2021.9.22.), By land or sea: Thailand perseveres with the Kra Canal,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land-or-sea-thailand-perseveres-kra-canal>(검색일: 2023.2.1.)
- Mahan, A. T., Influence of Sea Power, 1890, https://www.ruhr-uni-bochum.de/gna/Quellensammlung/07/07_alfredtmahaninfluenceofseapower_1890.htm(검색일: 2023.2.1.)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2022.6.30.), Madrid Summit ends with far-reaching decisions to transform NATO, https://www.nato.int/cps/en/natohq/news_197574.htm?selectedLocale=en(검색일: 2023.1.3.)
- Panda, A.(2016.2.3.), East Asian marine traffic density, <https://twitter.com/nktpnd/status/694679121734045696> (검색일: 2023. 1. 31.)
- Rahmat, R.(2022.9.7.), Beijing urges AUKUS signatories to cancel nuclear submarine co-operation, url(검색일: 2023.1.31.)
- Roland Berger(2022. 7. 25.), <https://www.rolandberger.com/en/Insights/Publications/Chokepoints-and-vulnerabilities-in-global-markets.html> (검색일: 2023.2.1.)

- Schlumberger, O.(2017.12.6.), Authoritarian Regimes, Oxford Handbook Topics in Politics, <https://academic.oup.com/edited-volume/41327/chapter/352327108>(검색일: 2023.2.19.)
- Shiphub(2021.12.2.), <https://www.shiphub.co/top-50-seaports-2022/>(검색일: 2023.2.1.)
- South China Morning Post(2021.6.17.), China launches Fujian, PLA Navy's 3rd aircraft carrier, <https://www.scmp.com/news/china/military/article/3182032/china-launches-fujian-pla-navys-3rd-aircraft-carrier>(검색일: 2022.12.12.)
- _____ (2021.11.19.), South China Sea: 300 Chinese 'maritime militia' vessels in Spratly Islands at any time, says US report,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156720/south-china-sea-300-chinese-maritime-militia-vessels-spratly>(검색일: 2022.12.19.)
- Taipei Times(2010.6.26.), Japan extends ADIZ into Taiwan space, <https://www.taipeitimes.com/News/front/archives/2010/06/26/2003476438>(검색일: 2022.11.15.)
- The Economic Times(2022.1.4.), A powerful Chinese navy ready to flex its muscles,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defence/a-powerful-chinese-navy-is-ready-to-flex-its-muscles/articleshow/88661655.cms?from=mdr>(검색일: 2022.8.5.)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2022.7.27.), If the US ignores the Pacific, China will step right in, url(검색일: 2023.04.20.)
- _____ (2022.9.28.), Biden's Cautious Foreign Policy Is Imperiling the United States, url(검색일: 2023.04.20.)
- _____ (2022.3.26), China and Solomon Islands Draft Secret Security Pact, Raising Alarms in the Pacific, url(검색일: 2023.04.20.)
- The World Bank Data,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E.EXP.GNFS.ZS?end=2021&start=1960&view=chart> (검색일: 2023.2.27.)
- Trading Economics, Japan Exports by country, <https://tradingeconomics.com/japan/exports-by-country> (검색일: 2023.1.12.)

U.S. Department of Defense(2021.11.2.),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 Annual Report to Congress, pp. 1-192.

(2022.10.27.), DOD Releases National Defense Strategy, Missile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s, <https://www.defense.gov/News/News-Stories/Article/Article/3202438/dod-releases-national-defense-strategy-missile-defense-nuclear-posture-reviews/>(검색일: 2022.11.30.)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2019.10.15.), South China Sea, https://www.eia.gov/international/analysis/regions-of-interest/South_China_Sea (검색일: 2022.9.27.)

USNI News(2022.7.26.), UPDATED: Navy's Force Design 2045 Plans for 373 Ship Fleet, 150 Unmanned Vessels, <https://news.usni.org/2022/07/26/navys-force-design-2045-plans-for-373-ship-fleet-150-unmanned-vessels>(검색일: 2022.9.24.)

국제판례

Arbitration Between Guyana and Suriname(Guyana/Suriname), Award(2007).

회의 자료

EEZ Group 21(2005.9.26.), Guidelines for Navigation and Overflight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cean Policy Research Foundation(검색일: 2023.2.17.)

국내법령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2017.3.21., 법률 제14605호).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2년

01	선박투자 가치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 연구	박성화
02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 예약시스템 가격결정 모형 연구	서정용
03	연안재해 대응을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정지호
04	탄소중립이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분석 연구	권장한
05	수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조현주
06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상원
07	MZ세대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해양관광 추진방안 연구	최일선
08	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도입방안 연구	심성현
09	행위자기반 해양공간계획 시뮬레이션 개발 연구	조성진
10	항만분야 탄소중립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안승현
11	탄소중립 시대 양식산업 대응전략 연구 - 육상 어류양식을 중심으로 -	마창모
12	수산물식품산업의 탄소중립 대응방안 연구 - 가공업을 중심으로 -	김지연
13	해양환경보건정책 도입방안 연구	박수진
1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컨테이너 해운산업 대응방안 연구 -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	최건우
15	항만분야 공공갈등 관리방안 연구	김세원
16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국제물류 분야 대응방안 연구 - 전기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	권보배
17	항만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수영
18	클러스터 혁신을 통한 선박관리업 발전방안 연구	허성례
19	수입수산물 예방적 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 - IUU 수산물을 중심으로 -	안지은
20	양식수산물 유통 빅데이터 구축방안 연구	이기영
21	글로벌 혁신성장을 위한 신남방·신북방 정책 연구 - 신남방 지역 ICT산업 가치사슬 변화에 따른 물류 공급사슬 대응방안	최나영환

2021년

01	시민참여형 해안돌봄 정책 도입방안 연구	정지호
02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선박 운항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김보람
03	여성어업인 노동정책 방향 연구	홍혜수
04	순환경제 시스템을 활용한 어업폐기물의 자원화 방안 연구	고동훈
05	1conomy 시대, HMR 시장 확대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전략 수립 연구	마창모
06	AIS 데이터 기반 해상교통 안전 평가모델 개발 연구	황선일
07	항만 에너지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로드맵 구축 연구 - 부산항 신항 전기에너지 소비를 중심으로 -	김근섭
08	해양분야 리빙랩 활성화 방안 연구	좌미라
09	빅데이터의 연계·활용을 통한 선박의 배출량 산정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안용성
10	해양공간계획 집행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최희정
11	수산식품산업 푸드테크 환경분석 및 적용전략 연구	이상건
12	AIS데이터기반 해상물동량 추정 연구	황수진
13	항만부문 정책의사결정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이기열
14	항만 컨테이너 물류 프로세스 디지털화 모형 연구	서정용
15	해양수산 분야 국제산업연관표 구축기반 연구	정수빈
16	해양수산 과학기술 정책평가모형 연구 - 해양수산 R&D를 중심으로 -	전형모
17	글로벌 경제위기와 해운산업 대응체계 연구	박성화
18	항만산업 경기진단체계 구축 연구 - 경기동행지수 개발을 중심으로 -	김성아
19	전국 무역항 부두 분류 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수영
20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글로벌 지속발전방안 연구 - 新해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제화 연구(5차년도) -	박한선
21	수소에너지 거점 구축을 위한 항만의 대응방안 연구	신수용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2년

01	항만의 탄소중립 이행·관리 표준안 연구	안용성
02	매립지 소유권 분리 제도화의 이해관계 분석과 관리방안	윤성순
03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 에너지·곡물을 중심으로	조지성
04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해양수산 이슈와 대응 방안	윤인주
05	남극환경보호의정서 제6부속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박예나
06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생명자원 법령 정비 방안 연구	좌미라
07	우리나라 수산종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조현주
08	2050 신해양강국 미래비전 수립 연구	김민수

Ⅰ 2021년

01	해양환경산업 육성 방안 연구	한기원
02	선원의 인권 및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선원근로감독관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허성례
03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지역 해양축제 활성화 연구	최일선
04	회복탄력성 개념을 적용한 항만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김성기
0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항만에서의 대응방안 연구	최상균
06	크루즈산업 COVID-19 방역체계 구축방안 연구	황진희
07	한국형 선주사의 최적 운영방안 연구	고병욱
08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이호림
09	원양산업의 ESG 도입 기초 연구	윤미경
10	수상레저활동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홍장원
11	연안지역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_간척지·담수호 중심으로	정지호
12	스마트항만 구축에 따른 탄소저감 효과 연구 - 동력전환을 중심으로 -	김가현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2년

01	건화물선 시장 비용분석을 통한 해운시장 위험관리지표체계 구축	류희영
02	해상운임 예측모형 고도화 연구(Ⅰ)	황수진
03	IMO 시장기반조치 도입이 국내 해운기업에 미치는 영향	김한나
04	연안지역발전지수(CoDI) 개발 연구	황재희
05	CGE 기반 국제통상환경 변화의 해양수산부문 파급효과 분석	임병호
06	글로벌 수산부문 이미징 이슈 분석 모델 개발 연구	한기욱
07	양식 수산물 중장기 수급전망모형 구축 연구 - 굴을 중심으로 -	김철현
08	Network DEA를 이용한 물류기업 경쟁력 비교 분석 연구	황선일
09	해양수산 사업체 성과 및 효율성 분석 연구	김주현
10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한 양식 멧게 단수 추정방안 연구	천성훈
11	수입수산물과 국산 간의 대체관계 분석 연구 - 활·신선냉장품을 중심으로 -	박혜진
12	국내 컨테이너 해운기업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 방안 연구	전서연
13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Ⅰ) - 자동차, 석탄, 고철, 시멘트를 중심으로 -	최석우
14	해양수산 분야 미래 리스크 발굴 및 파급효과 분석 연구(Ⅱ)	김찬호
15	항만개발사업의 정책효과 적용방안 연구	이종필
16	국가 해양전략 기본구상 연구	정현욱
17	선박대기시간 예측모형 개발을 위한 방법론 연구	조아현
18	안전항만 구축을 위한 비용 산정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최상균

Ⅰ 2021년

01	해양수산 정책영향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김주현
02	해양교육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	이슬기
03	해양수산업 경기진단체계 기초연구 - 해운업을 중심으로 -	권장한
04	선박 기술진보를 고려한 탄소 배출량 추정 연구	최건우
05	서포트벡터머신(SVM) 기법을 활용한 해운시황 예측 연구	김병주
06	크루즈 여객 수요 전망 모형 구축 연구	안승현
07	디지털 공급사슬 물류정보통합 구축전략 연구(Ⅲ)	서정용
08	수출용 전복의 유통경로 분석 연구	이정필
09	인공지능기반 해상운임 예측 연구(3차년도)	황수진
10	인공신경망모형을 이용한 양식수산물 단수 전망에 관한 연구 - 김 양식을 중심으로 -	천성훈
11	해양수산분야 미래 리스크 발굴 및 파급효과 분석 연구	박광서

연구개발적립금연구 2022-03

세계질서 재편과 동북아 해양안보 영향

인쇄 2023년 4월 28일

발행 2023년 4월 30일

발행인 김 종 덕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락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디자인공감 Tel: 051-903-9909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

정가 15,000원